



김국신·여인곤·강한구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여인곤·강한구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인 쇄 2007년 12월 24일

발 행 2007년 12월 28일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동북아연구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 900-4300

(직통) 02) 901-2527

(팩시밀리) 02)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도서출판 늘봄 (02 2275-5326)

인 쇄 처 양 동 (02 2272-1767)

가 격 ₩8,500

© 통일연구원, 200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
전략 / 김국신·여인곤·강한구. — 서울 : 통일연구원, 2007
p. ; cm. -- (연구총서 ; 07-12)

참고문헌수록

ISBN 978-89-8479-423-8 93340 : ₩8500

349.42013-KDC4
327.73052-DDC21

CIP2007004061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I. 서론	1
II. 탈냉전기 미국과 일본의 안보관계	7
1. 미·일 안보협력의 이완	9
2. 미·일동맹 재정의 과정	18
3. 미국의 동아시아정책 추진 실태	22
III. 부시 행정부의 세계전략과 일본의 호응	29
1.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31
2. 고이즈미 내각의 적극적 편승전략	45
IV. 주일미군 재편 협상의 특징과 내용	51
1. 미·일동맹 재조정 협상과정의 특징	53
2. 미·일의 국익과 전략적 공동목표	58
3. 주일미군 재편 합의내용	61

○ **마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V. 미·일동맹 재조정 의의와 발전방향	71
1. 미·일동맹 변혁의 군사적 함의	73
2. 미·일동맹의 발전방향	89
VI.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105
1.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107
2.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134
VII.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147
1. 기본 방향	149
2. 세부 추진 방안	150
VIII. 결론	169
참고문헌	174
최근 발간자료 안내	183

표목차

<표 III-1> 2004년 주요 핵보유국의 전략핵 상황	33
<표 III-2> 일본의 유사법제관련법 체계	49
<표 IV-1> 미·일간 안보협력 위한 포괄적 메카니즘	55
<표 IV-2> 주일미군의 구성내용	61
<표 IV-3> 미·일간 주일 미군기지 재편 합의내용	66
<표 V-1> 일본정부가 설정한 자위대의 활동 목표와 운용 방향	81
<표 V-2> 일본 방위성의 주요 예산 투자 분야	85
<표 VI-1> 동북아 국가의 국방비와 병력	109
<표 VI-2> 동북아 4국의 극동지역 군사력	114

그림목차

<그림 IV-1> 미·일 공동전략 목표의 범위 및 내용	59
<그림 V-1> 주일 미군기지 재배치 예정도	75
<그림 V-2> 미·일동맹 발전방향과 새로운 아시아질서 구상 ...	90
<그림 VI-1> 미·일 대 중·러 양축과 세력구도	118

I

서론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은 일본의 무장해제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동서진영간 냉전이 시작되고 한국전쟁 발발하자 미국은 1951년 9월 일본과 『미·일 안보조약』을 체결하고 일본에 대한 군사적 안전 보장 제공을 약속하였다. 그 후 미·일 양국은 1960년 주일미군이 일본 이외에도 한반도 및 대만을 포함하는 극동지역의 방위임무를 위해 일본 내 기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동맹관계를 유지·발전시켰다. 그러나 냉전기 동안 양국의 안보협력은 미국이 일본 및 극동지역의 방위임무를 위해 일본 내 기지를 사용하는 한편, 일본은 미국의 정치적 지도력을 따르면서 주일미군에 대한 후방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기본구도를 견지하였다.

소련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된 미·일동맹은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공동의 적인 소련의 위협이 해소되자 새로운 공동 목표를 정립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양상을 보였다. 냉전 기간 중 소련과의 과다한 군비경쟁으로 인해 경제력이 약화된 미국은 일본에 대해 시장개방 압력을 증대함으로써 양국간 통상마찰이 심화되었고, 일본 국내에서는 ‘냉전의 산물’인 미·일 안보체제의 무용론(無用論)이 대두되었다. 미·일동맹이 이완되자 양국의 외교·안보전문가들은 탈냉전기 아·태지역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을 강조하여 미·일 안보체제의 재정비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당시 경제회복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한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는 실제로 미·일 군사동맹 강화보다는 미·중 관계개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동아시아 정책을 추진하였다.

2001년 보수 정권인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은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였다. 당시 새로 출범

한 일본 고이즈미(小泉純一郎) 내각도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반테러 세계전략을 적극 지지하며 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였다. 테러와의 전쟁이 이라크로 확대되자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를 가속화하며 2003년 2월부터 일본과 주일미군 재편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으로 구성된 미·일 안전보장 협의위원회(SCC)는 지구적 차원에서 미·일간 공통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일본의 안보역할을 확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청사진을 2005년 10월 제시하였다. 그 후 2006년 5월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는 주일미군 재편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시기를 정한 이정표(roadmap)를 제시하였다.

미·일동맹의 재편계획이 확정됨으로써 일본의 군사적 활동은 미국과의 협력아래 전 세계적 범위로 확대 되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미·일동맹이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되자 이에 대응하여 전략적 연대를 긴밀히 하고 있다. 동북아 4국의 지지를 받아 북한의 개혁·개방을 추구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 정세 변화에 크게 유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먼저 2장에서 탈냉전이후 미·일 양국이 동맹관계를 재 정의하는 과정을 검토하고, 3장에서 9·11테러 이후 미·일동맹이 강화되는 배경을 미국의 세계전략과 이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미·일동맹의 변혁과 주일미군 재편협상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미·일동맹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미·일동맹이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6장에서는 미·일동맹의 강화가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7장에서 우리의 안보정책 측면에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II

탈냉전기 미국과 일본의 안보관계



1. 미·일 안보협력의 이완

가. 걸프전과 미·일동맹의 딜레마

1991년 12월 소련이 공식적으로 종말을 고함에 따라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되었다. 탈냉전기 새로운 국제질서는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을 축으로 중·일·러 및 유럽 강대국들이 받치는 단일-다극체제(uni-multipolar system)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미국은 영토, 자원, 기술수준, 정치·군사력 등 총체적 국력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한 힘의 우위를 점하였으나, 냉전기간 중 과도한 군비경쟁의 후유증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에 시달리게 되었다. 1991년 미국은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고, 국가경쟁력은 세계 5위로 하락하였다.¹ 미국은 군사적으로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하였지만, 경제적으로는 일본 및 서유럽 국가에 추월당하는 등 2류 국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대두되었다.

한편, 일본은 1980년대 세계 최고의 국제경쟁력을 과시하며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였다. 탈냉전기에 들어 미·일간 통상마찰은 심화되는 가운데, 1990년 8월 2일 발생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사건은 미·일 갈등을 안보분야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² 이라크군이 쿠웨이트를 공격한 8월 2일 일본은 이라크에 대해 쿠웨이트로부터 군대 철수를 요구하였으며, UN의 경제제재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

¹ 은호성, “1990년대 미·일의 경제성과 및 경쟁력 비교연구,” 『조사통계월보』 (1998. 6), pp. 8~37.

² 당시 주미 일본대사 쿠리야마 타카가즈(栗山尚一)는 자서전에서 “걸프전은 미·일동맹에 있어 1960년의 안보조약개정 이후 최대의 위기였다. 또한, 걸프전은 일본에 2차대전 이후 지속해 온 외교의 패턴을 통째로 변화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外岡秀俊·本田優·三浦俊章, 『日米同盟半世紀: 安保と密約』 (東京: 朝日新聞社, 2002年 8月), pp. 409~410.

지기 하루 전인 8월 5일에는 독자적으로 이라크와 쿠웨이트로부터 석유 금수조치를 단행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8월 14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요구한 다국적군에 전투부대를 파병하지 않았으며, 의료부대나 군수지원부대 등 비전투부대도 파견하지 않았다.³ 대신, 일본은 미국의 군사작전 지원을 위해 100.12억 달러의 현금을 지원하였다.⁴ 걸프전 기간 중 일본은 총 130억 달러의 전쟁비용을 지불하였지만 국제사회는 일본의 경제적 지원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미국 언론은 오히려 일본은 병력이 아닌 화폐로만 국제문제에 대처한다는 이른바 ‘수표 외교’(check diplomacy)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미국의 안보공약에 자국의 안보를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다국적군에의 참여 요구에 응하지 못한 일본으로서는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걸프전 ‘전쟁에 말려들지 모른다는 불안’으로 고민하게 되었다. 즉, 비대칭적 동맹관계에서 일본은 방기(放棄)와 연루(連累) 사이에서 갈등하는 동맹의 딜레마를 경험하였다.⁵ 특히 공동의 적인 소련이 붕괴된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한

3- 1990년 8월, 대이라크 공격작전을 위한 다국적군에 미국·영국·프랑스 등 28개국이 참가하였고, 한국·체코·헝가리 등 7개국은 의료 및 군수지원 부대를 파견하였다. 外岡秀俊·本田優·三浦俊章, 『日米同盟半世紀: 安保と密約』(東京: 朝日新聞社, 2002年 8月), pp. 406~409.

4- 이라크 공격작전에 약 600억 달러가 소요되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168.39억 달러), 쿠웨이트(160.57억 달러), 일본(100.12억 달러), 독일(65.72억 달러), 한국(3.55억 달러) 등이 지원금을 제공하였다. 外岡秀俊·本田優·三浦俊章, 『日米同盟半世紀: 安保と密約』(東京: 朝日新聞社, 2002年 8月), pp. 415~416.

5- Michael Mandelbaum, *The Nuclear Revol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p. 151~152; 川上高司, 『米軍の前方展開と日米同盟』(東京: 同文館出版株式會社 2004年 4月), p. 280에서 재인용; 빅터 D. 차 저, 김일영·문순보 공역, 『적대적 제휴: 한국·미국·일본의 삼각 안보체제』(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pp. 72~80.



다국적군에의 일본 불참은 미·일동맹에 대한 존폐논의로 이어졌다.

나. 미·일동맹 폐기론

미·일동맹에 대한 폐기론은 미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주창되었다. 일본내 폐기론은 냉전이 종결됨에 따라 미·일동맹의 유용성은 소멸되었으며, 일본은 미·일동맹이 아닌 다자간안보협력을 통해 국가안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1950년대 이후 『미·일 안보조약』의 파기를 역설해 온 진보주의 노선이나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확대를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들의 입장과 상통한다.

한편, 미국내의 미·일동맹 폐기론자들은 미국은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지만, 일본은 미국의 안보협력 요구에 적극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른바 미·일동맹의 비대칭성을 지적하였다. 미국이 일본의 안보를 일방적으로 보장하는 비대칭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미·일동맹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카토(CATO) 연구소의 프레블(Christopher Preble) 등 대일 수정주의자로 불리는 그룹에 의해 주장되었다. 이들은 향후 일방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보다는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일본이 보다 많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⁶ 미국내 미·일동맹 폐기주장은, 주변사태시 자위대의 미군지원 확대를 규정한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1997)이 책정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예를 들면, 카토 연구소의 카펜터(Ted Galen Carpenter)는 “미·일 동맹관계에서 일

⁶- Christopher Preble, “U.S.-Japanese Security Relations: Adjusting to Change,” *Foreign Policy Briefing*, No. 7 (March 14, 1991) <www.cato.org/pub_display.php?pub_id=1532&full=1>.

I
II
III
IV
V
VI
VII
VIII

본은 현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계속 미국에 의존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미·일동맹이 안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⁷

냉전이후 미국과 일본에서 제기된 미·일동맹 폐기론은 공통적으로 미·일동맹의 무용성(無用性)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폐기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차이가 있다. 일본의 폐기론자들은 안보위협이 사라졌다는 인식에서 미·일동맹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내 폐기론자들은 미·일동맹이 안고 있는 구조적(『미·일 안보조약』의 비대칭성)이고 현실적(일본의 평화헌법 준수)인 문제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무용론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미·일동맹 무용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국민들도 미·일 안보체제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위대에 의한 자주국방체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탈냉전 초기 일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일 안보체제를 지지한다는 여론은 1980년 70%에서 1991년 62.4%로 하락하였으며, 미·일동맹을 폐기하고 자주적으로 방위력을 길러야한다는 항목에 대한 지지도는 동일기간 중 5%대에서 7.3%로 확대되었다.⁸

다. 미·일동맹 강화론

미·일동맹 강화론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문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점진적 강화론과 급진적 강화론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집단적 자위권(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ce)이

7- Ted Galen Carpenter, "Pacific Fraud: The New U.S.-Japan Defense Guidelines," (October 16, 1997) <www.cato.org/pub_display.php?pub_id=6070>.

8- 자위대의 폐지 및 축소에 대한 지지도는 1980년 17.5%에서 1991년 10.5%로 7% 포인트 하락하였다. 防衛研究所, 『防衛戰略研究會議報告書』(2001年 5月 22日), p. 14.



란 자국이 직접공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맹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한편, 개별적 자위권(the right of individual self-defence)이란 자국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군사력으로 저지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UN헌장 제51조에 명시되어 있다.⁹ 그런데 『일본 헌법 제9조』는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전항(前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일본 헌법 제9조 2항에서 교전권을 부인하는 것은 개별적 자위권은 인정되지만 상대방에 대한 공격 등 적극적 침해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집단적 자위권에 관해서 일본 정부는 “일본도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지만, 일본이 공격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여 외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헌법 제9조에서 인정되는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실력행사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¹⁰ 즉, 일본이 침략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헌법해석상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점진적 강화론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

9- 外岡秀俊·本田優·三浦俊章, 『日米同盟半世紀』(東京: 大日本印刷株式會社, 2001年 9月), pp. 422~424; U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www.un.org/aboutun/charter/chater7.htm>.

10- 조세영, 『봉인을 떼려하는가: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본 일본의 헌법개정 문제』(서울: 아침, 2004), pp. 145~152.

서 미·일동맹의 군사적 역할과 임무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당시 미국 외교문제위원회의 마이클 그린(Michael J. Green) 등에 의해 제기되었다.¹¹ 점진적 강화론은 일본이 영구히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사하려 할 경우 국내적으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일본내 분위기는 이를 선택할 만큼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또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일제의 침략을 경험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즉,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점진적 강화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진적 강화론과 유사한 입장에서 브루킹스 연구소의 모치쓰키(Mike Mochizuki)와 오한론(Mikel O'Hanlon)은 이른바 진보적 동맹론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인도적 지원, 평화유지, 테러대처, 비전투원철수 등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수반하지 않는 분야로 확대해가도록 진보주의적 기능을 부여하자고 주장하였다.¹² 이와 같이 점진적 강화론자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는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양국간 협력이 가능한 부분부터 실천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의 입장은 『미·일 안보공동선언』(1996)과 『미·일방위협력을

¹¹ 防衛年鑑刊行會 防衛メディアセンター, “特集2—日米同盟の將來—21世紀に向けて,” 『防衛年鑑』(東京: 防衛年鑑刊行會, 平成 11年 4月), p. 67; Michael J. Green, *Arming Japan: Defense Production, Alliance Politics, and the Postwar Search for Autonom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5) 참조.

¹² Mike Mochizuki and Michael O'Hanlon, “A Liberal Vision for the U.S.-Japanese Alliance,” *Survival: The IISS Quarterly*, Vol. 40, No. 2 (Summer 1998) <www.brook.edu/printme.web?page=/pagedefs/dbf13074cc81ff3a3fdbd6410a141465.xml>.



I
II
III
IV
V
VI
VII
VIII

위한 지침』(1998)에 반영되었다.

급진적 강화론은 미·일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보체제의 비대칭성을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여 지역 안정에 직접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주장하는 논자로는 일본의 『오카자키연구소』 소장인 오카자키 히데히코(岡崎 久彦)를 들 수 있는데, 그는 1996년 대만해협 사태가 악화되었을 당시 미국의 항공모함과 해상자위대가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¹³ 이처럼 급진적 강화를 주장하는 그룹은 동북아 지역에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수준까지 시야를 넓히고 있다. 이들은 미·일 군사협력을 급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미·일동맹은 NATO에 가까운 형태로 변모되고, 양국간 임무와 기능상의 비대칭성은 개선되면서,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 요소도 상당부분 축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미·일동맹 폐기론에 대한 반발적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있다. 즉, 미국이 국제분쟁에 개입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방관할 경우, 미국내에서 미·일동맹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일본 내부의 방위정책 논쟁

이상과 같이 탈냉전 이후 미·일동맹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일본내에서는 방위정책에 대한 관한 새로운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¹³ 防衛年鑑刊行會 防衛メディアセンター, “特集2—日米同盟の將來 — 21世紀に向けて,” 『防衛年鑑』(東京: 防衛年鑑刊行會, 平成 11年 4月), p. 68.

이 가운데 하나는 일본은 평화헌법과 전수방위(專守防衛)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여전히 평화국가라는 입장에서 방위정책을 급격히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평화헌법의 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2차 대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방위정책에 대한 논의의 본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장은 일본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력을 신장하는 중상주의 국가를 추구하고 국가안보는 미국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요시다 시게루(吉田 茂) 수상(1948.10~1954.12)이 주장했던 ‘요시다 독트린’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써 경제력을 통한 일본의 영향력 확대라는 측면에서 좀 더 자주적이기는 하나 평화헌법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미·일동맹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¹⁴

세 번째 주장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일본은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도록 유엔 중심으로 또는 미·일동맹을 축으로 국제무대에서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중심의 집단안보 활동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는 냉전 종식을 계기로 일본이 비정상적인 국가에서 탈피하여 정상국가(normal state), 혹은 보통국가로 변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국제 평화유지 활동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제한하고 있는 헌법 제9조를 폐지할 것도 강조하였다.¹⁵ 한편,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자들은 미·일동맹을 축으로 일본의 안보역할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1994년 우익성향의

14. 윤정석, 『일본의 국가전략: 21세기를 맞으며』 (서울: 오름, 1998), pp. 128~132.

15. 小澤一郎, 『日本改造計劃』 (東京: 講談社, 1994); 小澤一郎, “日本國憲法改正試案,” 『文藝春秋』 (1999. 9), pp. 98~100; 이원덕, “제4장, 일본사회의 우경화와 안보정책 전환,” 김호섭·이면우·한상일·이원덕 공저, 『일본 우익 연구』 (서울: 중심, 2000) pp. 298~300에서 재인용.



I
II
III
IV
V
VI
VII
VIII

단체인 일본전략센터는 국제안보환경 조성에 자위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핵전쟁에 대한 대응력과 북한과 같은 주변국의 미사일공격에 대비한 반격 능력을 구비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¹⁶

네 번째 주장은 일본은 군사 대국화를 추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미·일동맹의 틀에서 벗어나 일본의 방위는 일본 스스로가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전후 일본내 극우그룹에 의해 일관되게 주창되었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자주국방론이며 미·일동맹 폐기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의 대표주자로 나카소네 야쓰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를 들 수 있다. 1970년 1월 방위청장관에 취임한 나카소네는 “일본의 방위나 자위대를 둘러싼 환경은 글자 그대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자기의 국가는 자기가 지키는 것이 당연하며, 나의 제1의 임무는 방위를 자연스런 상태로 성장시키는 것에 있다. 이것이 나카소네 노선 이다”고 발언하는 등 전후 각료로서는 최초로 자주방위론의 구체화를 시도하였다.¹⁷

탈냉전기에 들어 세계적으로 화해·협력 무드가 확산됨에 따라 미·일안보체제의 존재 의의도 퇴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내부에서 안보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즉, 평화헌법을 유지하며 전수방위를 추구하자는 입장, 헌법개정을 통한 보통국가로 전환하자는 입장, 또한 우익그룹 등 자주방위를 강조하는 입장 등 다양한 범위에 걸친 입장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과 중·대만관계의 긴장 등 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위협요인이

¹⁶-日本戰略研究センター, 『世界に生きる安全保障』(東京: 日本戰略研究センター, 1994年), pp. 33~69.

¹⁷- 나카소네의 자주방위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강한구, “자주국방 구현을 위한 전략 방향,” 이승철 외 11인 편저,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국』(서울: 나남출판, 2004), pp. 412~416.

대두되자 미·일 양국 정부는 동맹관계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2. 미·일동맹 재정의 과정

가. 동아시아지역의 새로운 안보위협

1990년 4월 미국방부는 「21세기를 지향한 아·태지역 전략 틀」이라는 제목의 「동아시아 전략구상」(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 EASI) 보고서를 발표하였다.¹⁸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주둔 미군 및 주한미군을 점진적으로 철수하기 위한 3단계의 철군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의해 미국은 제1단계에서(1990~1992년) 주한미군 약 7,000명을 철수하여, 1990년 당시 44,000여명이던 병력이 37,000여명으로 감소하였다. 미국은 제2단계(1993~1995년)에서 주한미군을 더 감축하여 1995년 주한미군 숫자를 30,000명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위협이 증대하자 미국 방부는 1992년 제2단계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중지하였다.

1993년 3월 북한은 NPT탈퇴를 선언했다. 북한 핵위기에 직면하여 미군과 일본 방위청은 한반도 유사시 양국간 공동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1994년 4월 주일미군은 일본방위청에 대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의 미·일 군사협력 문제를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미국 측은 한반도 유사시 해상자위대가 소해정과 대잠수함초계기를 파견하여 북한이 부설한 기뢰

¹⁸-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April 18, 1990).



I
II
III
IV
V
VI
VII
VIII

를 제거해 줄 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일본 방위청은 헌법상 집단적 지위권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¹⁹ 당시 실질적으로 일본이 미군의 후방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자위대가 일본 영토 밖에서 주일미군에 대해 후방지원을 하는 것은 일본 영토내에서 미군을 지원한다고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에 위배되었다. 1978년 11월 28일 일본국회에서 승인된 「미·일방위협력을 의한 지침」(일명 가이드라인) 또한 일본 유사시 미·일협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극동 유사시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²⁰

한편,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4년간 국방비를 연 12% 이상 증액하고, 러시아로부터 첨단무기를 도입하여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도모하였다. 동구 사회주의권과 소련이 붕괴된 후 국내외적으로 증대되는 민주화 도전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된 중국의 군비증강은 체제수호자로서의 공산당과 군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정치적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²¹ 그렇지만 탈냉전 초기 세계적으로 군축을 지향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군비증강은 중국이 패권을 지향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들게 하였다. 당시 미국은 국방비와 병력을 축소하고 있었고, 러시아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군사력이 위축되었으며, 일본 또한 미·일동맹이 이완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방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은 다른 동북아 국가들과 대조적으로 1993~1994년 지하 핵실험을 연달아 실시하고,

19- 조세영, 『봉인을 떼려하는가: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본 일본의 헌법개정 문제』, pp. 57~60.
 20- 防衛廳, 『防衛白書』(東京: 大藏省印刷局, 1992年 8月), pp. 268~273.
 21- Shannon Selin, *Asia Pacific Arms Buildups* (Canada: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994), pp. 10~15.

1994~1995년 국방비를 각각 20%이상 대폭 증액하였다. 그리고 1995년 7월과 1996년 3월 대만해협에서 미사일발사 훈련 등을 단행하여 대만해협에 긴장이 고조되었다.²²

나. 미·일동맹 재정의

북핵 위기와 대만해협 긴장을 통하여 미·일동맹이 새로운 안보환경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 양국 정부의 국방전문가들은 미·일 안보협력체제의 정비·강화작업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을 확실히 표명하고, 일본은 미군지원에 필요한 체제를 정비·강화한다는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1995년 2월 미 국방부는 『동아시아 전략보고』(East Asia Strategy Report: EASR)라고 불리는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태평양전략을 발표하였다.²³ EASR은 미국이 10만 명의 동아시아 주둔 미군 병력 수준을 유지하고, 이 지역에서 안정자·균형자(balancer)·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계속 수행한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당시 국방부 차관보였던 나이(Joseph S. Nye)가 미·일 양국 사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작성했기 때문에 흔히 『나이 보고서』라고 불리고 있다.²⁴ 이 보고서는 미·일동맹을 미국의 동아시아

²² 신상진, 『중·미관계와 한반도: 외교안보 및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p. 9~13.

²³ U.S.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February 1995).

²⁴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 저, 신은진 역, 『표류하는 美日 동맹』 (서울: 중앙M&B, 1998), pp. 109~143.



I
II
III
IV
V
VI
VII
VIII

전략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미·일동맹이 단순히 양국차원에 그치지 않고 아·태지역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나이 보고서』는 미·일안보협력의 범위를 극동에 제한하지 않고 아·태지역으로 확대 적용했다는 의미에서 미·일안보관계를 재정의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한편, 일본정부도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6년 4월 17일 도쿄를 방문하여 하시모토(橋本龍太郎)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미·일 안전보장 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동맹』(Japan-U.S. Joint Declaration on Security-Alliance for the 21st Century)을 발표하였다.²⁵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으로 통칭되는 동 선언은 동아시아 지역의 유사시에 대비하는 방위협력과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것이다. 신안보공동선언은 특히 “아·태지역의 안보정세를 보다 평화적이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공동 혹은 개별적으로 노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양국의 협력범위를 기존의 ‘필리핀 이북의 극동’에서 아·태지역으로 확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²⁶

그 후 일본은 1997년 9월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 개정안』(신(新)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신가이드라인의 특징은 일본 주변유사시 미·일 협력 주요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즉,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유사시에도 자위대가 수색 및 구조활동, 지뢰 제거·선박검사 등 일정한 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일본

²⁵ 배정호, “탈냉전시대의 미·일 동맹: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증대,” 김성철 편, 『미·일동맹외교』(성남: 세종연구소, 2001), pp. 45~77.
²⁶ 外務省, 『日米安全保障共同宣言—21世紀に向けての同盟』, 1996年 4月 17日 <www.mofa.go.jp/area/usa/hosho/sengen.htm>.

의 군사적 역할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그리고 1998년 5월에는 「주변사태법」을 제정하여 유사시 자위대가 취할 내용과 절차 및 미군과의 협력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일본 방위청은 1998년 8월부터 동북아 전역미사일방어(TMD)체제 개발을 위한 미·일 공동기술연구를 시작하였다.²⁷ 일본은 이와 같이 「신안보공동선언」 이후 1990년대 말까지 미·일 안보협력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3. 미국의 동아시아정책 추진 실태

가. 클린턴 행정부의 군비축소 정책

탈냉전 초기 미국 지식인들 사이에 향후 국제관계에서 군사·안보 문제보다 경제·기술적인 문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널리 확산되었다.²⁸ 1993년 1월 출범한 클린턴(William J. Clinton) 민주당 행정부는 당시 사조에 동조하여 재정적자 및 무역적자 해소²⁹ 등 경제회복에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국방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다. 미 국방부는 소련 붕괴 이후 위협요인 및 소요전력을 재평가하여 1993년 10월 「국방계획 상향식 검토」(BUR: Bottom Up Review)를 발표하였다.³⁰ BUR은 세계 안

27- 김영춘,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p. 28~35.

28- 역사상 강대국들은 군비경쟁에 몰두하여 산업기반이 취약해짐으로써 몰락하게 되었다는 폴 케네디의 주장이 이러한 사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Paul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New York: Vintage Books, 1987).

29- 1993년 미국의 무역적자는 1,300억 달러, 재정적자 약 2,500억 달러에 달했으며 대외 순채무는 5,000억 달러 이상이나 되었다. 임양택, 『아시아 대예측』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1999), pp. 42~43.

30- U.S. Department of Defense, *Report on the Bottom-Up Review* (October



보필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미국은 거의 동시에 발생하는 2개 주요 지역전쟁에 모두 승리(Win-Win)할 수 있는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여, 탈냉전기 미군 소요병력을 140만으로 산정하였다.

클린턴 행정부는 새로운 국방계획에 의해 군사력 규모의 감축 및 전력구조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미군 총 병력은 1985년 220만 명 수준에서 1997년에는 145만 명 수준으로 33% 감축되었고, 1985년 4천억 달러에 달했던 국방비는 1997년 2천5백억 달러로 38% 감소하였다.³¹ 그 후 1997년 5월 미 국방부가 발표한 『4개년 국방계획검토』(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는 Win-Win전략의 타당성을 재확인하였지만 이에 소요되는 병력은 136만 명으로 좀 더 축소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³² 그리고 병력 감축, 기지 폐쇄, 기구 통·폐합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무기체계와 장비 현대화에 투자함으로써 미군을 첨단장비로 무장한 정예군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당시 QDR은 향후 2015년까지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에 군사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국가가 출현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 이후에는 세계적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국가들이 출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후보로서 러시아와 중국을 들었다.

1993).
³¹ 권태영·정춘일 공저, 『선진국방의 지평: 21세기 국방발전의 비전과 방향』 (서울: 을지서적, 1998), p. 183.
³² U.S. Department of Defense, *Report of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May 1997).

나. 미국과 일본·중국 관계

클린턴 대통령과 하시모토 일본 총리가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을 발표하자, 일주일 후 1996년 4월 25일 옐친(Boris Yeltsin) 러시아 대통령은 베이징을 방문하여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관계를 ‘21세기를 대비하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킬 것을 선언하였다.³³ 그리고 다음날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중앙아시아 3개국과 함께 ‘상하이 5개국회의’를 발족시켰다.³⁴ 중국과 러시아는 탈냉전기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과정에서 미국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고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를 저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이로써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협력과 견제 속에 유동성을 보이던 동북아 질서는 미·일 대 중·러를 축으로 하는 느슨한 대립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미·일 신안보공동선언」과 이에 대한 중·러의 반발을 고려해 보면 클린턴 행정부는 일본을 중시하고 중국을 배척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권력게임(power game)보다 부의 게임(wealth game)을 더 중시한 클린턴 행정부는 일본을 진정한 동맹으로 신뢰하지 않은 반면, 중국을 잠재적 위협 세력으로 크게 우려하지도 않았다.³⁵ 사실 안보 문제보다 자국경제의 회복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대외정책을 추진해 온 당시 클린턴

33. “Joint Statement Issued on ‘Strategic Partnership,’” *FBIS-CHI-96-081*, pp. 1~2.

34. 상하이 5개국 회의는 2001년 6월 우즈베키스탄이 가입한 후 ‘상하이 협력기구’(SCO)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35. Jim Mann, “China for Gore, Japan for Bush,” *Los Angeles Times Service: Korea Herald* (October 27, 2000).



행정부는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보다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동아시아정책을 추진하였다.

한편, 일본은 미·일동맹에 대한 재정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정치권이 분열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부여된 군사·안보 역할을 적극적으로 떠맡지 못했다. 일본 경제는 1992년 이후 4년간 경제성장률이 연속 제로 상태에 머무르면서 주가 및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등 전후 최대의 불황을 경험하였다.³⁶ 일본 정치권은 1993년 7월 총선 결과 1955년 이후 계속되었던 자민당 집권체제가 붕괴되고, 연립정권 시대로 들어갔다. 1993년 이래 두 차례의 비자민당 연립정권이 수립된 바 있으나 결국 자민당 중심의 연립정권이 들어섰다. 그러나 자민당의 정치적 지도력이 약화되는 한편, 야권도 정계개편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했다. 일본은 오히려 1997년 7월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 여파로 심각한 경기불황을 겪음으로서 경제대국으로서의 국가위상이 크게 훼손되었다.³⁷

클린턴 행정부 하에서 미·중 관계는 대만문제, 중국내 인권문제, 중국의 미사일 수출, 무역마찰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1996년 하반기부터 경제협력을 위주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였다.³⁸ 그 결과 클린턴 대통령과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은 1997년 10월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미국과 중국이 ‘21세기를 향한 건설적 전략 동반자 관계’임을 선언하고 정상

36. 신한종합연구소, 『일본보고서』 (서울: 들녘, 1998), pp. 100~105.

37.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일본경제는 1997년 23년만에 처음으로 -0.7%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정훈, “일본의 금융개혁 추진방향과 경제전망,” 『KIEP 세계경제』 (1998. 10), pp. 43~55.

38. 신상진, 『중·미관계와 한반도: 외교안보 및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p. 9~13.

회담 정례화, 군사분야 협력, 워싱턴과 베이징간 핫라인 설치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1998년 6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을 재확인하고 그 실천적 조치로서 전략 핵미사일 상호조준 해제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상호협력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등에 합의하여 양국이 함께 설 수 있는 공동의 기반을 확대하였다.

미국내 보수인사들은 중국이 경제성장을 지속하면 향후 15~30년 내에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클린턴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포괄적 개입정책을 비판하였다.³⁹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핵·미사일 기술을 파키스탄·이란·북한 등 불량국가에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대중국 유화정책은 미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특히 클린턴 행정부가 허용한 미국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통신위성 판매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⁴⁰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이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위안화(元貨)의 평가절하를 거부함으로써 아시아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았다고 중국의 역할을 오히려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유지하는 근거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³⁹- Kim R. Holmes & James J. Przystup, eds., *Between Diplomacy and Deterrence: Strategies for U.S. Relations with China* (Washington D.C.: The Heritage Foundation, 1997).

⁴⁰- Bill Gertz, *Betrayal: How the Clinton Administration Undermined American Security* (Washington D.C.: Regnery Publishing Inc., 1999), pp. 163~165.



I
II
III
IV
V
VI
VII
VIII

다. 클린턴 행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공화당의 비판

클린턴 대통령은 1998년 미국 연방재정이 흑자로 돌아서는 한편, 국가안보 문제가 차기 대통령 선거 이슈로 부각될 전망을 보이자,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국방비를 증액시키고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구축에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행정부가 유화적인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국방차원에서는 미군 전력을 약화시켰다고 비난하였다. 2000년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부시(George Walker Bush) 텍사스 주지사는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민주당 집권기 동안 저하된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회복하여 강력한 미국 재건을 추진하고, 불량국가들의 공격과 협박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NMD체제 조기배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공화당 정강정책은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가 아닌 전략적 경쟁자라고 규정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⁴¹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인사들은 지정학적인 현실주의 논리에 입각하여 클린턴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을 비판해 왔다. 이들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유지하는 관건은 동맹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현실주의적인 입장은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인 2000년 10월에 발표된 「미국과 일본-성숙한 파트너십을 향해서」라는 보고서에 잘 표현되어 있다.⁴²

⁴¹- The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Republican Platform 2000: Renewing America's Purpose. Together* (August 3, 2000).

⁴²- 아미티지(Richard L. Armitage)와 나이(Joseph S. Nye)가 중심이 되어 미·일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작성한 초당적 정책보고서이다. Richard L. Armitage, (et. al.),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이 보고서는 작성을 주도한 아미티지(Richard L. Armitage) 이름을 따서 흔히 『아미티지 보고서』라고 불리고 있다. 아미티지를 비롯한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지일파 인사들이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자 공화당 행정부 요직에 대거 임용되어 미국의 대일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아미티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미·일동맹은 미국과 영국간 동맹관계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양국관계가 책임분담(burden-sharing)만이 아니라 권한분담(power-sharing)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동맹의 협력에 있어서 제약요소이며, 이 제약을 철폐함으로써 안전보장상의 협력이 보다 긴밀하고 효과적으로 될 것”이라고 지적하여 사실상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권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일 양국이 ① 미군의 아시아 전진배치 지지, ② 유엔 개혁에 공감하며 미국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③ 중국이 지역 정치·경제 영역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장려, ④ 한반도의 화해 촉진 및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등을 대외정책 목표로 공유하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양국 사이에 정치·안보·오키나와·정보·경제·외교 영역에서 긴밀한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 불황이 일본의 국제적 위상 및 전략적 역할을 감소시킬 수도 있음을 우려하며, 세계화에 발맞추어 시장개방·기업투명성증진·경제구조 개혁 등을 과감하게 단행할 것을 권유하였다.

Mature Partnership (2000).



III

부시 행정부의 세계전략과 일본의 호응



1.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2001년 1월 20일 부시(George Walker Bush) 대통령이 취임한 후 공화당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은 레이건(Ronald Reagan) 행정부 및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 행정부에서 일한 보수강경파들로 구성되었다. 파월(Colin Powell) 국무장관, 럼스펠드(Donald Rumsfeld) 국방장관, 라이스(Condoleezza Rice) 백악관 국가안보 담당보좌관, 윌포위츠(Paul Wolfowitz) 국방부장관 등은 힘을 통한 국익확보를 기치로 미국식 국제주의를 대외정책의 기조로 천명하였다.⁴³ 힘에 바탕을 둔 현실주의적 외교를 강조한 부시 행정부는 출범 초기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국방정책을 수립하는데 치중하였다. 그러나 군사력 강화 이외의 세계전략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부시 행정부는 대외정책을 미국의 편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을 보였다.

미 국방부는 군사·안보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① 유럽에서 아시아로 전략 중심축 이동, ② 해외기지 등 전방배치 전력 감축, ③ 정보력 절대 우위 유지, ④ 군사력 기동성 강화 및 경량화 등 4대 원칙에 기초하여 새로운 국방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새로운 전략틀(strategic framework)으로써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non-proliferation)과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 미사일방어(MD), 일방적인 핵무기 감축 등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⁴⁴ 럼스펠

43- Condoleezza Rice,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Policy* (January /February 2000), pp. 45~62; The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Republican Platform 2000: Renewing America's Purpose. Together* (August 3, 2000).

44- 2001년 5월 한국을 방문한 아미티지(Richard L. Armitage) 국무부 부장관이 밝힌 내용임. 『조선일보』, 2001년 5월 11일.

드 국방장관은 특히 군사혁신에 기초하여 미군의 군비태세를 첨단화하고 경량화하는 방향에서 개편하고자 하였다.⁴⁵

2001년 9·11 테러에 의한 참사가 발생하자 미 국방부는 획기적인 군사혁신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테러조직의 기습공격에 미 본토를 효율적으로 방어하는 데 중점을 둔 국방정책을 발표하였다.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는 MD체제 구축 등 미국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테러와의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제공격을 정당화하고 불량국가들의 정권 교체까지 도모하는 공세적인 안보전략을 제시하였다. 미군의 군사력 첨단화, 테러와의 전쟁,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의 기초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미국 군사력의 절대우위 확보

미국은 세계 GDP의 30%를 점유하는 경제력과 세계 국방비 절반에 달하는 압도적 군사력을 바탕으로 단극적 세계지배(unipolarity)를 유지해오고 있다.⁴⁶ 그러나 다음 <표 III-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는 러시아와 거의 대등한 숫자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위협에도 노출되어

45- Donald H. Rumsfeld, "Prepared Testimony of U.S. Secretary of Defens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June 21, 2001) <<http://www.usembassy.state.gov/ircseoul/wwwh5042.html>>.

46- 미 국방예산은 2002회계연도 3,432억 달러에서 2005회계연도 4,207억 달러로 증액되었고, 2006회계연도에는 4,416억 달러가 의회에 요청되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그리고 미 본토방위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포함하게 되면 2004년도 미국의 실제적인 국방지출은 4,605억 달러에 달해 전세계 국방비 지출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있다. 이와 같은 안보 취약점을 인식한 부시 행정부는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여 세계패권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장기적인 국가전략 목표 하에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에 안보전략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였다.

<표 III-1> 2004년 주요 핵보유국의 전략핵 상황

국가	미사일(기)			장거리 폭격기 (대)	전략핵 탄두수 (개)	핵탄두 총 수 (개)
	ICBM	IRBM/ MRBM	SSBN/ SLBM			
미 국	540	-	360	114	5,886	7,006
러시아	613	-	232	78	4,422	7,802
영 국	-	-	48	-	185	185
프랑스	-	-	48	-	348	348
중 국	20	100	12	-	282	402

자료: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04: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矢野恒太記念會, 『世界國勢圖會 2005/2006』 (동경: 시야향태기념회, 2005), p. 504에서 재인용.

부시 행정부는 MD체제가 순수한 방어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첨단 유도무기체제로 구성된 MD체제는 타국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쉽게 전용될 수 있는 것이다. MD체제를 구축하고 핵·미사일 선제공격능력을 강화하면 미국은 세계 군사적 패권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군사력의 절대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중국·러시아·프랑스 등 강대국들이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도전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⁴⁷ 이와 더불어 군사력의 절대우위는 테러집단 및

I
II
III
IV
V
VI
VII
VIII

불량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2001년 5월 1일, 미 국방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MD체제 구축을 공식 천명하였다.⁴⁸ 그는 제한된 위협에 대응하여 탄도미사일의 추진단계(booster phase), 중간단계(mid-course phase), 재진입단계(reentry phase) 요격을 위하여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과 우주에 탐지 및 요격체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지상·해상·우주배치 요격체제를 갖춘 3단계 다층방어체제로 구성된 MD 체제 구상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부시 대통령은 MD체제 구축에 필요한 비용, 개발범위 및 시기 등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지 않았다.

부시 행정부는 2002년 1월 4일 MD 개발 부서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탄도미사일방어본부(BMDO)와 MD개발 업무를 통합하여 미사일방어국(MDA)으로 개편하고, 육·해·공군에 분산되어 있던 MD 개발업무를 MDA로 일원화하였다. 그리고 동년 6월 13일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ABM) 조약이 공식 폐기되자,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알래스카 포트그릴리에 MD 실험장 및 5기의 지상 요격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계획하에 지상 MD 기지 건설에 착공하였다. 이와 함께 해상·공중 MD 개발도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47- Jeremy Shapiro and Lynn E. Davis, "The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Lynn E. Davis and Jeremy Shapiro, ed., *The U.S. Army and the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Santa Monica: RAND, 2003), p. 10.

48- 부시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과의 차별성 논란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클린턴 행정부가 분리한 NMD와 TMD를 MD로 통합하였다. The White House, *Remarks by the President to Students and Faculty at National Defense University* (May 1, 2001) <www.whitehouse.gov/news/release/2001/05>.



미 국방부가 2002년 1월 8일 의회 국방정보위원회에 제출한 「핵태세 검토」(NPR: Nuclear Posture Review) 비밀 보고서는 향후 5~10년간 추진할 핵무기 개발 및 배치에 대한 포괄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⁴⁹ NPR 보고서는 21세기 새로운 핵전략으로써 ① 핵전략의 ‘냉전기 3대 지주(Cold War triad)’인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의 역량을 초월한 핵·비핵 전력의 공격능력 확보, ② MD체제 구축 등 적극적·소극적 방어체제의 개발·배치 강화, ③ 새로운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핵무기 개발 및 핵실험 재개 등을 포함한 국방기반의 재활성화 등 ‘신 3대 지주(New Triad)’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2006~2008년 현재 배치한 패트리엇 개량형 지대공미사일(PAC-3) 외에 2~3대의 레이저 항공요격기, 4대의 이지스 대공 요격함 및 전역 고고도 미사일 방위망을 갖춘 MD체제를 작전 배치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하에서 미국의 국방태세는 최첨단 전략무기 부문에서 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위협에 대처하는 전통적인 군사력 구성의 분야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2001년 9월 30일 발간된 「4개년 국방계획검토」(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 보고서는 2개의 주요 전구전쟁(Two Major Theater War)에서 승리한다는 윈-윈(win-win)전략을 1개 대규모 분쟁지역에서 신속·확실한 승리를 거두고, 여타 소규모 분쟁은 현상 유지 등 제한된 작전수행 능력을 유지한다는 윈-플러스(one-plus)

⁴⁹- “Pentagon’s new nuclear targets in terror age,” *The New York Times*, March 10, 2002; U.S.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Excerpts]*, (January 8, 2002) <www.globalsecurity.org/wmd/library/policy/dod/npr.htm>.

I
II
III
IV
V
VI
VII
VIII

전략으로 수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⁵⁰ 그러나 미국은 현재 원-원전
략에 기초하여 산정된 병력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그 실
질적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현역 140만, 예비
역 130만 병력과 육군 10개 사단, 해군 12개 항모전단, 공군 46개
전투 비행단, 해병 3개 사단 등의 병력 규모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나. 불량국가에 대한 선제공격 및 정권교체

테러사태 이후 미국은 군사·안보정책의 중점을 미 본토방위에 두
었다. 미 본토방위의 목표는 테러·생화학무기·사이버공격·미사일
등 다양한 형태의 비대칭적 위협(asymmetric threats)에 대한 신속
한 대응능력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비대칭적 위협이란 군사력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미국과 정면대결을 피하여 미국의 약점을 핵
·생화학무기나 테러로 공격하거나 정보 네트워크나 환경을 파괴하
는 공작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대칭적 위협으로부터
미 본토를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부시 행정부는 대테러 활동만
을 전담하는 국토보안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신
설하고 2003년 1월부터 이를 운영하고 있다.⁵¹

테러사태 직후 발간된 QDR 보고서는 과거 냉전기 미국이 상대해
야 할 적은 분명했고 그 위협은 예측 가능한 것이었지만, 21세기에

⁵⁰- U.S. Department of Defense, *Report of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September 30, 2001).

⁵¹- 국토보안부는 8개의 정부 부처에 산재해 있는 22개 조직을 통합하여 미 본토방
위의 핵심기관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The White House, *National Strategy for
Homeland Security*, Office of Homeland Security (July 2002).



는 안보위협 주체와 내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미래의 적들은 상이한 동기와 상이한 능력을 보유할 것인 바,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었던 억지(deterrence)와 봉쇄(containment)정책이 미래에는 쓸모없게 될지 모른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실 탈냉전 이후 미국의 군사전략이 강대국을 상대로 한 대규모 전쟁을 가정하여 수립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동맹국은 물론 중국·러시아와도 안보협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이라크·북한 등 불량국가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테러집단의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는 당장 미국 안보에 현실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군을 실제적으로 동원하는 문제와 관련된 국방정책은 이들 불량국가 및 테러집단의 위협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미 국방부는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적의 개념이 바뀌었고 위협의 성격도 다원화되어 개별적으로 차별화된 대응책을 구사하기 어렵다는 전제에 입각하여, 개연성 있는 어떠한 위협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국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위협에 기초한 모델(threat-based model)보다는 능력에 기초한 모델(capabilities-based model)에 의하여 국방계획의 근간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윌포위츠(Paul Wolfowitz) 국방부 부장관은 능력기반 접근방법에서는 적이 누구이며, 전쟁이 어디에서 발발할지를 고려하는 것보다 적의 능력과 이에 대한 미군의 대응능력이 더욱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강조하였다.⁵² 따라서 잠재적 적들이 미국과 경쟁하겠다는

⁵²- Paul Wolfowitz, Deputy Secretary of Defense, *Prepared Testimony: Building a Military for the 21st Century*, To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I
II
III
IV
V
VI
VII
VIII

생각조차 갖지 못하도록 미국의 취약점을 보강하고 MD 체제 구축 등을 포함한 다층적인 억제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002년 새로 발간된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과거 냉전시기에 채택했던 적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량보복의 위협에 기초한 억지 개념은 방어해야 할 국민도, 국가도 없는 테러조직에게는 아무런 경고 의미도 갖지 못하며, 불량국가가 대량살상무기를 테러조직에게 비밀리에 제공할 경우 봉쇄 역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⁵³ 따라서 테러와의 전쟁에서는 적이 도발하기에 앞서 선제공격으로 테러 거점을 타격하고 테러조직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미국은 냉전시기에도 독재정권에 대한 제재 또는 봉쇄 조치들을 취하였지만 적극적인 붕괴전략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미국은 공세적인 군사전략을 통해 정권교체를 추구한다는 안보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001년 10월 7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실시하여 탈레반 정권을 궤멸시키고, 2003년 3월 19일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여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켰다. 인간의 자유가 세계적으로 공인된 보편적 가치관이며 미국이 높은 도덕적 권위를 세계질서에 구현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은 힘(power)으로 도덕적 원칙(principle)을 실현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⁵⁴ 그러나 군사력을 이용한 정권교체를 통해 자유민주주

(October 4, 2001).

⁵³-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2002) <www.whitehouse.gov/nsc/nss.html>.

⁵⁴- John Lewis Gaddis, "A Grand Strategy," *Foreign Policy* (November/December,

의적인 세계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안보전략은 정당성의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추구하는 세계전략은 자유주의적(liberal)인 세계질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보다는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미국이 제국(empire)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는 비판도 제기되었다.⁵⁵

9·11테러 이후 새롭게 부각된 미국의 공세적인 안보전략은 주로 중동지역에서 그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기존 강대국 중심의 질서가 고착되어 있으면서도 미·일·중·러 상호 관계가 특정 이슈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유동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보다 전통적인 세력균형정책이 추구되고 있다.

균형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은 일본, 한국, 호주 등 우방국과 양자간 안보동맹을 기축으로 하여 아·태지역에 민주화와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인도·러시아 가운데 어느 나라도 지역 패권국이 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 10만 명의 미군 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자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역내 세력균형이 유지되는 것이 역내 평화유지와 더불어 세계 패권국가로서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중국의 부상이 아시아지역의 세력균형을 교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중국 주변에 군사력 배치를 증강시키는 방향으로 해외주둔 미군을 재배치하고 있다.

2002).

⁵⁵ Edward Rhodes, "The Imperial Logic of Bush's Liberal Agenda," *Survival*, Vol. 45, No. 1 (Spring 2003), pp. 131~154.

다. 군사변혁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미군은 걸프전 이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과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혁신적으로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교리·작전·조직 개념을 갱신하는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을 실험해 오고 있다. 육군은 디지털 전장, 신전격전 기갑부대 등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해군은 항공모함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함선 및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고, 공군은 무인비행대대 창설 등 우주전쟁 시대에 대비한 무기체계를 연구·발전시키고 있다. 미군 합동참모본부는 육·해·공군이 개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군사혁신에 통합성을 높이는 한편, 각군의 현역 및 예비역 부대로 구성되는 합동군을 발전시키기 위해 1996년 ‘Joint Vision 2010’을 발표하였다.⁵⁶ 이 합동비전(Vision)은 평화유지, 소규모 군사작전, 전면전 등 모든 형태의 군사작전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 4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정보우위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기동·타격·조달·방호 능력을 장차 압도적 기동, 정밀교전, 초점화 군수지원, 전차원 방호 능력으로 변환한다는 것이다.

군사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사변혁(Transformation)이란 미래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방 전 분야에 걸쳐 총체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⁵⁷ 즉, 미국은 “군사분야에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더

⁵⁶- U.S. Department of Defense, John M. Shalikashvili,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Joint Vision 2010* (1996).

⁵⁷- ‘Military Transformation’은 ‘군사력 변환,’ ‘군사변환,’ ‘군사변혁’(變革) 등의 용어로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Transformation’을 ‘변환’으로 번역할 경우 미군이 강조하고 있는 ‘혁명적’ 변화의 의미가 약화되어 전달될 수 있다. 박휘락, “미군 변혁의 성과와 전망,” 『국제문제』, 4월호 (2007), pp. 25~26.



I
II
III
IV
V
VI
VII
VIII

하여 군사 독트린과 병력 구성을 수정하여 병력을 이용하는 방법까지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⁵⁸ 이와 관련하여 럽스펠드 국방장관은 군 변혁에 관한 국방성의 지침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능력만이 아니라, 사고방식, 훈련방법, 그리고 전쟁방식까지 변혁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⁵⁹

미국이 추진 중인 군사변혁의 방침은 첫째, 저강도 분쟁과 비대칭적 분쟁, 특히 시가지와 정글지역에서의 테러와 게릴라전 대응, 둘째, 분쟁지역으로 신속히 병력을 전개하기 위한 장비의 경량화, 셋째, 첨단기술과 재래기술을 융합한 유연한 병력 운용, 넷째, 육·해·공·해병대의 통합적 운용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방침을 토대로 미국은 정밀유도무기와 스텔스 무기의 개발 및 조달, 기동력 향상(특히 장거리 수송능력 강화), CAISR(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에의 첨단기술을 도입한 특수부대의 운용, 군간 통합운용을 위한 새로운 전략 및 전술 수립, 그리고 이에 기초한 교육 및 훈련을 구상하고 있다.

미군의 군비태세 변환계획과 더불어 9·11사태 이후 선제공격 위주의 반테러 안보전략은 해외주둔 미군부대를 소규모 기동군 형태로 재편성하도록 촉진시켰다. 특히 이라크 전쟁은 우호국가와 적대국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질서에 정착되었던 미국의 동맹전략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전통적인 우방인 프랑스와 독일이 이라크전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미국

⁵⁸- United States Senates, Committee on Armed Services, Defense Transformation, Testimony of Andrew F. Krepinevich, Executive Director (Center for Stra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April 9, 2002) <<http://www.armed-services.senate.gov/staement/2002/april/Krepinevich.pdf>>.

⁵⁹- U.S. DOD, *Transformation Planning Guidance* (April 2003), p. 1.

은 영국과 스페인을 주축으로 참전세력을 형성하고 터키, 폴란드, 파키스탄 등의 협조를 발판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작전환경의 변화는 미국으로 하여금 해외주둔 미군의 형태, 규모, 능력 및 병력규모까지를 포함한 「지구적 방위태세 검토」(GPR: Global Posture Review)로 명명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⁶⁰

미 국방부가 마련한 GPR의 핵심은 해외 미군기지를 기능별로 ① 주요 작전기지(MOB: Main Operating Bases), ② 전방작전거점(FOS: Forward Operating Sites), ③ 협력적 안보지점(CSL: Cooperative Security Locations) 등으로 분류하여 운영한다는 것에 있다.⁶¹ 여기서 주요 작전기지(MOB)란 미군이 가족과 함께 장기간 주둔하며, 지휘 및 통제시스템과 주택 및 학교 등 생활시스템을 완전히 구비한 기지로서 냉전기 한국·독일·일본 등에 설치했던 기지가 이에 해당된다. 전방작전거점(FOS)은 주로 동맹국 및 우방국에 의해 유지되는 시설로써, 미국은 시설유지의 일부만을 담당하며, 미군은 FOS에 배치된 외국군과 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가족용 시설은 보유하지 않는 형태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안보지점은 유사시 미군 전개에 필요한 기지로서 미군용 시설은 극히 소규모에 불과하며, 이러한 시설의 유지관리는 기지제공국이 담당한다.

60- Douglas J. Feith,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Transforming the U.S. Global Defense Posture" (December 3, 2003) <www.defenselink.mil/speeches/2003/sp20031203-0722.htm>.

61- 福田毅, "米軍の变革と在日米軍の再編," 『調査と情報』, 第480号 (東京: 國立國會圖書館, 2005年 5月 13日), pp. 1~2. 또한, 미국은 해외에 설치된 기지를 전략 전개거점(PPH: Power Projection Hub), 통합전방작전기지(JFOS: Joint Forward Operating Sites), 통합안보협력시설(Joint Cooperative Security Location), 통합사전집적 기지(Joint Preposition Sites), 그리고 중계기지 등 6개의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江畑謙介, 『米軍再編』 (東京: (株)ビジネス社, 2005年 6月), pp. 116~120.



이와 같은 구상은 미국의 해외기지 재편으로 구체화되었는데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GPR의 전체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⁶² 우선, 한국·일본·독일·이태리·영국에 설치된 주요작전기지(MOB)는 통합하여 운용한다. 둘째, 이러한 기지 체계하에서 미군을 순환 배치하며, 필요한 장비는 이들 기지에 사전적으로 배치하며, 기지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방작전거점(FOS)과 협력적 안보지점(CSL)을 새롭게 확보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시아지역에는 일본과 한국에 설치된 기지와 군부대는 통폐합하는 한편, 해병대를 추가로 전진배치하며, 유럽지역에 대해서는 조기에 전력투사가 가능한 경장비를 보유한 지상군과 특수부대를 증강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중동지역에 대해서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확보된 FOS와 CSL 등의 군사기지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입각하여 미국은 해외에 설치된 군사기지에 대한 재편과 함께 병력 조정을 단행하였다. 예를 들면, 유럽주둔 미군 병력에 대한 재편은 독일 주둔 미 제1 기갑사단과, 제1 보병사단을 본토로 철수하는 한편, 주독 미 공군부대를 터키로 이전시키는 것 등으로 구현되었다.⁶³

파이스(Douglas J. Feith)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군사기지재편에 대해 “냉전이 우리는 어느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하여야 할지를 사전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지역에 병력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어디에서 전쟁이 발생할 것인가 불확

⁶²- Donald H. Rumsfeld, “Prepared Testimony of U.S. Secretary of Defens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September 23, 2004), p. 5; 福田毅, “米軍の变革と在日米軍の再編,” 『調査と情報』, 第480号 (東京: 國立國會圖書館, 2005年 5月 13日), p. 2에서 재인용.

⁶³- 江畑謙介, 『米軍再編』 (東京: (株)ビジネス社, 2005年 6月), p. 83.

I
II
III
IV
V
VI
VII
VIII

실하다. 따라서 불확실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은 주둔정책을 변경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부대 운용 정책을 신속 전개 방식으로 변경하여야한다”고 언급하였다.⁶⁴ 새로운 불확실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GPR은 해외배치 미군을 주둔군 개념에서 벗어나 기동군 개념으로 전환하고 기동화·신속화·경량화하여 원거리 투사능력을 갖추도록 재편성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군사변혁은 결과적으로 해외주둔 군사기지 재편을 수반하며, 해외기지 재편은 불가피하게 동맹국과의 관계조정을 수반하고 있다. 미국 으로서는 위협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군사적 대응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동맹국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군사변혁과 함께 동맹국의 획기적인 전력증강 및 역할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동맹국과 공동의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군사적 협력에 필요한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써 미국의 동맹국들은 자국의 군사전략과 군사력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GPR의 전략적 구상에 입각하여 미국은 2003년 초부터 일본 및 한국 정부와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위한 협상을 전개하였다. 아시아지역에 주둔한 미군 재배치의 핵심적인 요소는 중국의 세력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동북아에 집중된 미군을 일본 최남단 및 괌(Guam) 등으로 재배치하는 것이다.⁶⁵

⁶⁴- “U.S. May Halve Forces in Germany: Shift in Europe, Asia is Aimed at Faster Deployment,” *Washington Post*, March 25, 2004, p. A01.

⁶⁵- Zalmay Khalilzad, (et. al.), *The United States and Asia: Toward a New Force Posture* (Santa Monica: RAND, 2001), pp. 63~78.



2. 고이즈미 내각의 적극적 편승전략

일본 경제는 1992년부터 장기불황에 빠져 1990년대 말까지 연 평균 1%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특히 1997년부터는 아시아 금융위기 여파로 심각한 불황을 겪었다. 일본 경제가 10년간 장기침체에 빠진 반면, 중국은 1992년 10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수립’을 정책목표로 설정한 후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중국은 경제적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력 현대화를 꾸준히 추진하였다. 중국은 특히 대만 봉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였는데,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해양국가인 일본의 안보의식을 자극하였다. 이와 더불어 1998년 8월 31일 북한이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둔 대포동 1호 미사일(사정거리 1,500~2,200km)을 발사하자 일본인들의 안보위협 인식은 크게 증폭되었다. 이에 우익보수 세력은 일본이 자체적으로 국방을 수행하는 보통국가로 발전할 것을 주장하였고,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점차 이에 동조하게 되었다.⁶⁶ 이러한 상황에서 2001년 4월 26일 고이즈미(小泉純一郎)가 새로운 총리로 선출되었다.

고이즈미는 ‘21세기 정치대국 일본’을 지향한 국가체제의 정비를 강조하는 한편, 미·일동맹 강화를 주장하는 미국에 편승하여 자위대 방위력 증강을 모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자민당 정무조사회 국방부회(國防部會)는 2001년 3월 ‘일본의 안보정책과 미·일동맹’이란 보고서를 발표하여 미·일 안보체제 강화를 제창하였다.⁶⁷ 2001년

⁶⁶ 일본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미·일안보체제와 자위대 전력을 통해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답변은 1984년 69.2%에서 1991년 62.4%로 하락하였지만, 1997년 68.8%, 2000년 71.2% 급증하여 2006년에는 76.2%까지 대폭 확대되었다. 防衛廳, 『防衛白書』(東京: (株)きょうせい, 平成 18年 8月), p. 398.

6월 워싱턴을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과 개인적 유대를 형성한 고이즈미 총리는 9·11테러 직후 다시 미국을 방문하여 미·일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테러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미군 지원을 위한 자위대 파견 방침을 공언하였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연합군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계기로 2001년 10월 29일 자위대의 활동영역을 공해와 비전투지역으로 확대, 자위대의 주일 미군기지 경비, 영해 불법침입 선박에 대한 사격 등을 허용하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테러대책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자위대는 보급·수송·의료·통신 등의 협조지원, 수색구조, 피난민구원 등의 활동을 실시하며, 활동 지역은 일본 영역, 공해, 동의를 얻은 외국지역으로 전투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으로 한다. 이 법률의 효력은 2년간으로 연장 가능하다.⁶⁸ 그리고 12월에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에 입각하여 구축함, 수송기 등을 인도양에 파견하고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는 다국적군을 지원하였다.

결프전 당시 자위대 참가를 기피함으로써 받은 비난을 상기하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자 즉시 자위대 파병을 결정한 것이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에 대한 공격을 본격화하자 일본은 파키스탄 등 아프가니스탄 주변 국가들에 대한 경제지원을 실시하여 미국 주도의 반테러 전쟁을 후원

67- 自民党國防部會, 『わが國の安全保障政策と日米同盟』, 2001年 3月 23日 <www.asyura.com/sora/bd12/ms_g/900.html>; 박영준, “21세기 미·일동맹의 변환과 일본 방위체제 변화,” 『국가전략』, 제13권 2호 여름호, 통권 40호 (2007), pp. 32~33.

68- 김성철, “제3장, 미·중·일관계와 일본외교,” 김성철 편, 『미·중·일관계와 동북아 질서』 (성남: 세종연구소, 2003), p. 112.



하였다.⁶⁹ 또한 아프가니스탄 난민 지원을 위한 경제원조 방안을 제시하고 전쟁이 종결되면 경제재건을 위해 적극 공헌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미군에 대해 후방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테러활동의 무대가 되는 지역 국가들에 대한 경제원조도 실시하여 미·일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을 공고히 하였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종결된 후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게 된 미국은 일본 정부에 대해 이지스함과 P-3C 초계기 등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과 관련한 협력 요청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당초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및 국내 여론을 감안하여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즉, 일본은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 무기사찰 수용을 관철시키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2002년 11월 8일 UN 안보리에서 대이라크 무기사찰 결의안이 승인되자 일본은 이를 계기로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2003년 7월에는 「이라크지원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2004년 1월 9일 육상자위대를 이라크에 파견하였다.

일본 정부는 그간 자위대의 군사력 사용에 대해서 헌법해석을 달리하는 이른바 “해석개헌”을 통해 정당성을 부여하였다.⁷⁰ 그러나

69- Bates Gill, “September 11 and Northeast Asia: Change and Uncertainty in Regional Security,” *The Brookings Review*, Vol. 20, No. 3 (Summer 2002), pp. 43~46, <www.brook.edu/press/REVIEW/Summer_2002/gill.htm>.

70- 일본정부의 헌법해석(해석개헌)의 예로서 “법은 자위권을 부정하지 않는다,” “헌법상 자위권을 인정하는 한 자위임무를 담당할 자위대도 합헌적이다,” “적이 미사일로 공격해 올 것이 감지된 경우 알아서 자멸할 수만은 없으며, 따라서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 등을 들 수 있다. 朝雲新聞社, 『防衛ハンドブック』(2005), pp. 590~603.

I
II
III
IV
V
VI
VII
VIII

2001년에 제정한 「테러대책특별조치법」과 2003년 「이라크지원특별조치법」은 평화헌법의 확대해석이 한계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두개 특별조치법은 1990년대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 활동 및 해외파병과는 법적근거에서 차이가 있다. 「주변사태법」처럼 「미·일 안보조약」에 근거한 것도 아니며, 「PKO협력법」처럼 UN 활동에 근거한 것도 아니다. 특히 ‘미군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이라는 새로운 범주의 군사활동에 대해 자위대를 파견하고, 자위대의 후방지원을 지리적 개념이 아닌 ‘대테러 활동이라는 상황적 개념’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이와 같이 기존의 법적근거를 벗어나서 자위대 파병의 지역적 한계를 확대한 것은 지금까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헌법해석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⁷¹

고이즈미 내각은 미국의 반테러 전쟁에 적극 협력하며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유사시 자위대의 출동에 필요한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유사법제를 제정하였다. 유사법제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이 발생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정한 법률을 의미한다. 2003년 6월 6일 일본 국회는 「무력공격사태대처법」, 「안전보장회의설치법개정안」, 「자위대법개정안」 등 유사법제 3법안을 통과시켰다. 「자위대법개정안」은 자위대의 주일미군시설 경비를 위한 경비출동을 신설하고, 치안활동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해상경비활동시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자위대의 무기사용이 보다 자유로워졌다.⁷²

71. 조세영, 『봉인을 떼려하는가: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본 일본의 헌법개정 문제』, pp. 79~81.



<표 III-2> 일본의 유사법제관련법 체계

구분		법률명	제정 일자
관련 7법	내각부 소관	무력공격사태시 국민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2004.6.18
		무력공격사태시 미군행동에 수반된 일본이 실시할 조치에 관한 법률	
		무력공격사태시 특정공공시설 등 이용에 관한 법률	
	방위성 소관	무력공격사태시 외국군용 물자의 해상수송 규제에 관한 법률	2004.6.14
		무력사태시 포로 취급에 관한 법률	
		무력공격 사태시 자위대 대처를 위한 자위대법 개정 법률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관련 법률	
관련 협정	외무성 소관	자위대와 미군간 후방지원, 물자/용역의 상호제공 협정 개정 협정	2004.7.14

자료: 日本首相官邸, 『有事法制關聯法』 <www.kantei.go.jp/jp/singi/hogohousei/kakuho.html> 참조 작성.

유사법제 관련법은 <표 I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력공격사태시 일본의 평화와 독립 및 국민안전확보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한 법률 체계로서 ① 무력공격사태시 국민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② 무력공격사태시 미군행동에 수반된 일본이 실시할 조치에 관한 법률, ③ 무력공격사태시 특정공공시설 등 이용에 관한 법률, ④ 무력공격사태시 외국군용품의 해상 수송 규제에 관한 법률, ⑤ 무력사태시 포로 취급에 관한 법률, ⑥ 무력공격 사태시 자위대

⁷²- 김성철, “제3장, 미·중·일관계와 일본외교,” 김성철 편, 『미·중·일관계와 동북아 질서』, p. 112.



대처를 위한 자위대법 개정 법률, ⑦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관련 법률 등 7개 법률을 의미한다. 이들 7개 법률은 동 기본법이 제정된 이듬해인 2004년 6월에 국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논의에 그쳐왔던 자위대의 방위출동과 관련된 각종 법률을 정비하게 되었다.



IV

주일미군 재편 협상의 특징과 내용



1. 미·일동맹 재조정 협상과정의 특징

부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양국의 전략적 공동이익과 더불어 개인적 친분을 기초하여 미·일동맹을 공고히 하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 6월 30일 부시 대통령과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전략적 대화를 강화할 것에 합의하였다. 9·11 테러사태가 발생한 직후 고이즈미 총리는 다시 워싱턴을 방문하여 9월 25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하였다. 고이즈미 총리를 신뢰하게 된 부시 대통령은 개인 소유인 크로퍼드(Crawford, Texas) 목장 초대하여 2003년 5월 22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개인적 유대를 과시하며 이라크 재건 등 세계적인 문제에 미·일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2004년 9월 21일 유엔 총회를 계기로 개최된 뉴욕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유엔 개혁 및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에 대해 견해를 같이하였다. 그리고 주일미군 재편에 관한 기본 입장에 동의함으로써 당시 지연되고 있던 미·일동맹 재조정 협상에 탄력을 부여하였다.⁷³ 이와 같이 고이즈미 총리는 2006년 9월 임기 말기까지 총 14회의 빈번한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부시 대통령과 개인적 유대를 쌓으며 미·일동맹을 강화시켜 나갔다.⁷⁴

미·일 정부 차원의 협력은 아미티지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지일파 인사들이 부시 행정부의 요직에 대거 임용됨으로써 강화되었다. 아미티지는 국무부 부장관, 패터슨(Torkel Patterson)은 백악관 국

⁷³-Embassy of Japan, Washington D.C., *Japan-U.S. Relations, Overview* (December 1, 2004) <<http://www.us.emb-japan.go.jp>>.

⁷⁴-『조선일보』, 2006년 7월 1일.

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그린(Michael J. Green)은 NSC 보좌관, 켈리(James Kelly)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각각 임명되었다.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2001년 5월 MD 설득외교의 일환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미·일동맹을 미·영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그 후 미·일 차관급 전략대화의 미국측 대표로 줄곧 참가하여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여 적극적으로 안보역할을 떠맡을 것을 강조하였다.⁷⁵ 그린 동아시아담당 보좌관은 일본도 총리 직속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창설하여 미·일 양국간 안보협력을 보다 긴밀히 할 것을 주장하였다.⁷⁶ 한편, 체니(Richard Cheney) 부통령, 럽시펠드(Donald Rumsfeld) 국방장관 그리고 신보수주의자로 평가 받고 있는 월포위츠(Paul Wolfowitz) 국방부 차관은 중국에 대해 강경자세를 보이며 미·일동맹 강화를 지지하였다. 특히 월포위츠는 대만해협 유사시 미국의 개입 여부를 모호하게 해 둠으로써 중국의 대만에 대한 공격 의지를 억제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할 것을 강조하였다.⁷⁷

미·일 양국간 안보정책을 협의하는 공식 채널은 <표 IV-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SCC, 2+2회의)가 있다. SCC에는 미국측에서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일본측에서는 외무장관 및 방위청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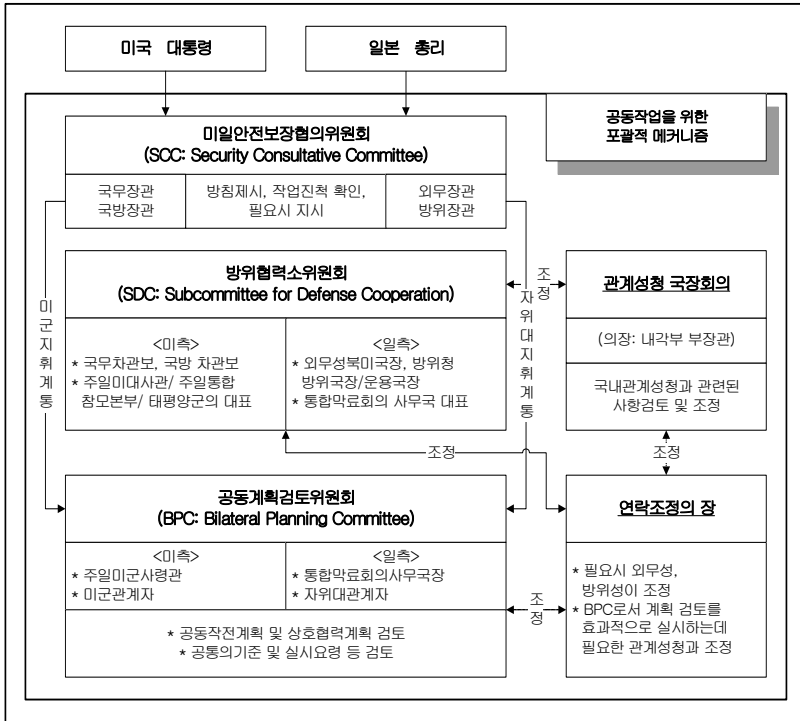
75. 아미티지 미국무부장관은 2004년 7월 21일 미국을 방문한 자민당의 나카가와 자민당 국대위원장 등과 화담하는 자리에서 미·일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부정하고 있는 일본 헌법 제9조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일본의 자유법조단은 7월 30일 이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憲法9條を邪魔者抜くするアミティジの発言に抗議する, 2004年 7月 30日 <www.jlaf.jp/seimei/sei_20040805.html>.

76. 스노하라 쓰요시(春原 剛) 저, 이용현·조진구 공역, 『워싱턴의 사쿠라: 미국내 지일파에 관한 심층 분석 보고서』(서울: 리북, 2007), pp. 24~25.

77. 위의 책, p. 82~88.



<표 IV-1> 미·일간 안보협력 위한 포괄적 메카니즘



자료: 防衛廳, 『防衛白書』(東京: きょうせい, 平成 18年 8月), p. 212.

2002년 12월 16일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는 ① 국제테러,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의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 ② 군사기술의 비약적 향상과 각종 기술의 통합화 진전 등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양국의 안보정책에 관한 긴밀한 협의를 강화할 것에 합의하였다. 미국은 이 SCC 회의에서 미·일동맹을 단순히 주일 미군과 자위대의 연합전력을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안보환경에 비추어 미국과 일본의 방위정책과 국가안보정책을 양국이 함께 재검토하고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동

- I
- II
- III
- IV
- V
- VI
- VII
- VIII

맹의 변혁(Alliance transformation)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제의하였고, 2003년 봄 차관보급(심의관급) 회의를 설치하고 실무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⁷⁸ 미국은 아미티지 보고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미·일동맹을 미·영동맹의 수준으로 심화시키겠다는 의도에서 동맹의 변혁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나, 미·일관계를 미·영관계 수준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역사적, 지정학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우호적인 정치적 발언으로 생각하고 있던 일본은 미국측이 제시한 ‘동맹의 변혁’에 대해서도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⁷⁹ 그러나 2003년 11월 SCC 회의에서, 미국측이 육군 제1군단 사령부의 일본내 자마(座間)기지 이전 및 괌 소재 미 공군 제13 사령부의 요코다 소재 공군사령부의 통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이를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은 일본측은 기지재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일단 유보할 것을 제의하였다. 특히 미 육군 제1군단 이전 문제에 대해 미·일간 입장 차이를 보였다. 워싱턴주 포트루이스에 있는 미 육군 제1군단은 아태 전역을 작전 영역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대인 바, 이 부대의 작전범위는 ‘일본 영토 및 극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일 안보조약』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일본측은 미 육군 제1군단이 일본내 기지로 이전할 경우 주일 미군기지의 전략적 성격이 전환되고 이와 더불어 일본의 군사적 활동영역이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확장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⁸⁰

78- 미·일동맹 변혁과 주일미군 재편을 위한 협상과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송화섭, “미·일동맹의 변혁과 보통동맹화,” 『국방정책연구』, 제71호 봄호 (2006), pp. 43~67.

79- 위의 글, pp. 43~67.

80- 한국국방연구원, 『2004-2005 동북아 군사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5), pp.



미·일동맹 변혁과 주일미군 재편에 대한 협상이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지자, 미·일 양국은 2004년 10월 이후 공통의 전략목표에 대한 협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SCC는 2005년 2월 19일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및 아·태지역의 안보 불확실성에서 초래되는 위협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양국의 공통의 전략목표를 공표하였다.⁸¹ 그 후 미국측은 육군 제1군단의 활동범위에 대해 명시하지 않기로 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본 측이 이를 받아들여 제1군단을 일본의 자마기지로 이전하는데 합의하였다.⁸² 그 결과 2005년 10월 29일 「미·일 안전보장협의 위원회」는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임무·능력을 검토하고 병력태세의 재편 계획에 대한 합의사항을 담은 「미·일동맹의 미래를 위한 변혁과 재편」이라는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다.⁸³ 그리고 2006년 5월 1일 2014년까지 주일미군과 자위대 재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재편실시를 위한 미·일 로드맵」을 최종적으로 발표하였다.⁸⁴

54~55; 미·일간의 협상과정과 양측간 이견에 대해서는 上田哲, 『戦後60年軍擴史: 1945-2006』(東京: (株)データバンク, 2006年 8月 15日), pp. 792~801.

⁸¹- "Joint Statement 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Washington D.C.: February 19, 2005) <www.mofa.go.jp/region/n-america/us/security/scc/joint0502.htm>.

⁸²- 박영준, "21세기 미·일동맹의 변환과 일본 방위체제 변화," pp. 35~36.

⁸³-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Document, "U.S.-Japan Alliance: Transformation and Realignment for the Future" (October 29, 2005) <www.mofa.go.jp/region/n-america/us/security/scc/doc0510.htm>.

⁸⁴- *United States-Japan Roadmap for Realignment Implementation* (May 1, 2006) <www.mofa.go.jp/region/n-america/us/security/scc/doc0605.htm>.

2. 미·일의 국익과 전략적 공동목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세 가지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다.⁸⁵ 첫째, 중국·러시아 등 어느 한 국가가 지역 패권세력으로 부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패권세력의 부상은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둘째, 동아시아지역의 질서와 안정이 유지하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의 무력분쟁 등 심각한 불안정은 미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에도 유해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세계경제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동아시아는 1990년대 서유럽을 추월해 이제 미국의 국제 상거래 및 투자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

한편, 일본은 미·일 동맹체제하에서 잠재적 위협에 대한 국가안보 증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 자원 및 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국가이익으로 추구하고 있다.⁸⁶ 일본은 미·일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의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또한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도모하는데 미국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미·일동맹을 명분으로 군사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미·일 양국은 이와 같은 국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

⁸⁵- Ted Galen Carpenter and Doug Bandow, *The Korean Conundrum: America's Troubled Relations with North and South Korea* (New York: Palgrave, 2004); 테드 게일런 카펜터·더그 밴도 저, 유종근 역, 『한국과 이혼하라』 (서울: 창해, 2007), p. 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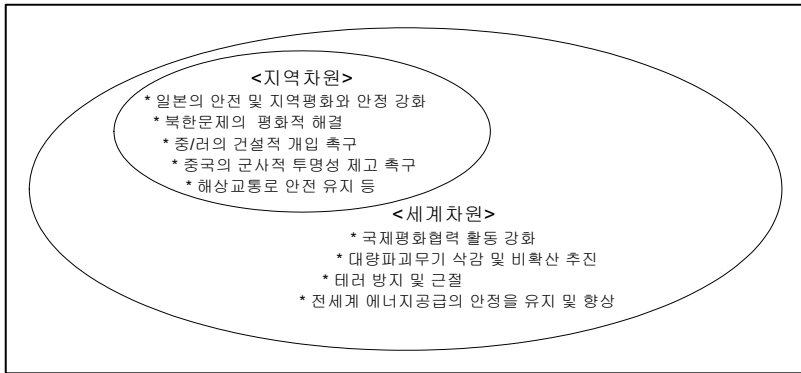
⁸⁶- 배정호,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 재편』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p. 5~6.



적 공동목표를 설정하였다.

2005년 2월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가 제시한 공통의 전략 목표는 <그림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차원과 세계차원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림 IV-1> 미·일 공동전략 목표의 범위 및 내용



자료: 外務省, 『共同發表 日米安全保障協議委員會』(2005年 2月 19日) 참조 작성.

지역차원에서 양국의 공동목표는 ① 일본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함과 동시에 미·일 양국에 영향을 주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을 유지하며, ②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고, ③ 핵 개발·탄도미사일과 관련된 활동·불법활동·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등 인도적인 문제를 포함한 북한과 관련된 모든 현안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④ 중국이 지역 및 세계적으로 책임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환영하고, 중국과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며, ⑤ 대만 해협을 둘러싼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촉구하고, ⑥ 중국이 군사분야에서 투명성을 증진시키도록 촉구하며, ⑦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 I
- II
- III
- IV
- V
- VI
- VII
- VIII

러시아의 건설적인 관여를 촉구하고, ⑧ 북방영토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러·일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며, ⑨ 평화롭고 안정되고 활력 있는 동남아시아를 지원하고, ⑩ 지역 관계의 포괄적인 개방성 및 투명성의 중요함을 강조하며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 발전을 환영하며, ⑪ 불안정을 초래하는 무기 판매와 군사기술 이전을 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⑫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다.

지구적 차원에서 양국은 다음과 같은 공동목표에 합의하였다. ① 국제사회에서 기본적인 인권·민주주의·법치주의 등 기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② 세계적인 평화 안정 및 번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평화협력활동 및 개발지원에 있어서 미·일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면서, ③ NPT·IAEA 등 국제레짐과 PSI에 관한 주도권의 신뢰성 및 실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의 삭감과 불확산을 추진하며, ④ 테러를 방지하고 근절하고, ⑤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⑥ 세계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 및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기존의 미·일 안보협력의 범위는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한정되었고, 위협의 실체를 한반도의 정세불안, 핵무기 등 군사력의 집중, 영토문제의 존재, 지역분쟁 발생 가능성 내재, 대량살상무기(WMD) 및 운반수단의 확산이라는 것으로 규정하였을 뿐 특정 국가를 위협의 대상국으로 지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 2월 공동성명에서는 지구 전역에 걸쳐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저지하며, 에너지공급원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 즉, 미·일 안보체제의 적용범위를 세계 전역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중국의 군사적 불투명성, 대만해협 사태 등 위협

실체를 특정국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아·태 지역 차원의 공통전략목표 12개 중에서 - 세계적·지역적 현안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환영, 중·대만 관계에 관련된 문제들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중국의 군사적 투명성 증진 촉구 등 - 3개가 직접적으로 중국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중국과 대만문제에 관한 미·일의 전략적 공동대응이 미·일동맹 변혁과 주일미군의 재편계획의 핵심적인 고려사항임을 시사하고 있다.

3. 주일미군 재편 합의내용

가. 재편 시점의 주일미군 편제

미·일동맹에 대한 재조정이 이루어졌던 시점에서 주일미군은 주 NATO 미군이나 주한미군과 달리 육군보다는 해병대, 해군, 공군 등 기동전개 능력이 뛰어난 부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2005년 6월 현재, 주일미군은 <표 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만 7,24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중 육군은 전체의 4.6%인데 비해 해병대와 공군은 각각 38.8%와 36.1%를 점하고 있으며, 나머지 20.4%는 해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주일미군기지는 해·공군과 해병대위주로 편재된 기동성을 강조한 기지라 할 수 있다.

<표 IV-2> 주일미군의 구성내용(2005년 6월)

구분	육군	해병대	해군	공군	계
규모	1,720	14,460	7,610	13,450	37,240
구성비	4.6%	38.8%	20.4%	36.1%	100.0%

자료: United States Forces Japan, U.S. DOD Personnel in Japan <http://www.usfj.mil/j_index.html> 참조 작성.

- I
- II
- III
- IV
- V
- VI
- VII
- VIII

육군·해군·공군·해병대로 구성된 주일미군 가운데 공군을 제외한 모든 부대의 임무는 주일 미군사령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⁸⁷ 요코다 기지에 위치한 주일 미군사령부는 『미·일지위협정』(SOFA)과 미·일 공동훈련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주일미군의 전투태세와 관련된 업무, 그리고 미군 가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일 미 육군은 수도권인 카나가와현(神奈川縣)의 자마시(座間市)에 사령부를 두고 있다. 주일 미육군은 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군수, 보급 등 후방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9 전역 육군지역사령부’와 주일 미육군사령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일 미육군은 방위시설의 유지 및 관리, 유사시 물자관리, 기지관리 임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제10 오키나와지역지원군, 제1대대, 제1특별전대, 제17지역지원군 등을 지휘하고 있다.⁸⁸

또한 주일 미 해군은 일본방위에 투입되는 미해군 7함대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⁸⁹ 주일 미해군 사령부는 카나가와현(神奈川縣)의 요코즈카시(横須賀市)에 위치하고 있으며, 요코즈카(横須賀)기지는 항모 키티호크 등 다수의 전함이 모항으로 사용 중이며, 핵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탑재한 원자력 잠수함도 이곳에 기항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일 미해군

⁸⁷- 자세한 것은 United State Forces Japan, *U.S. Forces in Japan* <<http://www.usfj.mil/>>.

⁸⁸- 주일 미 육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長島昭久, 『日米同盟の新しい設計図(第2版)』(東京: 日本評論社, 2004년 11월), pp. 104~106.

⁸⁹- 미 해군의 전방전개 계획을 토대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제7함대는 태평양함대의 지휘 하에 있으며, 승무원 14,660명, 17척의 함정에 100여기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다.



은 도쿄를 중심으로 남서지역에 위치한 나가사키현(長崎縣)의 사세보(佐世保)기지, 최남단지역인 오키나와(沖繩)의 카데나(嘉手納), 수도권인 아츠키(厚木), 북부지역인 미사와(三澤) 등지에 군항과 군공항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반도 및 중국과 가까운 사세보(佐世保)기지는 4척의 기습상륙함이 배치되어 있다.⁹⁰

그리고 주일 미 해병대는 주로 오키나와현(沖繩縣)에 주둔하면서 서태평양과 인도양 지역에서의 미군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일 미해병대는 사령부를 오키나와현의 캠프 코트니(Camp Courtney)에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주력부대인 제3해병원정대(III MEF)는 오키나와소재 제3해병사단과 일본 북부지역인 이와쿠니에 배치된 제1해병항공단 등을 관장하며, 해병대 항공 및 육상 임무부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이들 부대에 대한 지휘 및 조정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와쿠니(岩國)기지에 배치된 제1해병항공단에는 미국 본토 이외 지역으로는 유일하게 수륙양용군이 배치되어 있다. 미국은 해병대에 3개의 수륙양용군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중 2개 부대는 미국 본토의 동해안과 서해안에, 나머지 하나는 바로 일본의 이와쿠니기지(岩國)에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는 주로 함정을 통해 이동하지만, 이의 신속화를 위해 항공부대도 운용하고 있다.⁹¹

이들 부대와 달리 미국의 태평양공군사령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미 제5공군은 일본 방위와 함께 미국의 세계전략의 구성요소로서 항공방어 임무와 항공수송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임무

⁹⁰- 주일 미 해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長島昭久, 『日米同盟の新しい設計図(第2版)』(東京: 日本評論社, 2004年 11月), pp. 109~112.

⁹¹- 주일 미 해병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長島昭久, 『日米同盟の新しい設計図(第2版)』(東京: 日本評論社, 2004年 11月), pp. 112~115.

I
II
III
IV
V
VI
VII
VIII

를 담당하고 있는 미 제5공군은 요코타(橫田)기지에 사령부를 두고 있으며, 주로 일본 북부지역과 오키나와 지역에 부대를 전개하고 있다. 즉 제5공군은 일본 본토의 북부지역인 아오모리현(靑森縣)의 미사와(三澤)기지(제35전투항공단)에 F-16전투기부대를, 그리고 오키나와현(沖繩縣)의 카데나(嘉手納)기지(제18항공단 및 제353특수작전군)에 F-15전투기부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 부대에는 130여기의 전투기와 10여기의 정찰기가 배치되어 있다.⁹² 이상과 같은 주일 미군기지체계는 2005년 미·일 양국간 합의에 의해 재편성될 계획이다.

나. 주일미군기지 재편 내용

2005년 10월 29일 공개된 「미·일동맹, 미래를 위한 변혁과 재편」으로 명명된 중간보고서의 제2장은 양국의 역할과 임무를 재설정하고, 양국군 부대간 협력에 필요한 군사력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 병력태세의 재편은 주일미군과 자위대간의 협력증진계획과 양국군의 부대재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일동맹 변혁과 재편 보고서」는 유연하고 즉응성(卽應性)있는 지휘·통제를 위한 주일미군과 자위대 사령부 사이의 연계 및 상호 운용성 향상이 양국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중핵적(中核的) 능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6년 5월 1일 「미·일 안보협의위원회」는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된 「재편실시를 위한 미·일 로드맵」을 발표하

⁹² 2005년 6월 현재 주일미군에 배속된 병력은 총 37,240명이며, 육군 1,720명, 해병대 14,460명, 해군 7,610명, 공군 13,450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제7함대의 병력 14,660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 제7함대는 주일미군사령관이 아닌 태평양함대사령관의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였는데 그 내용은 <표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9개 분야로 요약되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미·일간 통합운용조정기능의 강화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양국이 공동 지휘소로 이용할 ‘공동통합 운용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즉, 주일미군은 요코타(横田) 비행장에 일종의 연합사령부격인 ‘공동통합운용조정소’(共同統合運用調整所)를 설치하고, 이를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양국간 근접성과 상호 조정성, 그리고 상호 운용성을 확보한다. 여기서 공동통합조정소란 일종의 연합사령부로서 이는 1997년에 합의된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에서 표현된 미·일 공동조정소를 포함한 ‘미·일간 조정메카니즘’을 한층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⁹³

(2) 미 육군 사령부의 기능 강화

이를 위해 미국은 수도권인 카나가와현(神奈川縣)의 캠프 자마(座間)에 위치한 주일 미육군사령부를 작전사령부로 대폭 확대하고 현대화한다는 것이다.⁹⁴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워싱턴 주에 소재하고 있는 미 육군 제1군단을 군단과 사단의 중간 규모인 미래형 사단의 거점사령부(UEx)로 재편하고, 2008년까지 자마(座間)로 이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일본 육상자위대는 테러

93.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은 작전에 관련된 모든 활동 및 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양국간 지휘 및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미·일간 공동조정소’의 활용을 포함하여 조정메카니즘을 상호 긴밀하게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4. 1997년 1월 현재, 자마기지에는 주일 미 육군 및 제9전역 육군지역사령부, 제1군단 연락사무소, 주일 미 육군 제17지역지원군과 예하 부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주일 미 육군의 중추로서 각종 지휘명령을 통괄하고 있다. 神奈川縣渉外部基地對策課, 『神奈川縣の米軍基地』(神奈川: 茂手木印刷, 1997년 3월), pp. 92~97.



등에 대비하기 위해 2012년까지 ‘중앙즉응집단 사령부’ (中央即應集團司令部, CRF: Central Readiness Force Command)를 창설하여 캠프 자마에 주둔시키기로 하였다.

<표 IV-3> 미·일간 주일 미군기지 재편 합의내용

분야	조정 내용
공동통합운용 조정 기능 강화	· 요코타 비행장에 미·일 공동통합운용조정소 설치 · 양국군간 인접성, 조정, 상호운용성 확보
미 육군사령부의 능력 개선	· 주일미육군사령부가 입지할 캠프 자마 기지를 통합임무 가능한 작전사령부 조직으로 현대화 · 이를 위해 주일미군 시설·구역에 대해 조정, 육상자위대 중앙즉응집단 사령부를 캠프 자마에 설치 · 캠프 자마, 사가미 종합보급창의 효과적 효율적 사용 가능성 모색
미·일간 항공 사령부의 통합	· 후추 소재 항공자위대 항공총대사령부와 관련 부대를 요코타 비행장내 미 제5공군 사령부와 인접 설치 · 공동통합운용조정소를 통해 관련 센서 정보가 공유
비행관제업무 자위대 이관	· 요코타기지에 대한 미군관제 구역 축소 · 요코타 및 카데나 기지 관제 업무를 자위대에 이관
미사일 방위력 향상	· 미군의 X밴드·레이더·시스템을 일본에 전개 · 미국은 필요시 PAC-3와 SM-3 등을 일본에 전개
미 해병대 재편	· 오키나와주둔 미해병대를 하와이, 괌 및 오키나와에 재배치 · 후텨마 비행장내 회전익기는 오키나와 현내에 재배치 · 후텨마기지 이전계획 재조정 추진(캠프 슈와의 해안선 구역과 이에 근접한 오우라 만의 수역을 묶는 I자형에 대체시설 설치) · 이와쿠니기지에 이주할 KC-130를 해상자위대 가노야(鹿野)기지로 이전 검토 · 긴급시 미군은 항공자위대의 뉴타바루 기지 및 츠이키 기지 사용 · 후텨마 비행장 대체시설에서 부족한 활주로는 민간시설로 대체 · 7,000여명의 해병대와 가족을 오키나와 이외지역으로 이전 - 제3해병 기동 전개 부대(IIIEMF) 사령부는 괌 및 타지역에 이전 - 잔여 해병대는 해병기동전개여단(MEB)으로 축소 - 이전비용은 일본측이 부담 · 가데나 비행장 이남지역의 토지 반환 · 오키나와내 주일미군기지의 자위대와 공동사용 추진

항공모함 함재기의 이와쿠니 비행장으로 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모함 함재제트기 및 E-2C 비행대를 이와쿠니기지로 이주 · 이와쿠니 배치 해상자위대의 EP3, OP3, UP3비행대를 아즈기 기지로 이주 · 미국은 이오지마에서 항공모함 함재기 이발착 훈련 계속 실시 · 가노야 지지에 KC-130 위한 필요시설 정비 · 이와쿠니 비행장의 시설, 인프라 및 훈련 구역의 정비
훈련의 이전	· 카데나, 미사와, 이와쿠니 기지의 훈련기능을 타 기지로 분산
주일미군 시설의 효율적 사용	· 재해구원, 피해복구시 지역사회의 요구충족 위해 사가미 종합보급창 활용

자료: 防衛廳, 『日米同盟 : 未來のための変革と再編』(2005.10.29) 참조 작성.

(3) 미·일 항공사령부의 동일지역 이전

또한 미·일 양국은 각각의 공군사령부를 요코타(横田) 기지로 통합배치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현재 미 제5 공군사령부는 요코타 기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항공자위대의 사령부인 항공총대사령부(航空總隊司令部)는 수도권인 후츄(府中)에 소재하고 있다.⁹⁵ 일본 항공자위대 항공총대사령부는 2010년 도쿄(東京) 소재 미 제5공군사령부가 있는 요코타 기지로 이전함으로써 양국은 업무협조의 신속화를 기하고, 획득된 정보도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요코타 기지에 병치(並置)된 미 제5공군사령부와 항공총대사령부는 ‘공동통합운용조정소’를 설치한다.

⁹⁵ 해상자위대의 항공총대사령부는 항공총사령부, 항공방면대, 기타 직할부대로 편성되어 있는데, 항공총대는 항공자위대의 자동경보단이 수집한 정보에 근거하여 방공전 전체를 장악하고, 전투기와 대공포부대에 대한 전투작전을 통제하고 있다. 항공총대 사령관은 2006년도 말부터 배치될 미사일방어(MD)체제의 지휘관을 겸하면서,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에 대한 발사 명령권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東奥日報』, 2005년 9월 25일.



(4) 주일미군 담당 비행관제 업무의 자위대예의 이관

요코타 기지의 주변공역에서 민간 항공기의 운항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도 금번 주일미군기지 재편 협상의 중요 의제가 되었다. 그간 주일미군은 일본내에서 필요한 비행구역인 관제공역을 관리해 왔는데 이의 이용을 둘러싸고 민간 항공부문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측은 주일미군용 관제공역을 축소하는 한편, 대신 자위대의 관제요원을 요코타 비행장에 배치하기로 하였다.⁹⁶

(5) 미사일 방위태세의 향상

이와 함께 미·일 양국은 일본내 미사일 방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6년부터 최신형 레이더인 X밴드 레이더 시스템(X-Band radar system)을 아오모리현(靑森縣)에 소재한 항공자위대의 샤리키(車力)기지에 배치·운영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는 일본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조기에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미사일 탐지 능력 향상과 함께 미국은 미사일 요격체제를 보강하기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PAC-3)과 스탠다드 미사일(SM-3) 등을 일본 서부지역에 전개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6) 주일 미 해병대의 재편

주일 미 해병대의 신속 전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를 하와이, 괌, 오키나와 등 3개 지역에 재배치

⁹⁶- 長島昭久, 『日米同盟の新しい設計図(第2版)』(東京: 日本評論社, 2004年 11月), p. 108.



하기로 합의하였다. 오키나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미 해병대를 3개 지역으로 분산하는 경우, 그간 오키나와 주민들이 겪어 온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7) 미 항공모함 함재기의 이전

미국은 F/A-18 호넷(Hornet), EA-6B 프라우러(Prowler) 등 항공모함 탑재기와 E-2C 호크아이(Hawkeye) 정찰기를 가나가와(神奈川) 현(縣)의 아즈기(厚木) 비행장으로부터 야마구치(山口) 현에 있는 미 해병대의 이와쿠니(岩國) 비행장으로 2014년까지 재배치한다.⁹⁷ 이는 미 항공모함과 함재기들에 대한 전방 전개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 대신 현재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된 해상자위대의 전자정보수집기(EP-3), 화상정보 수집기(OP-3), 그리고 전자전 훈련지원기(UP-3)⁹⁸ 등을 아즈기 비행장으로 이주시킨다. 동시에 주일미군의 KC-130 수송기와 해상자위대의 KC-130 수송기와 대잠초계기(P-3)를 일본의 서부지역인 해상자위대의 ‘카노야 기지’로 이전하며, 시설소요가 확대된 이와쿠니 및 카노야 기지를 확장하기로 하였다.

97. 아즈기 기지는 카나가와현의 야마토시(大和市)에 소재하고 있다. 미해군 아즈기 사령부, 서태평양함대항공시령부, 제5함대항공단 아즈기 파견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미해군 항공부대항공기에 대한 정비, 보급, 지원을 위한 기지로 알려지고 있다. 神奈川縣渉外部基地對策課, 『神奈川縣の米軍基地』(神奈川縣: 茂手木印刷, 平成 9年 3月). pp. 98~104.

98. OP-3와 UP-3는 모두 P-3C를 모체로 개조되었으며, UP-3D는 훈련용 전파방해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防衛日報, 『自衛隊年鑑』(東京: 防衛日報社, 2002年 11月), p. 390.



(8) 주일 미 공군 훈련장의 분산

주일 미 공군기지인 카데나(嘉手納), 미사와(三澤, 이와쿠니(岩國) 기지에 배치된 항공기에 의한 훈련이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훈련장소를 다른 지역으로 분산한다는 것도 합의되었다. 그간 주일 미 공군의 훈련장 주변 주민들은 소음, 항공기 추락 및 항공기 장착물에 의한 피해에 항의해 왔으며, 금번의 조치는 이러한 피해를 분산시킨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9) 지역주민과 주일미군시설 공동 이용 확대

마지막으로 미국과 일본은 지역사회가 미군시설의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주일미군은 작전에 차질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는 미·일 양국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재해 및 재난 등 긴급사태가 발생하고, 지역사회가 요청하는 경우 주일미군의 사가미(相模) 종합보급창 등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였다.⁹⁹

⁹⁹- 카나가와현(神奈川縣) 사가미시(相模市)에 소재한 사가미종합 보급창은 주일 미 육군 제17지역지원군의 관리하에 물자보관, 무기 수리 등 후방지원업무를 담당해오고 있다. 神奈川縣渉外部基地對策課, 『神奈川縣の米軍基地』(神奈川縣: 茂手木印刷, 平成 9年 3月), pp. 84~87.



V

미·일동맹 재조정 의의와
발전방향



1. 미·일동맹 변혁의 군사적 함의

가.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통합 운용

(1) 주일 미군기지의 동아시아 거점 기지화

미군은 2002년 10월부터 새 통합사령부 체제로 전환하였다. 미 육군은 군단-사단-여단의 편제에서 벗어나 임무를 실행하는 단위를 ‘행동부대’(UA: Unit of Action), 그리고 행동부대를 지휘하는 부대를 ‘작전부대’(UE: Unit of Employment)로 구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¹⁰⁰ 이는 임무와 상황에 맞춰 부대의 형태와 규모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규모 육·해·공군 합동 및 연합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미 육군은 군사변혁을 통해 2010년에는 미래의 전투체계를 갖춘 목표군(Objective Force)을 창설하고 2031년까지 전 육군을 목표군으로 변환시킨다는 계획을 설정하였다.¹⁰¹ 그리고 2003년부터 과도기에는 잠정전력으로써 경보병과 중무장부대의 중간정도의 중장비를 갖춘 신속기동여단으로써 스트라이커전투여단(Stryker Brigade Combat Teams)으로의 변환계획을 추진해 왔다.¹⁰² 이와 같은 군사변혁 계획에 비추어 보면 주일 미군부대도 일단 신속기동여단 형태로 재편성되어 점차 미래의 목표군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¹⁰³

¹⁰⁰- 박휘락, “미군 변혁의 성과와 전망,” 『국제문제』, 4월호 (2007), pp. 30~31.

¹⁰¹- Bruce R. Nardulli and Thomas L. McNaugher, “The Army: Toward the Objective Force,” Hans Binnendijk, *Transforming America's Military*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2002), pp. 101~128.

¹⁰²- Alan Vick, (et. al.), *The Stryker Brigade Combat Team: Rethinking Strategic Responsiveness and Assessing Deployment Options* (Santa Monica: RAND Project Air Force, 2002).

¹⁰³- 목표군이 완전히 갖추어지면 미 육군은 전 세계 어느 곳이나 96시간 이내에 1개

주일미군 재편 계획이 실시되어 가면 워싱턴주에 있는 미 육군 제1군단사령부를 군단과 사단의 중간 규모인 미래형 사단의 작전사령부(UEx)로 재편하고, 2008년까지 일본 자마(座間)기지로 이전하여 유사시 주일 미 육·해·공군의 통합작전을 지휘하는 거점이 된다. 미국의 GPR은 해외주둔 미군을 미래 전쟁에 적합하게 기동화·신속화·경량화 시키고 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작전지역까지 원거리 투사 능력을 갖추도록 군비태세를 변환시키고 있다. 따라서 자마를 중심으로 한 주일 미군기지는 전략적으로 다양한 아·태지역에 전력을 투사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거점(hub)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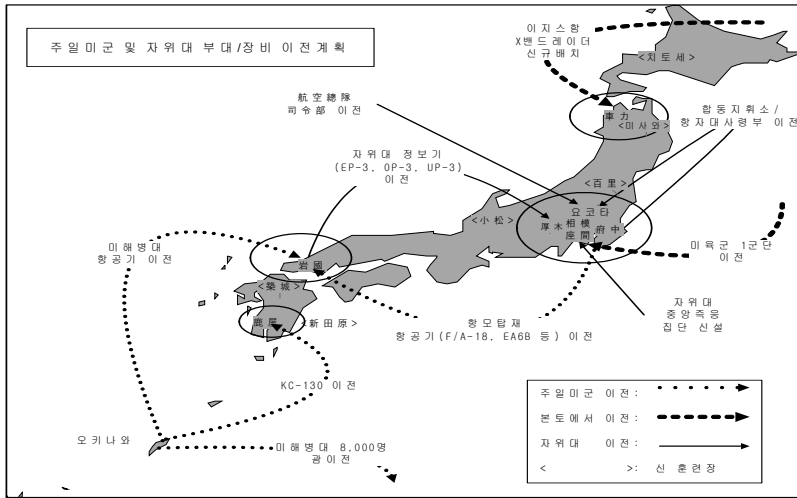
한편, 주일미군 재편은 <그림 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키나와 기지 축소, 본도(本島)기지 확대”라는 특징을 보이면서 한반도와 중국에 인접한 지역으로 집중될 것이다. 일본 본도의 경우 도쿄(東京)를 중심으로 수도권에는 미 육군과 미 공군이, 그리고 한반도와 인접한 서부 및 남부지역에는 주일 미 해군이 집중 배치될 것이다. 주일미군 재편 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미국은 도쿄(東京)를 중심으로 서부지역에 위치한 이와쿠니 기지에는 미 항모의 함재기와 조기경보기가 집중 배치되면서 서남부 지역인 카고시마현(鹿兒島縣)의 미 해군 사세보 기지 인근에는 오키나와(沖繩)로부터 K-130 수송기가 이전 배치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수도권 지역인 요코스카 기지에는 미국의 원자력항모인 키티호크를 대신할 니미즈급 원자력 항모가 2008년부터 배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⁰⁴

전투여단, 120시간 이내에 1개 사단, 30일 이내에 5개 사단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Hans Binnendijk 편저, 배달형·하광희·김정익·문대철 역, 『미래전에 대비하여 미국은 어떻게 군사력을 변화시키고 있나: *Transforming America's Military*』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4), pp. 165~188.

¹⁰⁴- 2005년 10월 27일 주일 미대사와 일본 외무장관은 동 사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



<그림 V-1> 주일 미군기지 재배치 예정도



이와 같은 주일미군의 전력재배치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중국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수집하고 위협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사가미(相模) 종합보급창에 대한 확장이 예정되고 있다. 따라서 주일미군기지과 자위대 기지에 대한 재편이 완료되는 2014년이 되면, 요코즈카 해군기지,¹⁰⁵ 요코타 항공기지, 사가미 종합 보급창¹⁰⁶ 등을 중심으로 태평양지역에 있어 미국의 최대 전략기지로 변모될 것으로 평가되

로 알려지고 있다. <mofa.go.jp/mofaj/press/kaiken/gaisho/g_0510.html>.

¹⁰⁵- 미 항공모함이 요코즈카 미 해군기지를 모항으로 사용함으로써 태평양을 횡단하는데 편도 2주일, 왕복 1개월 정도의 기간 단축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江畑謙介, 『米軍再編』(東京: (株)ビジネス社, 2005년 6월), p. 290.

¹⁰⁶- 사가미 보급창은 요코타 항공기지, 요코하마의 노스 독과 함께 이른바 일본내 최대의 보급정비기지로 평가되고 있다. 江畑謙介, 『米軍再編』(東京: (株)ビジネス社, 2005년 6월), p. 309.

고 있다.

(2) 자위대와 주일미군 공동작전 계획 구체화

일본은 탈냉전기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에 신속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해·항공 자위대를 통합을 추진해 왔다. 2004년 12월에 작성된 「신 방위계획 대강」은 자위대의 역할을 본토방위, 미군과의 협력, 그리고 국제평화활동을 위한 통합적 안보로 설정하고 기존의 ‘기반적 방위력’ 구상을 대폭 수정하여 다기능·탄력적·실효성 있는 방위력으로 정비할 것을 강조하였다.¹⁰⁷ 자위대의 다기능·탄력적 운영의 필요성이 증대하자 일본 정부는 2006년 3월 27일 통합막료회의 대신 통합막료감부를 신설하고 3자위대의 통합운영체제로 전환하였다.¹⁰⁸ 현재 500여명으로 편성된 통합막료감부는 유사시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육상·해상·항공자위대 가운데 필요한 인원을 동원하여 통합임무부대를 편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위대의 통합운영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미·일 군사협력도 과거와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본은 그간 작전(G-3) 분야에서 미군의 동아시아 전략의 근거지로써 자위대는 주일미군의 일본 이외지역으로의 전력 투사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자위대의 통합운영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일본의 역할은 향후 단순한 지원형태가 아니라 운용의 핵심인 지휘·통제의 통합화와 혼

¹⁰⁷- 박철희, “일본 신방위계획 대강의 평가,” 『2005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6. 2), pp. 271~286.

¹⁰⁸- 『ASAGUMO News』, 『朝雲新聞』, 2006年 3月 30日 <www.asagumo-news.com/news.htm>.



련의 일체화 등을 통해 공동작전수행능력과 장비의 상호운용능력을 제고시키게 되었다.¹⁰⁹

주일미군 재편계획은 양국간 상호 정보공유와 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위대의 기지재편을 수반하고 있다. 주일 미 육군의 전력증강이 예상되는 자마(座間)기지에는 중앙즉응집단사령부(CRF)가 신설될 것인데, 동 부대는 2007년 3월 28일 3,200명의 자위대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출범되었다.¹¹⁰ 또한 요코다 기지에는 도쿄도에 소재하고 있는 항공자위대의 항공총대(사령부)가 이전될 것이며, 아츠키(厚木)기지에는 그간 이와쿠니(岩國)기지에 배치되었던 해상자위대의 비행대가 이전 배치되는 대신, 이와쿠니(岩國)기지는 미해병대 기지로 재정비될 것이다. 또한 자위대는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인 카데나기지와 캠프 한센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자위대의 남방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자위대의 군사기지 재편은 그간 육상자위대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추진해 온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이라는 부대재편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¹¹¹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통합운용을 통하여 추진할 공동작전계획에 관해서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다. 다만, 미·일 양국이 공동작전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것은 1978년 11월 미·일 양국간 방위협력의 요령을 규정하고 있는 『방위협력의 지침』(가이드라인)이 작성된 이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¹⁰⁹ 이용주, “군사동맹 변혁과 일본 방위정책의 재구조화: 자위대의 역할을 중심으로,” 『군사논단』, 제49호 봄호 (2007), p. 90.

¹¹⁰ 『ASAGUMO News』, 『朝雲新聞社』, 2007年 4月 5日 <www.asagumo-news.com/news.htm>.

¹¹¹ 陸上幕僚監部, 『陸上自衛隊の改革の方向』 (2005), p. 9.

1996년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을 통해 그 윤곽이 밝혀졌다.¹¹² 동 신문에 의하면, 당시 미·일 양국은 일본이 침략을 받았을 경우에 대비한 ‘작전계획 5051’과 일본이외 기타 지역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작전계획 5053’을 확정하였다고 보도하였다.¹¹³

한편, 극동지역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일 양국간에 이루어질 공동작전계획은 2004년에 들어 공개되었는데 이는 ‘작전계획 5055’로 통칭되고 있다. 일본공산당 기관지인 아카하타(赤旗)신문은 ‘작전계획 5055’는 2001년 9월 주일미군 부사령관과 자위대의 통합막료회의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공동계획검토위원회」(BPC)에 의해 조인되었으며, 작전계획의 검토결과는 2002년 12월 「미·일 안보협의위원회」에 보고되었다고 밝히고 있다.¹¹⁴ 이와 관련하여 아사히신문은 “한반도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하여 미군이 이에 개입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 및 후방지역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수백명에 이르는 북한 공작원이 일본에 침입해오는 경우, 자위대는 이를 단독으로 대처한다”는 작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작전계획 5055의 일부에 포함하였다”고 보도하였다.¹¹⁵

112. 『朝日新聞』, 1996년 10월 19일.

113.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강한구·박민규, 『일본의 보수우익이 방위정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8. 12), pp. 88~91.

114. 共産党, 『しんぶん赤旗』, 2007년 1월 30일 <www.jcp.or.jp/akahata/aik07/2007-01-30/2007013001_02_0.htm>.

115. 『朝日新聞』, 2004년 12월 12일; 한국국방연구원, 『2005-2006 동북아 군사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6), p. 92에서 재인용.

나. 자위대의 역할확대와 미·일 군사기술 교류 확대

(1) 자위대의 활동영역 확대

2005년 10월 미·일간에 합의된 주일미군 재편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자위대의 임무와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일본 정부로 하여금 한반도, 중국, 대만, 러시아에 대한 전략구상을 재편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국제 테러와 국제재해 사태에 대한 전략 수정을 요구하면서 헌법개정 등 이에 필요한 법과 제도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표 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위대의 활동 목표와 운용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이에 필요한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위협에의 대응 분야에서는 탄도미사일방위 태세를 구축해 가고 있으며, 무력공격이 발생한 시점에서는 영토 및 영해를 방어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할 것이며, 해상교통로 방위작전을 펼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일본은 국제안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국간 공동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03년 7월 부시 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를 제창한 이후 일본은 PSI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03년 PSI가 처음 결성된 시기부터 일본은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과 함께 PSI훈련에 빠짐없이 참가해 왔다. 2006년 4월 4일 호주가 주최한 PSI훈련,¹¹⁶ 2006년 5월에는 미국이 주최하는 림팩(RIMPAC: Rim of the Pacific)훈련,¹¹⁷ 2006년 6월 5일부터 말레이시아 주변해역에서 실시

¹¹⁶ 동 훈련에는 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등 4개국이 참가하였다. 『ASAGUMO News』, 『朝雲新聞社』, 2006年 4月 6日.

¹¹⁷ 일본은 1980년부터 림팩훈련에 참가해 오고 있으며, 2006년 훈련에는 미국·일

된 서태평양 소해훈련,¹¹⁸ 2006년 6월에는 미 해군이 하와이에서 실시한 SM3 발사실험에, 그리고 2007년 4월 26일에는 일본, 미국, 인도 해군이 참가하여 일본의 보소우반도(房總半島) 주변해역에서 실시된 통신훈련·근접훈련·전술운용 훈련을 주도한 바 있다.¹¹⁹

일본은 외국과의 군사훈련을 통해, 훈련 참가국과의 유대관계를 도모함은 물론, 훈련을 통한 보유장비의 성능을 점검하는 한편, 일본 이외지역에 대한 해상 및 해저에 대한 각종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일본이 참가하고 있는 외국과의 훈련에는 거의 대부분이 미국이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미국과의 연합작전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구축된 연합작전체제를 점검하는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본·호주·인도·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한국·싱가포르 등 8개국이 참가한다고 보도 되었다. 『ASAGUMO News』, 『朝雲新聞社』, 2006年 5月 11日.

¹¹⁸ 『ASAGUMO News』, 『朝雲新聞社』, 2006年 5月 25日 <www.asagumo-news.com/news.htm>.

¹¹⁹ 위의 글.

<표 V-1> 일본정부가 설정한 자위대의 활동 목표와 운용 방향

구분	대책	세부 대책 및 조치 사항
새로운 위협대응	탄도미사일 공격 대책	· 일본 방위 및 법제정비 · 미·일간 BMD 협력
	게릴라/특수부대에 의한 공예의 대응	· 게릴라 특수부대 무장공격 대응 · 무장 공작선 대응 · 핵/생화학 무기 대응
	도서부 침략 대책	· 도서부 침략대응 작전
	주변해역 경계감시, 영공침범, 무장공작선의 영역 침범	· 주변해역 경계감시 · 영공침범대비 경계, 긴급발진 · 잠수함 대책 · 무장공작선 대처
	대규모특수 재해 대응	· 재해파견 등
	기타 대응	· 자위대 시설 방호태세 정비 · 자국민 수송태세정비 · 주변사태 대응, 군사정보 수집
본격적 침략사태 대책	방공작전	· 침입 항공기 발견 및 발견된 항공기 식별 · 적 항공기에 대한 요격 격파
	주변해역 방위작전	· 해상 대책 및 연안 대책
	영토방위 작전 (착륙 및 상륙 침공 대책)	· 연안해역 대책 · 연안지역 대책내 대책
	해상교통로 안전화보 작전	· 대수상전, 대잠전, 방공전 기뢰전 준비
침략시 국민보호 대책	국민보호 조치	· 자위대의 국민보호훈련 참가 · 지자체와 평시 협력 체제구축
미·일 안보협력	미·일안보체제의 신뢰성 향상	· 시설 및 구역 제공 · 정책협의 · 방위협력 지침의 실효성 확보 · 공동훈련 · 장비/서비스의 상호제공 · 장비/기술협력
	주일미군 주둔지원	· 주둔경비 분담, 시설구역의 안정적 사용 확보 · 주일미군시설/구역 주변 환경보전시설
국제안보환경 개선	국제평화협력활동	· 국제평화활동시 주체적 적극적 대책 · 이라크재건 지원 · 국제테러 대응 활동 · PKO 활동, 국제긴급 구난활동
	안보대화/방위교류	· 2국간 방위교류 및 다국간 방위교류 · 다국간 공동 훈련
	군비 군축 비확산 대책	· 대량살상무기 등 군비관리/군축/비확산 조약 등 · 특정재래무기의 군비관리 관련 조약 등 ·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위한 국제적 신대책

자료: 防衛廳, 『防衛白書』(東京: きょうせい, 平成 18年 8月), pp. 117~273 참조 작성.

(2) 미·일 군사기술교류의 확대와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

미·일간 군사협력의 확장은 군사장비의 공동연구 및 공동생산 확대를 수반하고 있다. 양국은 1980년부터 「미·일 장비기술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용해 오고 있는데, 제25회 협의회는 2년 만에 지난 2006년 9월 28일에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 안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장비와 기술협력의 향후 방향,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미·일 공동연구 및 개발사업의 진척상황, 기타 장비 및 기술협력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¹²⁰ 장비협력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 및 우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상호운용성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양국의 재정사정으로 인한 예산제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동 협의회에서는 공동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P-3C의 후속기에 탑재할 전자기기에 대한 개발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현재 연구 중인 BMD 기술, 소프트웨어 무전기, 첨단 선체 재료와 구조기술, 함재형 대공 레이더, 함재형 전투지휘 시스템에 대한 진척상황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 또한 양국의 정부차원만이 아니라 양국 기업간의 대화의 중요성과 휴대형 화학제 탐지기술 등 미·일 공동연구개발의 후보사업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이 군사기술분야에서의 교류확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2007년 8월 10일 군사기술의 교류에 있어 최혜국적 지위를 상호 인정하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다.¹²¹ 이

¹²⁰- 『ASAGUMO News』, 『朝雲新聞社』, 2006年 10月 12日 <www.asagumo-news.com/news.htm>.

협정은 향후 비밀군사정보의 보호를 위해 제공된 군사정보는 이를 제공한 국가의 비밀분류 기준에 맞춰 기밀, 극비, 비밀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이를 제3국에 이전하거나 당초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며, 정보의 보관 및 관리, 계약기업에 대한 보호의무 준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영국·캐나다·프랑스·호주·이스라엘 등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이들 국가들과 첨단 군사장비의 제공, 군사기술의 교류, 군사장비의 공동생산, 그리고 인적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¹²²

한편,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공동개발 과정에서 일본의 기존 방위정책의 근간중의 하나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 ‘무기수출 3원칙’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4월 21일 중의원에 의해 채택되어, 1976년 2월 27일 중의원에서 보다 강화되었다. 즉, 1967년 판 무기수출 3원칙은 ① 공산권국가에의 수출 금지, ② UN결의에 의해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③ 국제분쟁 당사국과 분쟁의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76년판 무기수출 3원칙은 ① 상기 3원칙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 대한 무기수출을 인정하지 않으며, ② 3원칙의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무기수출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것이다.¹²³

121. 『ASAGUMO News』, 『朝雲新聞社』, 2007年 8月 16日 <www.asagumo-news.com/news.htm>.

122. 마츠무라 마사히로(松村昌廣) 교수는 “미·일동맹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영국 혹은 미국과 앵글로색슨 국가들과 체결한 GSOMIA와 같은 수준의 협정체결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미국이 프랑스·이스라엘과 체결한 수준의 GSOMIA를 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松村昌廣, 『軍事情報戰略と日米同盟: C4ISRによる米國の支配』(東京: 芦書房, 2004年 12月), pp. 96~100.



일본정부는 ‘무기수출 3원칙’을 방위정책의 기본요소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미·일 군사기술 교류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미·일간의 미사일 공동연구가 진전을 보이게 되고 공동개발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자, 일본 국내에서는 무기수출 3원칙에 대한 개정 혹은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¹²⁴ 일본에서 생산된 MD체제와 관련 부품들을 미국에 수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론을 배경으로 2006년 6월 23일, 미·일 양국은 『미사일 방위체제 관련 협정』에 서명하고, 이를 근거로 양국은 요격미사일의 공동생산에 합의하고 관련기술의 대미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¹²⁵

다.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 가속화

(1) 자위대의 군사력 추이

미·일동맹 변혁에 따른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는 자위대의 장비첨단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기술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자체생산과 첨단장비 수입을 통해 자위대 전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군사장비에 대한 일본의 대미 수입액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간 연평균 1,560억 엔 수준이었으나, 2002년부터 2005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약 2,375억 엔으로 약 52%나 증가하였다. 2005년에는 자위대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인 총 2조

123- 防衛廳, 『防衛白書』(東京: (株)ぎょうせい, 平成 18年 8月), p. 376.

124- 『디펜스 리서치 센터』(DRC)의 시게무라 마사히로(重村 勝弘)연구위원은 유럽·아시아의 우호국과의 안보협력, 방위산업기반의 육성 및 강화 등을 위해서 ‘무기수출 3원칙’을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重村勝弘, “武器輸出禁止政策の緩和と國際裝備協力,” 『DRC年報2004』 <www.drc-jpn.org/AR-8/shige mura-04j.htm>.

125- *Washington Post*, June 23, 2006.



1,379억 엔에 이르는 장비를 구매하였다. 일본정부의 군사장비에 대한 투자는 다음 <표 V-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MD시스템, 차세대 장비 개발, 통신네트워크 구축 등 주로 첨단장비 및 정보 인프라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표 V-2> 일본 방위성의 주요 예산 투자 분야
(단위: 억엔)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탄도미사일 공격 대응	19	1,068	1,442	1,399	1,826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	1,578	1,508	2,479	1,962	1,764
차세대 장비 연구개발	1,744	1,759	1,869	1,659	1,340
각종 재해 대책	676	649	939	625	949
게릴라, 특수부대 방어	192	260	381	845	811
핵/생화학 공격 대응	36	69	96	76	78
방위예산 계	49,265	48,764	49,335	47,906	47,818

자료: 방衛省, 『わが國の防衛と予算』(平成 15年~平成 19年) 참조 작성.

일본 내각은 2003년 12월 미국의 MD체제를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2007년에 실전배치를 완료하기로 공식 결정하였다.¹²⁶ 일본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미사일방어체제는 육상 배치형 PAC-3와 해상 요격용 미사일(SM-3)로서 PAC-3는 도쿄(東京) 주변을 관할하는 항공자위대의 제1고사군에 2007년도까지 실전배치하여 수도권에 대한 공역방위의 임무를 담당하게 하였다.¹²⁷ 그리고

¹²⁶- 『朝日新聞』, 2003年 6月 6日 및 12月 20日.

¹²⁷- 일본정부는 3월 23일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3월말 PAC-3의 항공자위대 제1고사군(이리마 소재)에 배치될 것에 대비하여 운영에 관한 긴급대처요령을 결정하였다(『ASAGUMO News』, 『朝雲新聞社』, 2007年 3月 29日 <www.asagumo-new



해상 배치형 SM-3는 한국의 동해상에 전개될 이지스함에 배치하여 가상 적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미국 정보위성과의 연계 속에 대기권 외에서 격추하는 임무를 맡도록 하였다. 현재 미·일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MD체제연구는 SM-3보다 한 단계 앞선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로서, 방위범위가 SM-3의 2배 이상에 달하고, 상대국 미사일의 유인탄에도 대응 가능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²⁸

이러한 차세대 해상발사 요격미사일 시스템에서 일본은 우주공간에서 적의 미사일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적외선 시카 등 4개의 주요 구성품에 대한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6년 6월 실시된 시제품의 요격시험에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7년 7월 10일에는 일본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일 양국간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해 데이터 통신기기의 접속을 확인하고, 요격대처 요령을 검토하기 위해 양국의 이지스함과 항공자위대의 조기경보기(AWACS) 등이 참가한 미·일 공동훈련을 일본 주변해역에서 실시하였다.¹²⁹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C-130 수송기와 P-3C의 후계기 개발, 공대공 소형 표적 개발, 야외통신시스템의 개발, 헬기탑재 호위함과 F-15기의 개량, 함재형 대공레이더 및 전투지휘 시스템에 대한 개량 사업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¹³⁰ 통신 네트워크분야에서는 위성통신 네트워크와 해상작전부대의 IP 통신

s.com/news.htm.>).

¹²⁸- 『朝日新聞』, 2005年 6月 6日 및 9月 1日.

¹²⁹- 『ASAGUMO News』, 『朝雲新聞社』, 2007年 7月 19日 <www.asagumo-news.com/news.htm>.

¹³⁰- 防衛省, 『わが國の防衛と予算』, 平成 14年, pp. 17~31.

기반 구축, 해상보안청과의 데이터 통신능력 구축, 정보수집을 위한 제공형 무인항공기 개발, 사이버 공격에의 대책 구축, 각종 통신 인프라의 구축 등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보 수집을 위한 제공형 무인 항공기는 해외의 운용실태를 조사하는 단계에 있지만,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일본의 무인항공기 기술은 한 단계 진일보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 자위대의 주요 군사력 증강

일본은 해양국가로서 특히 해상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대 잠수함초계기인 P-3C기를 96기나 보유하고 있어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2006년 3월 현재 7,200톤급 이지스함 4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2007년 3월 15일 제7세대 이지스함으로 평가되고 있는 ‘아타고(7,700톤급)’함이 추가적으로 실전 배치되었다.¹³¹ 동함은 최신의 베이스 라인 7을 채용한 최신에 이지스 시스템을 장비하고 있으며, 기존의 이지스함에 비해 고성능의 방공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헬기운용을 위해 뒤쪽 갑판에 헬기 격납고를 구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³²

인공위성 개발을 통한 군사정보수집 능력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2003년 3월 28일 광학위성과 레이더 위성을 최초로 발사한

¹³¹- 미국이 생산하고 있는 이지스 시스템은 제1형으로부터 제7형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제5형이상부터 데이터 링크 16이상을 보유하며, 제6형과 7형은 데이터 링크 16과 함께 공동교전능력(CEC)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일본이 보유한 이지스함의 경우, 1번함부터 3번함까지(콩고, 키리시마, 묘우코우)는 제5형이며, 4번함인 초우카이만이 6형, 그리고 2007년 3월에 도입된 아타고 함은 제7형으로 분류된다. 松村昌廣, 『軍事情報戦略と日米同盟: CAISRによる米國の支配』(東京: 芦書房, 2004년 12월), p. 217.

¹³²- 『ASAGUMO News』, 『朝雲新聞社』, 2007년 3월 22일 <www.asagumo-news.com/news.htm>.

I
II
III
IV
V
VI
VII
VIII

후 3년 반 만인 2006년 9월 11일에는 광학위성 2호기를 발사하였다. 그리고 2007년 2월 24일 일본은 합성개구 레이더 2호와 광학 3호 실증위성 발사 성공함으로써 자위대는 레이더 위성과 광학위성 각 2기씩 4기 체제를 완비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사된 정보수집위성은 지구상 어느 지점이라도 1일 1회 관측이 가능하며, 광학위성의 해석 능력은 지상 1m의 물체까지 식별 가능할 뿐 아니라, 레이더 위성은 전천후 그리고 주야와 무관하게 약 1~3m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¹³³

한편, 일본의 미사일 능력도 보다 강화되고 있다. 미·일 공동연구 및 공동개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3월 9일 일본 정부는 그간 미국과 공동으로 기술연구를 실시해 왔던 탄도미사일 방어용 해상배치형 능력 향상 요격 미사일(SM-3)의 탄두부를 보호하는 크립셀형 ‘노스콘’에 대해 시제품의 성능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였다.¹³⁴ 해상 배치형 상층시스템의 성능을 개량하는 이른바 ‘능력 향상형’ 미사일에 대한 공동 연구는 1999년부터 개시되었는데, 연구분야는 ① 대기와의 마찰열로부터 탄두부의 적외선 시커 등을 보호하는 노스콘, ② 표적을 식별 및 추적하는 적외선 시커, ③ 표적을 파괴하는 키티네크 탄두, ④ 제2단계 로켓 모터 등이며, 양국은 각각 분담형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¹³⁵ 이와 같이 주일미군

¹³³- 『ASAGUMO News』, 『朝雲新聞社』, 2007年 3月 1日 <www.asagumo-news.com/news.htm>.

¹³⁴- 『ASAGUMO News』, 『朝雲新聞社』, 2006年 3月 16日 <www.asagumo-news.com/news.htm>.

¹³⁵- 일본 내각은 2005년 12월 24일 ‘능력 향상형’ 요격미사일에 대한 연구단계를 넘어 공동개발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2006년부터 공동개발에 착수하여 2015년도에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다. 개발비는 약 30억 달러(3,210억 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편은 일본의 역할 확대를, 그리고 일본의 역할 확대는 자위대 전력의 강화로 귀결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2. 미·일동맹의 발전방향

가. 미국의 대일정책과 아·태전략

2007년 2월 아미티지와 나이 등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들은 미·일 동맹 발전방향과 새로운 아시아질서 구축에 대한 초당적 구상을 제시하였다.¹³⁶ 이번에 발표된 『2차 아미티지 보고서』는 정치적 자유와 지속적 번영이 보장되는 최선의 아시아 지역질서구축 노력은 지역 국가들의 참여와 함께 미국의 지속적인 힘·개입·리더십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은 군사·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호주·인도를 포함한 집단안보동맹을 구축하여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한편, 중국이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로 행동할 수 있도록 미래 정책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차 아미티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그림 V-2>와 같이 도식화하여 보여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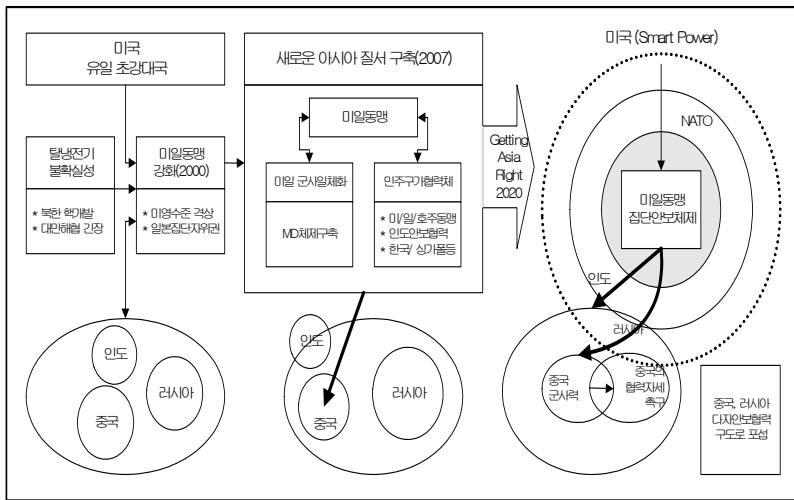
아미티지와 나이는 또한 미국의 장래를 위한 스파트파워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¹³⁷ 이들이 말하는 스마트파워(smart power)란 군사력·경제력으로 구성된 하드파우어(hard power)와 문화·가치·아이디어를 통해 자발적으로 매력을 느끼게 하는 소프트파워(soft

¹³⁶-Richard L. Armitage, (et. al.), "The U.S.-Japan Alliance: Getting Asia Right through 2020" (February 16, 2007).

¹³⁷-Richard L. Armitage, Joseph S. Nye, JR. (et. al.), *CSIS Commission on Smart Power: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7).

power)를 접목한 현명한 외교정책을 의미한다. 스마트파워 정책은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 저개발국가에 대한 지원 확대, 인적 교류 증진, 자유무역 확대를 통한 경제적 통합 추구, 에너지·기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혁신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림 V-2> 미·일동맹 발전방향과 새로운 아시아질서 구상



미국은 미·일동맹을 동아시아전략의 요체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은 일본만을 유일한 협력 파트너로 고려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일본을 감싸고 돌 경우 일제 침략의 피해를 입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으며, 극동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섬나라인 일본의 위치는 대륙세력인 중국을 견제하는데 지정학적인 한계가 있다. 미국은 일본의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의 정치적 위상과

중국을 견제하는 대항세력으로서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아·태 국가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맹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먼저 호주를 포섭하여 미·일 동맹체제를 확대·발전시켰다.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에 침략당한 경험이 있는 호주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경계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일본의 배후에 위치한 호주가 일본과 안보협력 관계를 개선하여 일본·한국 등 극동지역에 편중된 미군 기지를 보완해 주기를 원했다. 이러한 전략적 구도하에 호주를 설득한 미국은 2002년부터 미국·일본·호주 ‘3자 전략회의’를 주도하며 3국 사이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였다. 미국·일본·호주 3국은 2006년 3월 첫 번째 각료급 전략대화를 개최하였다.

미국은 일본·호주와의 3각 협력체제가 군사동맹으로 발전되어 가면 아·태지역 집단안보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태지역 집단안보체제 구축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미국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가들과 연대체제를 결성하는 한편, 이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연계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06년 11월 28~29일 NATO 정상회의에서 일본·호주·한국·스웨덴·핀란드 등 5개국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성할 것을 공식 제안하였다.¹³⁸ 그러나 미국의 제안은 NATO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독일 등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미국은 또한 인도를 영향권에 포섭하기 위한 외교를 전개하였다.

¹³⁸ 『문화일보』, 2007년 11월 30일.

I
II
III
IV
V
VI
VII
VIII

미국은 2005년 4월 22일 국방대표단을 인도에 파견하여 F-16전투기 판매 등 군사지원 의향을 전달하고 핵·에너지 분야 협력도 제의하였다. 그 후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인도 총리는 워싱턴을 방문하여 2005년 7월 18일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원자력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인도에 대해 비군사적 핵시설의 사찰을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민간차원의 핵기술과 연료를 공급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와 원자력협력 협정에 합의하자 미국이 스스로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2006년 3월 1일 인도를 방문하여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사이의 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¹³⁹ 미국과 인도는 2007년 7월 17~20일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여 원자력 협정을 최종적으로 타결했다. 양국 정부가 합의한 협정안은 인도에 폐연료봉의 재처리 권리를 인정하고 인도의 핵실험 재개 여지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일본·호주·인도·싱가포르 5개국은 ‘말리바 2007’이라는 작전명으로 2007년 9월 4~7일 인도양 벵골만에서 해상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시드니 APEC 회의에 맞춰 실시된 이번 군사훈련에는 3척의 항공모함과 25척의 전함, 100여대의 전투기가 동원되었다. 싱가포르도 이번 군사훈련에 참여하였지만 병력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미국은 동년 8월 『상하이협력기구』(SCO) 6개 회원국이 러시아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훈련을 한 것에 대응하여

¹³⁹- The White House, *U.S.-India Joint Statement* (March 2, 2006).



I
II
III
IV
V
VI
VII
VIII

이번 5개국 대규모 군사훈련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이번
에 처음 미국·일본·호주와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하였다.

미국은 일본·호주·인도 4국의 민주연대를 강조하는 한편, 자유민
주주의 모범국가로 제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도네시아·필리핀·
베트남 등과도 정치·군사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공산당 지
배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과 군사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미국과
베트남은 2003년 양국 국방장관이 상호 방문한 이후 군사협력을 시
작하였다. 2007년 들어 베트남에 대해서 헬기와 해양순시선 등 무
기를 판매하고 양국 간 공동 훈련 등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¹⁴⁰
2007년 6월 19일 응웬 밉 쩌엣(Nguyen Minh Triet) 베트남 주석이
경제사절단 100여 명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로써 미국과 베트남의 협력관계는 더욱 긴밀
해졌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과 함께 변화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역학
관계의 변화에 유의하며 역내 국가들과 안보협력 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2002년 ASEAN과 자유무역협정
(FTA)을 추진하자 미국도 양자협상을 넘어 ASEAN 전체와 자유
무역협정 체결을 모색하고 있다.¹⁴¹ 2003년 1월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고 2004년 1월 1일 이를 발효시켰다. 2006년 2월부터 한국,
동년 6월부터 말레이시아와 FTA 협상 진행하여 한국과는 2007년
6월 FTA를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전략 차원의 필요성에 의해서도 동아시아 국가들과 FTA 협상

¹⁴⁰- 『중앙일보』, 2007년 3월 26일.

¹⁴¹- Dick K. Nanto, "East Asian Regional Architecture: New Economic and Security Arrangements and U.S. Policy," *CRS Report for Congress* (September 18, 2006), p. 3.

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자국이 배제된 동아시아 경제블럭 형성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독자적인 동아시아 경제권이 형성되면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됨으로서 미국의 전략적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호주와 함께 이를 견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¹⁴² 아·태지역 경제협력은 APEC 중심으로 제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미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환태평양 경제통합 사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 모두 미국의 세계 지도력과 국가이익을 대외정책의 제1의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은 중동 정책, 특히 이라크 정책을 둘러싸고 심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전략은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인 협력하에 추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2008년 11월 미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집권하여도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은 큰 변화를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민주당 행정부도 미·일동맹을 강화하며 이를 기반으로 중국을 포섭하는 전략구도의 기본틀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미티지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구도를 평가해 보면,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 구축을 목표로 한 미·일동맹의 성공 여부는 제1 파트너인 일본의 협력 강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일본 정국은 미·

¹⁴²- 2005년 12월 14일 말레이시아에서 제1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개최되었으나, 일본은 ASEAN+3 이외에 동아시아가 아닌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 정상이 참석을 주장하여 회의의 정체성부터 모호하게 되었다. 배궁찬, “미국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여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06. 4. 28), pp. 10~15.



일동맹 강화를 대변하고 있는 집권 자민당의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어 불안정한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아베 총리가 추진한 헌법 개정 작업이 관철되어 자위대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2007년 7월 29일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하여 아베 총리가 사임하자 상당한 당혹감을 나타냈다. 미국은 향후 ‘유엔중심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일본 정부의 미·일동맹 강화 정책이 상당히 제약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9월 25일 후쿠다 총리가 취임한 날 유엔총회에서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 후 부시 대통령은 11월 7일 독일 TV방송과 회견에서 유엔안보리 새 상임이사국으로 일본만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¹⁴³ 한편, 일본을 방문한 게이츠 국방장관은 11월 8일 후쿠다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상 등과 잇달아 회담을 갖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급유지원 재개 및 주일미군 재편 관련문제들의 성실한 이행을 요청했다.

미국은 최근 일본 정국이 급변하는 가운데 미·일 합동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일본·호주·영국·프랑스·싱가포르 등 7개국은 2007년 10월 13일부터 사흘 간 도쿄(東京)만 인근 해상에서 “퍼시픽 실드(Pacific Sealed) 07”로 명명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해상훈련을 실시했다.¹⁴⁴ 이에 앞서 미국과 일본은

¹⁴³ “부시, 안보리 새 상임이사국으로 일본만 지지,” 『연합뉴스』, 2007년 11월 8일.

¹⁴⁴ 이 훈련은 2003년부터 제5회째 실시되며, 이번 훈련은 일본이 주최하였는데, 10월 13~15일 이즈오시마(伊豆大島) 동쪽해역, 요코쓰카 신항, 그리고 요코하마 항에서 실시되었다(『ASAGUMO News』, 『朝雲新聞社』, 2007년 10월 18일)

2004년 이후 중단했던 양국간 합동군사훈련을 11월 5~16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¹⁴⁵ “예리한 칼(keen sword) 2008 훈련”으로 명명된 이번 훈련에는 탄도 미사일방위와 도서지역침공 대처 등 시나리오에 의해 실시될 예정인데, 양국의 3만 1천명 병력과 함정 100척, 항공기 450대 등이 참여하게 되는 지금까지 최대규모의 훈련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육·해·공군을 동원한 입체적인 군사훈련을 통해 일본의 방위력을 증강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호주의 정권교체도 미국·일본·호주 삼자 군사협력의 효율성에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테러와의 전쟁을 적극 지지한 하워드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과 국민당 집권연합이 11월 24일 실시된 하원선거에서 노동당에게 패배하였다. 따라서 케빈 러드(Kevin Rudd) 노동당 당수가 신임 총리로 임명될 예정이다. 이로써 호주는 11년 넘게 유지돼온 보수파 정권이 막을 내리고 중도 좌파 정권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 러드 차기 총리는 호주의 대표적인 중국 전문가이자 친중 인사로 간주되고 있다. 그는 당선 축하 전화를 걸어 온 부시 대통령에게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호주 외교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차기 총리직 취임을 앞둔 케빈 러드 노동당 당수는 11월 30일 이라크 주둔 호주군의 철군을 내년 중반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¹⁴⁶

<www.asagumo-news.com/news.htm>.

¹⁴⁵ 동 훈련에 참가하는 부대는 일본 측에서 병력 2만 5천명, 함정 90대, 항공기 400기, 미군측은 7함대, 5공군, 주일미군, 제3해병대 전개부대 등 8,500명, 함정 10척, 항공기 50기가 각각 참가할 예정인 것으로 보도되었다(『ASAGUMO News』, 『朝雲新聞社』, 2007年 10月 18日 <www.asagumo-news.com/news.htm>).

¹⁴⁶ 『연합뉴스』, 2007년 11월 30일 <<http://app.yonhapnews.co.kr>>.



나. 일본 국내정치와 미·일동맹

고이즈미 총리(2001.4~2006.9)는 부시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을 기초하여 미·일동맹을 공고히 하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임기 말년인 2006년 6월 29일 워싱턴을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과 마지막 정상 회담을 가졌다. 회담 후 양 정상은 공동문서 ‘새로운 세기의 미·일동맹’을 채택했다.¹⁴⁷ 이 공동문서에서 양국 정상은 미·일관계를 역사상 가장 성숙한 양국 간 관계라고 규정하고, 양국이 ‘공통의 가치관과 이익’에 기초하여 ‘세계속의 미·일동맹’으로 발전시켜 나아간다는 구상을 천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자유 ② 인권 ③ 민주주의 ④ 시장경제 ⑤ 법의 지배 등을 미·일 양측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관’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① 테러와의 전쟁에서의 승리 ② 시장경제의 추진 ③ 인권의 옹호 ④ 에너지 안전보장의 향상 등을 공통의 이익이라고 지적했다.¹⁴⁸ 미국은 고이즈미 총리 이후 새로운 일본 수상도 미국과 비전을 공유하고 미·일동맹을 강화하기를 기대하였다.

2006년 9월 2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새로 총리에 취임하였다. 아베 총리는 ‘전후체제 탈피, 강한 일본 건설’을 주창하며 고이즈미 총리의 정책을 이어 받아 미·일관계를 더욱 공고화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아베 총리는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집권 3개월만에 국회에서 「교육기본법」개정안과 「방위청의 성(省) 승격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후 방위청은 2007년 1월 9일 방위성으로 공식 승격하였다. 아베 총리는 또한 헌법 개정을 실현

¹⁴⁷- U.S.-Japan Summit Meeting, *The U.S.-Japan Alliance of the New Century* (Washington D.C.: June 29, 2006).

¹⁴⁸- 『ASAGUMO News』, 『朝雲新聞社』, 2006年 7月 6日 <www.asagumo-news.com/news.htm>.

하기 위해 노력하여, 동년 5월 14일 일본 의회에서 헌법개정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이 가결되었다. 이로서 헌법개정 위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였다.

아베 총리는 미·일동맹의 연장선상에서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2007년 3월 13일 일본을 방문한 호주 하워드(John Howard) 수상과 『일·호 안보협력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¹⁴⁹ 이 공동선언은 테러대책·평화활동·군축·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정보교환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양국간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동 선언에서 양국은 ‘2+2(외교·국방장관) 정기협의회의’를 신설하고 일본 자위대와 호주군간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에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인도 및 동남아 국가들과도 안보협력을 강화하였다.

아베 총리는 인도를 방문하여 8월 22일 만모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경제협력과 군사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본은 인도와 포괄적인 경제동반자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양국이 추진 중인 델리·뭄바이 산업벨트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향후 3년 내 양국 교역 규모를 현재의 2배 이상인 2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¹⁵⁰ 아베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하는 ‘아시아 자유연대’를 창설하자고 제의했다. 그리고 아시아 자유연대는 4개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근본가치의 결합은 물론 공동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¹⁴⁹- “안보협력에 관한 일호 공동선언”은 일본이 미국이외의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안보공동선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ASAGUMO News』, 『朝雲新聞社』, 2006年 3月 15日 <www.asagumo-news.com/news.htm>).

¹⁵⁰- 『조선일보』, 2007년 8월 23일.

그러나 아베 총리 재임기간 동안 미·일 양국은 중군위안부 문제와 F-22 전투기 도입 문제 등으로 미묘한 갈등을 겪었다. 미 하원은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중군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는 ‘중군위안부 결의안’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일본은 동 결의안이 ‘사실관계에 입각한 것이 아니다’며 ‘미·일동맹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들어 저지활동 전개하였다. 그러나 미 하원은 7월 30일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¹⁵¹ 아베 총리는 2007년 4월 27일 워싱턴을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일본이 미국의 최첨단 차세대전투기 F-22 전투기 100대를 구매할 의사를 밝혔다.¹⁵² 부시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요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미 하원은 7월 25일 F-22 전투기 수출금지규정을 유지한 2008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안 승인하여 일본의 구매 의도를 무산시켰다.¹⁵³

한편, 미·일동맹을 강화하려는 일본 정부는 국내적으로 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일미군 재편에 의해 불이익을 받게 된 해당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주일미군 기지 이전 또는 확장 자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명해 오고 있다. 야당과 국내 여론은 미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접수국이 이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미 해병대를 괌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일본 정부가 분담하는데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¹⁵⁴ 사실 2005년도에 확정된 주일미군기지 재편 계획은 원래 계

¹⁵¹- 『조선일보』, 2007년 8월 1일.
¹⁵²- 『연합뉴스』, 2007년 7월 7일 <http://kr.news.yahoo.com/etc/print_text.htm?articleid=2007070711420>.
¹⁵³- 『동아일보』, 2007년 7월 26일.
¹⁵⁴- 2006년 3월 18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8%는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

확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8월 현재 전체 11개 계획 중 64%만이 원래 계획대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4개 계획은 일부 변경되거나 연기되어 미완성된 채로 남아 있다.¹⁵⁵ 이와 같이 주일 미군기지 재편사업은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기지 재편 및 비용분담 문제는 미·일동맹 자체를 뒤흔들 정도로 비중있는 문제는 아니다.

아베 총리의 가장 큰 취약점은 연금기록 문제와 교육 문제 등 국내 사회·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한데 있었다. 7월 29일 참의원선거에서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민주당에 패배하였다. 일본 참의원 총의석(242석)중 절반인 121석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64명의 개선의원을 내세운 자민당은 37명밖에 당선시키지 못해, 참의원에서 제1당의 자리를 민주당에 내주는 것은 물론,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합쳐도 참의원 과반수를 확보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자민당 역사상 연립여당이나 무소속을 합쳐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첫 번째 선거였다. 자민당의 패배는 연금문제의 처리, 아베 내각의 정치자금 스캔들과 사임, 그리고 소외된 지방의 반발 등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9월 12일 갑자기 사임을 발표하면서 자신이 중요시하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퇴임하는 국면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¹⁵⁶

이전비를 일본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朝日新聞』, 2006년 3월 21일.

¹⁵⁵ - 外務省, 『SACO最終報告』, 1996년 12월 2일; 防衛廳, 『防衛白書』(東京: 大藏省印刷局, 2006년 8월), p. 204; 防衛施設廳那覇防衛施設局, 『はいさい』, 第99号(2007년 7월 1일), pp. 2~3.

¹⁵⁶ -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은 인도양에 해상자위대를 파견하여 미군을 비롯한 다국적군 함정에 대해 급유지원을 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다. 2001년 제정되어 세



I
II
III
IV
V
VI
VII
VIII

아베 수상의 사임 발표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이번 선거 결과는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동안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미·일동맹 강화를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참의원에서 원내 1당으로 도약한 민주당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문제 및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의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는 향후 미·일동맹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자민당 총재가 9월 25일 중의원에서 신임 총리로 선출되었다. 후쿠다 총리는 2007년 10월 1일 국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일동맹은 일본외교의 요체이며, 신뢰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가겠다”고 언급하였다.¹⁵⁷ 후쿠다 총리도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미·일관계에 두고 있으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개정에 집중했던 아베 총리와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즉,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과 관련해서 “현행 헌법 해석을 포함해 헌법 저촉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답해, 헌법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한편, 『테러대책특별조치법』에 관해서는 민주당과 논의를 통해 연장에 합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법적 효력이 만료되는 10월 31일까지 민주당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후쿠다 총리는 11월 1일 동법의 효력 상실 및 인도양에서 활동하고 있던 해상자위대의 급유지원 활동 중단을 선언하였다.¹⁵⁸

차레 연장되어 왔는데 2007년 10월 31일 기한이 만료된다.
¹⁵⁷ 日本首相官邸, “第168回国會における福田内閣總理大臣の所信表明演説,” 『福田總理の演説・記者會見など』(平成 19年 10月 1日) <www.kantei.go.jp>.
¹⁵⁸ 日本首相官邸, “福田内閣總理大臣の談話(テロ対策特別措置法の失効に伴う対応措置の終了),” 『福田總理の演説・記者會見など』(平成 19年 11月 1日)

후쿠다 내각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신(新)테러대책특별조치법』은 11월 13일 중의원 본회에서 여당인 자민·공명 양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되어 참의원으로 회부되었다. 그러나 참의원 내 제1당인 민주당은 유엔 결의를 근거로 하지 않는 자위대의 해외 파병은 찬성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참의원에서 새 법안이 부결될 경우 후쿠다 내각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렵다.¹⁵⁹

2007년 11월 16일 부시 대통령과 후쿠다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이 회담에서 후쿠다 총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인도양의 미 해군에 대한 급유지원 활동을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양국 정상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를 해소하지 못했다.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납치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삭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하튼 일본 정부는 미·일동맹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 대다수의 여론에 힘입어 앞으로도 미·일동맹을 계속 유지·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야당 및 지역 주민단체들의 반발 등 국내 정치적 요인들로 인해 미군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자위대 해외 파병, 주일미군 재편에 따른 일본측 비용

<www.kantei.go.jp>.

¹⁵⁹ 후쿠다 총리는 중의원의 재의결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또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총선은 여야 모두에 부담이 됨으로 상황변화에 따라 극적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 여하튼 일본 정국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신테러대책조치법이 어떻게 처리될지 유동적인 상황이다. “日정치권, 테러특조법 처리 수싸움,” 『세계일보』, 2007년 11월 15일.



분담 및 주일미군 기지 이전 등 미·일동맹 재조정 과정에서 합의된 사안들은 그 이행과정에서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VI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1.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2001년 1월 부시 미 행정부 출범이후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미·일 동맹 강화는 역내국가들의 국방비 증액, 최첨단무기 개발 및 도입 경쟁 등 군비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미·일과 중·러는 각기 양자 차원의 안보협력을 긴밀히 하는 한편, 외부세력과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동아시아 지역에는 미·일 중심의 아·태지역 민주국가연대와 중·러 중심의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라는 두 개의 큰 틀이 형성되고 있다.¹⁶⁰ 그러나 양측의 대립구도는 이념과 체제 경쟁을 지향하는 경직된 대결구도가 아니다. 동북아 4국간의 실질적인 외교행태는 오히려 국익과 실리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기 양자회담을 통하여 공동이익에 관한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는 한편, 국익이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국내정치 보수화와 국제적 역할 확대는 과거사·영토 문제를 둘러싼 한·중·일 3국간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으나, 2006년 9월 아베 총리의 집권이후 3국 관계는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¹⁶⁰ 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등 5개국은 1996년 4월 26일 '상하이 5개국회의'를 결성하였다. 2001년 6월 14일 상하이 5개국회의에 우즈베키스탄이 정식 회원국으로 참가하자,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설립을 선언하였다. 島村智子, "上海協力機構(SCO)創設の経緯と課題," 『レファレンス』(東京: 日本國會図書館, 平成 18年 12月号), pp. 45~58.

가. 동북아 4국의 군비경쟁 강화

(1) 국방비 증액

클린턴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행정부의 과도한 국방비 삭감으로 인해 미군 전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2001년 집권한 부시 대통령은 국방비를 증액하고 새로운 군사·안보전략을 추진하였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특히 9·11 테러사태 이후 아프가니스탄·이라크 등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급격히 확대되었다. 다음 <표 VI-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2002 회계연도 3,485억 달러에서 2005회계연도 4,953억 달러로 증액되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세계 군사비 지출은 미국 5,287억, 영국 592억, 프랑스 531억, 중국 495억, 일본 437억, 독일 370억, 러시아 347억 등의 순서로 발표되었다.¹⁶¹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전 세계 군사비의 46%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군사력의 절대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중국·러시아·프랑스 등 강대국들이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도전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단념(dissuade)시킨다는 의도적인 전략에 때문이다.¹⁶²

일본은 국방비를 GDP 1%와 연동시켜 매년 경제성장률만큼 군사비를 증가시켜 오고 있다. 2001년 취임한 고이즈미 수상은 미·일동맹 강화하며 새로운 안보정책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국방비

¹⁶¹-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0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¹⁶²- U.S. Department of Defense, *Report of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February 6, 2006), p. 30.

는 여전히 GNP 대비 1%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비 총액은 한국보다 두 배를 능가하고 있다.

<표 VI-1> 동북아 국가의 국방비와 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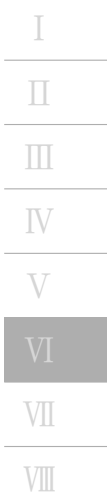
(국방비 및 GDP 단위: 100만 \$)

구분	국가명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연도							
국방비	2002년		348,555	39,200	68,963	50,800	n.a	13,081
	2003년		404,920	42,835	75,500	65,200	n.a.	14,632
	2004년		455,908	45,152	87,150	59,600	m.a.	16,541
	2005년		495,300	43,910	103,956	58,000	n.a.	20,313
GDP비율	2005년		4.0	1.0	1.3	3.7	n.a.	2.6
GDP총액	2006년		3,201,819	4,340,133	2,668,071	986,940	n.a.	888,024
병력(천명)	2007년		1,506	240	2,255	1,027	1,106	687

자료: 1) 2006년 GDP 총액은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World Bank, July 1, 2007;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07* (London: Routledge, 2007).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1990~2005년 사이에 연평균 15% 이상의 국방비를 증액시켜왔다. 중국의 『2006 국방백서』는 2004년에는 전년대비 15.31% 증가한 2,200억 위엔(元), 2005년에는 12.5% 증가한 2,475억 위엔을 국방비로 지출하였다고 밝히고, 2006년에는 전년대비 14.7% 증가한 2,838억 위엔(약 351억 달러)으로 발표하였다.¹⁶³ 이와 같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2006 국방백서』는 GDP대비 국방비 비율은 2003년 1.4%, 2004년 1.38%, 2005년 1.35%로 점차 하강하는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05년 중국의 국

¹⁶³-"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National Defense in 2006* (Beijing: December 2006).



방비는 미국 국방비의 6.19%, 일본의 67.52%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국방정책은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공개된 국방예산도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전략무기, 해외 구매, 군사기술개발 등에 사용하는 액수를 국방비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할 경우 실제로는 공개한 액수보다 2~3배 많은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2007년 국방비를 전년 대비 17.8% 증가한 450억 달러로 공개하였으나, 미 국방부는 실제로 850~1,2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⁶⁴ 이와 같이 중국의 군사적 투명성을 불신하고 있는 미 국방부는 중국의 전략무기 현대화가 놀라운 속도로 확대·발전되어 동아시아의 군사력 균형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의 국방비는 2000년 5월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푸틴 대통령은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높은 국제가격에 힘입어 러시아 경제가 성장하자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강대국 위상 회복을 위해 군사력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국방비 총액은 미국의 1/8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러시아는 전략적인 목적과 더불어 경제적 실리를 목표로 최단무기를 수출하고 군사기술을 이전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2002~2006년 국제사회의 재래식무기 수출 시장에서 미국이 30%를 점유하여 세계 제1 무기수출국이 되었고, 러시아는 28%로 두 번째 무기 수출국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무기는 중동지역으로 39%, 아·태지역으로 25%가

¹⁶⁴-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7*, p. 25.



공급된 반면, 러시아의 무기는 중국에 45%, 인도에 25%가 수출되어 동아시아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있다.¹⁶⁵

(2) 최첨단무기 개발 및 도입

미국과 러시아는 탈냉전기에 들어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감축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상호 확증파괴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미·러 양국은 전략핵탄두를 6,000개 수준으로 삭감하기로 합의한 START-I이 1994년 12월 발효되자 이를 현재까지 이행해 오고 있다. 1993년 1월에는 전략핵탄두를 3,000~3,500개로 감축하기로 약속한 START-II를 서명하였으나 미국의 탄도미사일금지조약(ABM) 탈퇴로 인해 아직까지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그 후 2002년 5년 체결한 「전략공격무기 감축협정」(SORT: Strategic Offensive Reductions Treaty)에 의해 핵무기를 양적으로 감축하고 있지만 핵전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하고 있다.¹⁶⁶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 후 미국의 MD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자 미·러간에는 우주공간에서의 핵·미사일 경쟁이 강화되었다.

미국은 2004년부터 지대공 패트리엇 미사일(PAC-3)과 해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SM-3) 등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실전배치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탐지 레이더보다 탐지거리가 길고, 대륙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형상도 식별 가능한 X밴드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MD관련 장비들을 일본

¹⁶⁵-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0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 387~422.

¹⁶⁶- 2003년 6월 SORT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미·러 양국은 실전배치 중인 전략핵탄두를 2012년까지 1,700~2,200개 수준으로 감축해가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2006-2007 동북아 군사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7), p. 139.

I
II
III
IV
V
VI
VII
VIII

에 이전하고 MD체제 공동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일 양국은 2010년까지 PAC-3, 레이저 항공요격기, 이지스 대공 요격함 및 전역 고고도 미사일방위망을 갖춘 MD체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미국은 MD체제 구축과 더불어 우주공간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미 공군은 미사일 요격용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2010~2020년에는 우주배치 레이저를 개발·배치할 계획이다.¹⁶⁷

한편, 러시아는 ‘2006~2015년 러시아연방 우주 프로그램’을 새로 발표하고 우주전력을 정비·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MD체제 구축에 대응하여 미사일 공격 조기경보 우주시스템을 복구시키고 있다.¹⁶⁸ 아울러 MD체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최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Topol-M을 개발하고 실전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경 Topol-M 미사일을 해상발사용으로 개량한 불라바(Bulava) SLBM을 전략 핵잠수함에 탑재하여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¹⁶⁹ 러시아 공군은 Tu-160 Blackjack 전폭기를 개량하여 핵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3) 일본과 중국의 해·공군력 증강

MD 개발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경쟁은 동아시아 군비경쟁을 우주공간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표 VI-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미·러 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 배치한 병력의 양적 규모는 크지 않다. 미국은 10만 병력을 전진배치하고, 항공모함과

¹⁶⁷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 전략균형 2006』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6), p. 29.

¹⁶⁸ 위의 책, p. 36.

¹⁶⁹ 국방부, 『2006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06), p. 14.



전투비행대대 및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등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극동지역에 약 16만 병력을 주둔시키고, 태평양함대사령부 및 장거리 항공사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러 양국은 역내에 제한된 병력을 배치해 놓고 있는 바, 동아시아 군비경쟁은 실제로 일본과 중국이 각기 미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해·공군 전력의 최첨단화를 추진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일·중 양국은 또한 정찰위성과 달 탐사선을 발사하는 등 우주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달 탐사가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되는 우주기술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규모와 정확성을 향상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다. 우주과학기술과 군사기술은 사실상 경계가 모호하다.

일본은 2007년 1월 9일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켜 군사력 증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다. 일본은 육상·해상·항공 자위대 24만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핵무기의 보유·제조·반입’을 금지하는 비핵 3원칙을 준수하고 있다.¹⁷⁰ 비교적 소수의 병력을 유지하면서 핵무기 비보유 원칙을 견지하는데서 오는 불리함을 군사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극복해 오고 있다. 일본은 특히 MD체제 구축에 참여한 이후 미국으로부터 최첨단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1998.8)를 계기로 총 4기의 정찰위성을 발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단계적으로 이를 추진하여 2003년 3월 정찰위성 2기를 발사한데 이어 2007년 2기를 추가함으로

¹⁷⁰ 일본은 2000년 현재 핵무기의 원료가 될 수 있는 플루토늄 54톤을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핵보유국 지위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다. 한국국방연구원, 『2004-2005 동북아 군사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5), p. 122.

I
II
III
IV
V
VI
VII
VIII

써 동북아 일대를 24시간 감시하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인우주선 발사에서 중국에 뒤진 일본은 2007년 9월 13일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달 탐사위성 ‘가구야’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표 VI-2> 동북아 4국의 극동지역 군사력

구 분		보유전력	
		주한미군	주일미군
미국 (동북아 지역)	육군	1개 군사령부(제8군사령부), 병력 25,000명, 전차 116대, 장갑차 111대	1개 군단사령부, 병력 1,600명
	해군	병력 300명	1개 함대사령부, 병력 9,250명, 항공모함 1척, 수상전투함 9척
	공군	1개 공군사령부(제7공군사령부), 병력 8,900명, 전투기 84대	1개 공군사령부(제5공군사령부), 병력 14,700명, 전투기 84대
	해병대	병력 180명	1개 해병원정부대, 병력 17,850명
일본 (주요군사력)	육상자위대	10개 사단 및 4개 여단과 1개 혼성단, 병력 159,000명, 전차 1,000대, 장갑차 1,220대, 야포 740문, 헬기 495대 등	
	해상자위대	1개 호위함대사 및 5개 지방대, 병력 46,000명, 이지스함 4척 포함 호위함 53척, 잠수함 16척, 대형수송함 3척 등 140척, P-3C 97대, 초계/소해헬기 107대	
	항공자위대	3개 방면대 및 1개 혼성단, 병력 48,000명, E-767 조기경보기 4대, F-2 전투기 49대, F-15J/DJ 요격기 203대 등 680대	
중국 (극동 지역)	지상군	4개 집단군 예하 17개 전투사단, 병력 32만명, 전차 2,000대, 장갑차 1,800대 및 각종 화포, 미사일	
	해군	북해·동해함대, 병력 10만명, 전투함정 455척, 잠수함 25척을 주축으로 한 함정 926척, 1개 해군 항공사단의 100대의 전폭기 및 헬기	
	공군	북경·심양·제남군구의 6개 비행사단, 병력 2만4천명, 폭격기, 전투기, 지원기 등 각종 전술기 1,000대	
	제2포병	남경군구 2개 미사일 발사 여단, 병력 1만명, 동풍-3호(IRBM) 40기	
러시아 (극동)	지상군	10개 차량화소총사단, 3개 기관총사단, 1개 포병사단, 전차 3,000대, 장갑차 3,800대, 공격헬기 85대, 병력 7만5천명	

지역)	해군	5개 전단, 1개 항공사단, 병력 5만명, 잠수함 8척, 주요 전함 8척, 지원함 99척, 폭격기 14대, 대잠기 45대, 지원기 10대
	공군	3개 전선항공사단, 2개 장거리 항공사단, 병력 4만2천명, 폭격기 157대, 전투기 137대, 지원기 51대

자료: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06* (London: Routledge, 2006); 일본방위청, 『2005년 일본방위백서』 (동경: 일본방위청, 2005. 7); 국방부, 『국방개혁 2020과 국방비』 (서울: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2006. 10), pp. 17~20에서 수정 재인용.

세계 2위로 평가받는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의 핵심은 전투·첩보기능을 겸비한 이지스함에 있다. 해상자위대는 현재 4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시스템인 SM-3를 갖춘 이지스함 2척을 추가적으로 동해 및 동중국해 수역에 배치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¹⁷¹ 2010년 MD체제 구축에 대비하여 이지스함을 8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유사시 경(輕)항공모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헬기 탑재가 가능한 구축함 4척도 건조 중이다. 2012년까지는 80대의 해상초계기를 도입, 남중국해와 동해 등에서 해상 초계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¹⁷²

일본 항공자위대는 F-15기를 주력 전투기로 보유하고 있으며 E-767 공중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운용하고 있다. 항공자위대는 공중급유기 등을 도입하여 작전반경을 확대하고 장거리 투사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최근 전투행동반경이 1,200km로 한반도는 물론 중국 동부 산업지역까지 작전권에 넣을 수 있는 최신예기 F-22 전투기 100대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미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¹⁷¹ 한국국방연구원, 『2006-2007 동북아 군사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7), pp. 94~95.

¹⁷² 『중앙일보』, 2007년 3월 29일.

I
II
III
IV
V
VI
VII
VIII

중국도 해군의 원양작전 능력과 공군의 장거리작전 능력을 강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최근 잠수함 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한급 핵잠수함 5척과 8,000톤급의 094형 핵잠수함 1척을 포함하여 1,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총 69척 정도 보유하고 있다.¹⁷³ 094형 핵잠수함은 사정거리가 8,000km에 달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JL(巨浪) 2호’를 장착할 수 있어 미국의 서부해안까지 공격권 내에 들어오게 되었다. 중국 해군은 또한 러시아와 공동으로 항공모함을 제작하여 대만해협에 대한 제해권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경에는 항공모함전투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공군도 전력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로부터 최신예 전투기 SU-27/30등을 도입하며 항공기술을 이전받는 한편, J(殲)-10을 자체생산 하여 배치하고 있다. 또한 조기경보지휘기인 쿵징(空警)-2000을 제조하여 운용하고 있다. 중국 공군은 향후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J-13 및 J-14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2015년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¹⁷⁴

중국은 미국을 목표로 한 CSS-4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0여기, 아시아지역을 목표로 한 CSS-3 ICBM 20여기, 중거리미사일(IRBM) 14-8기, JL-1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등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¹⁷⁵ 특히 2007년부터 미국과 유럽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사거리 12,000km의 신형 대륙간탄도탄 DF(東風)-31을 실전 배치

173- 이규열, “최근 동북아 군사동향과 우리의 대응방향,” 『국방정책연구』, 가을호 (2007), p. 89.

174- 이규열, “최근 동북아 군사동향과 우리의 대응방향,” p. 92.

175-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7*, pp. 18~19.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03년 10월 최초의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5호를 발사하고, 2005년 10월 두 번째 유인 우주선 선저우 6호 발사에 성공한 이후 우주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007년 10월 24일 중국 최초의 달 탐사위성인 ‘창어 1호’ 발사에 성공하여 우주개발 사업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과시하였다. 아울러 미·일의 MD체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언론은 2007년 1월 11일 위성요격용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자국의 노후화된 기상위성을 격추시켰다고 보도했다.¹⁷⁶ 이로써 중국은 미국·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위성요격 실험에 성공한 국가가 되었다.

나. 중·러의 군사협력 증진 및 세력권 구축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양국의 공통의 전략목표로 설정한 중·러는 부시 미 행정부가 출범한 후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왔다.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은 2001년 7월 16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향후 20년간 양국의 포괄적 관계를 규정하는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¹⁷⁷을 체결하였다. 이후 중·러는 정상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고위인사 상호방문을 확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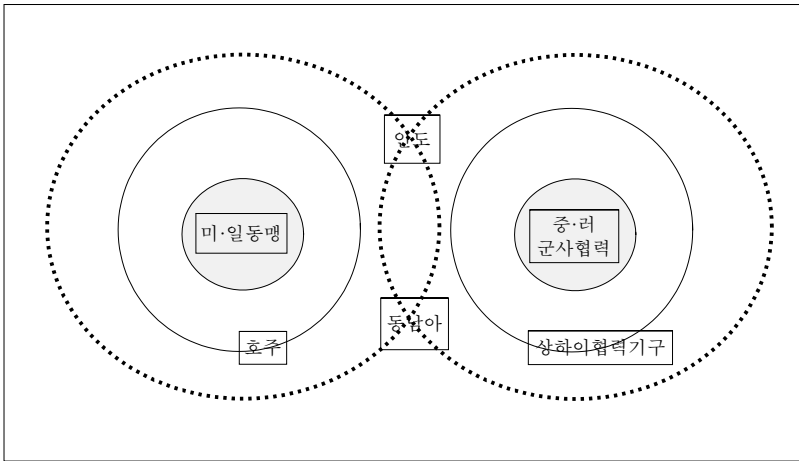
¹⁷⁶ 『경향신문』, 2007년 5월 31일.

¹⁷⁷ 총 24조로 구성된 이 조약은 전략협력 동반자관계의 장기적·전면적 발전(제1조), 핵무기 선제불사용과 전략핵탄두 상호 불겨냥(제2조), 러시아의 영토보존 정책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대만의 독립 반대에 대한 러시아의 재확인(제4~5조), 변경지역에서 군사적 신뢰 강화와 상호 군사력 감축(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Xinhua: Text of Sino-Russian Treaty,” *FBIS-CHI-2001-0716*, pp. 1~5.

I
II
III
IV
V
VI
VII
VIII

미국은 이라크 침공을 전후하여 일본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호주를 포섭하여 3자 군사협력체제로 발전시켰다. 이에 대항하여 중국과 러시아는 양자 차원의 안보협력을 긴밀히 하는 한편,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 등과 함께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하며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지역 세력판도는 미·일 대 중·러의 느슨하게 대립된 양대 축이 구축된 가운데 호주와 중앙아시아국가들이 각기 양대 축과 전략적 연대를 결성하고, 인도와 동남아시아지역에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VI-1> 미·일 대 중·러 양축과 세력구도



2005년 2월 미·일 안전보장협의회가 미·일동맹을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중·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공통의 전략목표로 설정하자 중국은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중국은 동년 3월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규정한 「반(反)국가분열법」을 제정하여 미·일 양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반국가분열법」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거나 외국 군대가 대만에 주둔할 경우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¹⁷⁸

중국과 러시아는 동년 8월 18~25일 극동지역 및 중국 산둥반도 및 인근해상에서 ‘평화의 사명 2005’로 명명된 양국간 최초의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¹⁷⁹ 이번 훈련에 중국군 8천, 러시아군 2천 여명이 참가하였고, 전투기·전략폭격기 등이 동원되었다. 중·러의 합동군사훈련은 동북아지역에 미·일 군사동맹에 대응하는 새로운 군사협력체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양국은 공히 UN의 원칙에 부합한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합동작전이라고 밝히고 제3국을 겨냥해서 실시한 훈련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SCO 6개국은 2005년 7월 카자흐스탄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안보·경협 문제 등을 논의한 후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특히 이 공동선언에서는 중앙아시아 주둔 미군의 철군시한을 설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 지역의 정권교체에 외세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¹⁸⁰ 중국과 러시아는 SCO 정상회담을 미국의 세력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SCO 정상 회의에는 6개 회원국 정상 이외에 이란·파키스탄·몽골·인도의 정상급 인사들이 옵서버로 참석하고 있다.

¹⁷⁸- 김홍규, “중국의 반(反)국가분열법과 양안관계 전망,” 『2005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6. 2), pp. 215~233.

¹⁷⁹- “중·러, 첫 합동군사훈련 개시(종합2보),” 『연합뉴스』, 2005년 8월 18일 <<http://bbs.yonhapnews.co.kr>>.

¹⁸⁰- “Full Text of the Declaration of the Heads of States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July 5, 2005, Astana” (July 7, 2005) <<http://toolkit.dialog.com>>.

푸틴 대통령은 2006년 3월 23일 베이징을 방문하여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정치·경제·군사·안보 전 분야에 걸쳐 양국관계를 더욱 확대·강화하는 내용의『중·러 공동성명』¹⁸¹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2006년 중국은 ‘러시아의 해’를, 2007년 러시아는 ‘중국의 해’를 각각 기념하기로 합의하였다.

중·러 양국 관계가 밀접해짐에 따라 SCO합동군사 훈련도 강화되고 있다. SCO는 2007년 8월 9~17일 러시아 우랄산맥 인근에서 ‘평화사명(Peace Mission) 2007’ 명칭으로 창설 이후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합동군사훈련에는 6,500명 병력과 100대가 넘는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이 참여하였다.¹⁸² 서방국가들은 SCO의 군사동맹 발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중국은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유대를 강화하며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한편, 남쪽으로는 미국의 일본·대만·인도를 잇는 포위 전략을 돌파하기 위해 동남아 지역에 대한 외교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남부에서 개최된 중국·아세안(ASEAN) 박람회를 계기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2006년 10월 30~31일 아세안 10개국 지도자들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경제·군사·문화 방면의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공동성명에서 중국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브루나이 등 아세안 6개국과 2010년까지 자유무역지대(FTA)를 설

¹⁸¹- 공동성명은 전문과 9장 및 29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Full Text of Sino-Russian Joint Statement Signed by Hu Jintao, Putin” (March 23, 2006) <<http://toolkit.dialog.com>>.

¹⁸²- “SCO Peace Mission 2007 Exercise Concluding Stage To Be Held” (August 16, 2007) <<http://toolkit.dialog.com>>.



립하고 2015년에는 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라오스와 FTA를 실현하기로 했다.¹⁸³ 한편, 중국은 향후 10년 내 완공을 목표로 운남성과 베트남·라오스·태국 등을 잇는 범아시아철도 건설을 추진하며 이들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가 구축되면 18억 인구를 보유한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게 된다. 중국은 경제협력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아세안 국가들과 군사협력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인도와도 협력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2005년 4월 9~12일 인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43년간의 양숙관계를 청산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중국·러시아·인도 3국 외무장관은 동년 6월 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회담을 개최하고 3국간 에너지 협력 및 정치대화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간 화해무드가 확산되자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를 방문하여 2006년 11월 21일 만모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양국 정상은 FTA 협정 체결 등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고 핵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¹⁸⁴ 그러나 양국의 해묵은 반목의 뿌리인 국경분쟁 등에 관해서는 여전히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러시아·중국·인도 3국의 전략적 협력을 모색해 오

¹⁸³- “Xinhua Cites Vietnam PM: Commemorative Summit Improves China-ASEAN Relations ‘Commemorative Summit Helps Promote China-ASEAN Relations To New High: Vietnamese PM- Xinhua headline” (November 1, 2006) <<http://toolkit.dialog.com>>.

¹⁸⁴- “中-파키스탄 FTA 체결,” 『연합뉴스』, 2006년 11월 24일 <<http://app.yonhapnews.co.kr>>.

I
II
III
IV
V
VI
VII
VIII

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07년 11월 12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군사·우주·통상 전반에 걸친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서 인도는 러시아가 추진 중인 5세대 전투기 PAK-FA(Su-50) 개발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양국은 2017년까지 무인 달 탐사선을 공동으로 제작·발사하기로 합의했다.¹⁸⁵ 러시아는 인도와 군사·경제협력을 강화하며 ‘미·일·호주 3각 동맹’에 대응하는 ‘러시아·중국·인도 3각 연대’가 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핵협력 협정을 체결한 인도는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우선시하며 러시아의 제의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일·중·러 4국에 대해 전방위 실리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인도는 미·일 대 중·러의 패권경쟁 구도에서 등거리 외교를 통해 균형자로 역할하며 실리를 챙기고 있다.¹⁸⁶

다. 한·중·일의 과거사·영토 갈등과 관계개선

동북아 역내 국가인 한국·중국·일본·러시아 사이에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따른 과거사 문제 및 영토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잠복해 있다. 한·일간에는 독도, 일·중간에는 조어대(釣魚臺: 중국명 다오위타이레위, 일본명 센카쿠 제도) 및 오키노토리 섬, 일·러간에는 북방 4도(쿠릴열도) 등을 둘러싼 영유권 문제들이 여전히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한 상태이다.¹⁸⁷ 이와 같이 역내 잠재된 갈등은 미·일 동맹이 강화되면서 중·일간 지역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 지자 외교적

¹⁸⁵ 『중앙일보』, 2007년 11월 14일.

¹⁸⁶ 『동아일보』, 2007년 10월 5일.

¹⁸⁷ 박경일 편저, 『동북아 안보의 도화선은 어디에 있는가?』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3), pp. 8~13.



I
II
III
IV
V
VI
VII
VIII

갈등으로 표출되었다. 특히, 일본 보수우익 세력들이 과거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고이즈미 총리가 2차대전시 1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직접 참배하자 이를 계기로 한국과 중국은 일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2001년 고이즈미 총리가 취임한 이후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로 인하여 일본과 중국·한국간에는 불편한 관계를 겪었다. 그 후 영유권 및 역사교과서 문제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었다.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1905년)됐던 100주년을 기념한다며 2005년 3월 17일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 제정을 강행하였다.¹⁸⁸ 이에 한국 정부는 시마네현의 부당성을 강력히 항의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지방자치 단체의 결정에 대해 중앙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일본 정부의 무성의한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은 제2의 한반도 침탈’이라는 강경한 어조의 대일 신독트린을 발표하여 한·일간 외교적 갈등이 표출되었다.¹⁸⁹

한편, 일본의 우익계열인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지원하고 있는 역사교과서가 2005년 4월 5일 검정을 통과하자, 중국 전역에서 반일 시위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일본의 우익단체들은 ‘중국타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거부’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흔들며 반일시위에 항의하는 반중 집회를 개최하였다.¹⁹⁰ 이와 같이 중·일간 민족주의 감정이 폭발하는 가운데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겠다는 발언을 계속하자 우

¹⁸⁸ 최영호, 『한·일관계의 흐름 2004-2005』 (서울: 논형, 2006), pp. 24~29.

¹⁸⁹ “정부 한·일관계 성명 전문,” 『연합뉴스』, 2005년 3월 17일.

¹⁹⁰ 배정호 외, 『동북아시아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p. 14~16.

이(吳儀) 중국 부총리는 5월 17~24일 일본 방문기간 중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 예정되었던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귀국하였다. 그 후 중국은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면, 우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주변국과의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외교를 전개하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2005년 10월 31일 개각을 단행하여 보수주의자인 아베 신조(安倍晋三)와 아소타로(麻生太郎)를 각각 관방장관과 외상에 기용하였다. 일본의 새로운 내각이 평화헌법의 개정을 추진하며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계속하고, 영토 문제에 대해서 확고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중국과 외교적 마찰이 지속되었다. 중국은 동년 12월 12일 제9차 ASEAN+3(한·중·일)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중·일 정상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미국은 일본의 과거사 왜곡 문제에 침묵할 경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일본과 중국관계는 2006년 9월 26일 아베총리가 새로 취임한 후 급속히 개선되었다. 아베 총리는 취임 후 10월 8일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아베 총리는 중국을 첫 정상회담 대상국으로 정한 것은 양국의 우호관계가 극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후진타오 주석도 아베 총리의 방문을 양국 관계 회복의 전환점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양국 지도자들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비롯한 공통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하고,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¹⁹¹ 아베 총리는 다음 날 서울을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

I
II
III
IV
V
VI
VII
VIII

국관계 개선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날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했다고 발표함으로써 북핵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깊이 논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고이즈미 총리 집권 기간 중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영유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 온 일본과 한국·중국관계는 아베 총리의 취임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아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이후 일·중 관계는 급격히 개선되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경제인사 100여명을 동행하여 일본을 방문하여 2007년 4월 11일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고위급 경제대화’ 설립에 합의하였다. 차오강촨(曹剛川) 중국 국방부장도 일본을 방문하여 동년 8월 30일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방위상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였다. 양국은 일본 해상자위대와 중국 인민해방군 군함의 상호방문에 합의하고, 중국군과 일본 자위대를 직접 연결하는 핫라인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¹⁹² 핫라인 검토는 양측 해상 경계선에 걸쳐 있는 센카쿠 열도와 동중국해 가스전에서 벌어질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중국 국방부는 9월 25일 선양 군구 훈련기지에서 인민해방군 보병사단이 실시하는 군사훈련에 일본 무관들을 초청했다.¹⁹³

‘아시아 중시 외교’를 표방하고 있는 후쿠다가 신임 총리로 취임하면서 일·중간 화해·협력 분위기는 한층 성숙되었다. 원자바오 총리는 2007년 11월 2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후쿠다 총리와의 회담에

¹⁹¹- “Japan: Editorials 9 Oct 06 Welcome Japan-China Summit Talks” (October 9, 2006) <<http://toolkit.dialog.com>>.
¹⁹²- “中國방부장 日해상자위대 기지 시찰,” 『연합뉴스』, 2007년 8월 31일 <<http://app.yonhapnews.co.kr>>.
¹⁹³- “中, 군사훈련에 日 첫 초청,” 『연합뉴스』, 2007년 9월 25일 <<http://app.yonhapnews.co.kr>>.

서 양국관계가 전환기를 맞았다며 우리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¹⁹⁴ 그 후 11월 28일 중국 군함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처음 일본을 공식 방문하였다. 중국의 최신 미사일 구축함 ‘선전호’는 도쿄만 요코스카 군항에 3일간 정박하면서 일본 방위성과 해군기지를 방문하였다. 한편,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 등 6개 부처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12월 1일 일·중 고위급 경제대화를 처음 개최하였다. 이 회담에서 양국은 경제 전분야에 걸친 협력과 합작 강화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라. 미국과 중·러의 외교적 협력과 갈등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억제와 접촉이라는 이중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¹⁹⁵ 미국은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국제무대에서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협조 없이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테러와의 전쟁 등 세계적인 문제와 북한의 핵개발 억제 등 동북아 지역 차원의 문제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 위협론’을 강조하며 추진되고 있는 군사·안보전략과는 별개로 경제·외교적 차원에서 미·중간의 협력은 점차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2005년 2월 미·일 안전보장협의회는 중국을 안보위협으로 설정한 공통의 전략목표를 발표하였지만, 당시 미국 내에서는 부시 2기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미 국무부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개입

¹⁹⁴ 『경향신문』, 2007년 11월 22일.

¹⁹⁵ 예즈칭 저, 이우재 역, 『중국 세계전략』 (서울: 21세기 북스, 2005), p. 283.



정책을 강화하여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현실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국무장관에 새로 취임한 라이스(Condoleezza Rice)는 졸릭(Robert B. Zoelick) 부장관, 번스(R. Nicholas Burns) 정무차관 등 국제주의자들을 중심으로 국무부를 재편성하였다. 이들 실용주의 성향의 국무부 인사들은 ‘문호개방(open door)적인 개입정책’과 ‘중국 위협론’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대중국정책의 새로운 틀을 모색하였다.¹⁹⁶ 그리고 중국측에 제안한 미·중 전략대화 요구를 수용하여 양국간 고위급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¹⁹⁷

제1차 미·중 고위급회담(Senior Dialogue)이 2005년 8월 1~2일 북경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이 회담은 차관급 전략회담으로 미국측에서는 졸릭 미 국무부 부장관, 중국측에서는 다이빙귀(戴秉國) 외교부 부부장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양국 대표들은 이 회담에서 군사·에너지·테러리즘·통상·대만·민주화·인권 문제 등 양국간 현안 및 국제안보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졸릭 부장관은 중국측에 국제체제 유지에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responsible stakeholder)로서 행동할 것을 강조하였다.¹⁹⁸ 그 후 졸릭 부장관과 다이빙귀 부부장은 워싱턴에서 2005년 12월 7~8일 제2차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였다. 2차 회담에서 양국은 다시 인권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하고 번영된 세계를 위한 협력방안, 이란·아프가니스탄·북한 문제 등에 관한 협력방안, 테러리즘·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에너

¹⁹⁶- Kerry B. Dumbaugh, “China-U.S. Relations: Current Issues and Implications for U.S. Policy,” *CRS Report for Congress* (Updated September 22, 2006), p. 5.

¹⁹⁷- 후진타오 주석은 ‘대미관계의 안정적 구축’을 중국 대외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2004년 11월 20일 칠레 APEC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미·중 관계 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전략대화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¹⁹⁸- USINFO.STATE.GOV, *U.S. Wants Deeper Cooperation With China, State’s Zoellick Says* (August 3, 2005).

I
II
III
IV
V
VI
VII
VIII

지 안보 협력, 그리고 무역수지 불균형 및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등에 관해 논의했다.

미 국방부도 중국과 군사외교를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펠런(William Fallon)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2006년 5월 9~15일 중국을 방문하여 차오강촨(曹剛川) 국방부장과 군사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하였다. 7월 5일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한 후 미·중간 협력관계는 보다 긴밀해졌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 1695호를 채택하고, 대북제재를 둘러싼 양국간 협력이 긴밀해지자 이와 더불어 미·중 군사협력도 강화되었다. 귀보슝(郭伯雄)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7월 18~24일 미국을 방문하여 럽스펠드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미·중 합동군사훈련 및 군사교류 확대에 합의하였다. 그 후 미국과 중국 해군은 9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해안에서 사상 최초로 1단계 합동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후 미·중 양국은 11월 19일 2단계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하였다.¹⁹⁹ 미·중 양국 군함들은 중국 광둥(廣東)성 동쪽 남중국해 해상에서 5시간 동안 P-3 대잠초계기와 수송기 등의 도움 아래 조난선박 구조훈련을 했다. 인도주의적 구조나 북한의 핵실험 같은 긴급사태가 일어났을 때 지원을 줄이고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실시한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대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2006년 11월 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3차 고위급회담에서 양국은 국제현안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북핵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번즈(Nicholas Burns) 미

¹⁹⁹- Shirley A. Kan, "U.S.-China Military Contacts: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Updated August 20, 2007), pp. 62~63.

국무부 차관은 북한 핵문제가 미·중관계의 ‘정면의 정중앙’(front and center)에 있는 문제라며 중국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다.²⁰⁰

2007년 6월 20~2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차 고위급회담에는 네그로폰테(John Negroponte) 미 국무부 부장관과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상무 외교부 부장이 대표로 참석하여, 북한과 이란 핵문제 해결에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중 관계가 국익위주의 실용주의 성향을 보이게 되자, 경제 현안문제가 새롭게 부각되었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5년간 미·중 무역총액은 2배 이상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미·중간 무역수지 격차가 급격히 확대되어, 2005년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2,017억 달러에 달했다.²⁰¹ 이에 미국은 중국에 대해 경제회담 개최를 요구하여 양국은 매년 2회 최고위급 경제전략대화(Strategic Economic Dialogue)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6년 12월 14~15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차 미·중 경제전략 대화에는 미국측 대표로 폴슨(Henry Paulson) 재무장관, 연방준비이사회 의장, 상무장관, 에너지장관 등 미국의 경제부처 장관급 인사 7명이 참석하여 사상 최대의 경제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은 양국 경제의 강력하고 균형 잡힌 성장과 번영을 위해 중국은 위안화의 환율 유연성을 높이고 미국은 국민저축을 늘리는 데 힘쓰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이 무역장벽 해소, 중국의 금융서비스 개방,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투자 장벽 해소 등을 위한 5개 실무단을 만들어 항목별로 문제

²⁰⁰- Nicholas Burns,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Political Affairs, *Testimony to the House Inter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November 15, 2006).
²⁰¹- John Frisbie and Michael Overmyer, “U.S.-China Economic Relations: The Next Stage,” *Current History* (September 2006), p. 244.

를 풀어 나가기로 합의했다.²⁰² 그리고 2007년 5월 22일 워싱턴에서 제2차 중·미 경제전략대화를 개최하여 폴슨 미 재무장관과 우이(吳儀) 중국 부총리 등 양측 대표단은 금융서비스, 에너지·환경, 민간 항공기 운항 부문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중국 위안화 절상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미·중간 경제·외교분야에서 협력이 증진되면서 군사분야 협력도 한층 더 진전되었다. 장친성(章沁生)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조리는 2007년 6월 1일 싱가포르에서 개막된 제6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미·중 군사직통전화(hotline) 개설을 위한 모든 기술적인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밝혔고, 이에 게이츠(Robert Gates) 중국이 원하면 MD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을 투명하게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²⁰³ 그 후 게이츠 국방장관은 중국을 방문하여 11월 5일 차오강촨(曹剛川) 국방부장과 군사 핫라인 개설에 합의했다.

최근 미·중간에는 군사 분야까지 접촉이 확대되고 있지만, 양국은 대만·티베트 문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다. 호주 시드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007년 9월 6일 부시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은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이 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현재의 중·대만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즉, 대만 정부의 유엔 가입 움직임을 지지하지 않는 반면,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공격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²⁰⁴ 중국은 미

²⁰²- “HK WWP: First Strategic Economic Dialogue To Add New Chapter in Sino-U.S. Ties Article by Ching Che-yuan: “The First Strategic Economic Dialogue To Add a New Chapter in Sino-U.S. Relations” (December 15, 2006) <<http://toolkit.dialog.com>>.

²⁰³- 『중앙일보』, 2007년 6월 5일.



국이 대만에 첨단무기를 판매하는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주민들의 자치독립 문제에 간여하는 것도 경계하고 있다. 미 의회가 10월 16일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여 비폭력·인권옹호 노력 공로로 황금메달을 수여하자, 티베트 분리 독립 움직임을 우려한 중국 외교부는 이를 내정 간섭이라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대만·티베트 등 내정문제로 간주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미국의 간섭에 특히 반발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 11월 미 해군의 기뢰제거함 가디언호, 패트리엇호에 이어 함공모함 키티 호크호의 홍콩 정박을 거부하고, 11월 22일에는 순양함 뢰벤 제임스호의 입항도 잇따라 거부하였다.²⁰⁵ 중국은 미국과 관계개선을 위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대만·티베트 문제 등에 관해서는 무조건 양보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 관계 또한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테러와의 전쟁 등 초국가적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 협력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 2006년 10월 14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및 핵개발 중단을 거부한 이란에 대한 동년 12월 23일 제재 결의를 모두 지지하였다. 그러나 MD체제 동유럽 배치, 이란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그리고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 국가들의 민주화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외교적 마찰을 계속해 오고 있다.

2006년 7월 15일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에서 개막된 선진 8개국(G8)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은 언론·종교 자유보장 및 이라크 민주화 문제 등에 푸틴 대통령이 따라 주기를

204 『동아일보』, 2007년 9월 7일.

205 『연합뉴스』, 2007년 12월 2일 <<http://app.yonhapnews.co.kr>>.

I
II
III
IV
V
VI
VII
VIII

바란다고 언급하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미국이 이라크에 이식한 것과 같은 민주주의는 원치 않는다”며 공박했다.²⁰⁶ 그러나 G8 정상회의에서 양국은 세계 핵에너지, 핵무기 및 테러 전쟁 등의 문제에 대해 합의하였다. 그리고 북한이나 이란이 테러 세력에 핵 물질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핵테러방지구상」에 합의하였다. 동년 10월 30~31일 모로코의 수도 라바트에서 개최된 「전지구적 핵테러방지구상」(GICNT) 회의에서 5대 핵보유국인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는 “테러단체가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핵과 방사능 물질 및 재료의 파악과 통제, 물리적 방어체계를 개발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²⁰⁷

2007년 미·러간에는 미국의 MD체제 구축을 둘러싼 외교적 갈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미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유럽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폴란드에 요격미사일, 체코에 첨단레이더망 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자, 러시아는 이를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크게 반발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2007년 4월 26일 국정연설에서 “NATO는 러시아 국경을 따라 군기지를 구축하고 체코·폴란드에 MD 기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유럽재래식무기감축협약」(CFE) 이행 유예를 선언했다.²⁰⁸ 푸틴 대통령은 6월 3일 G8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미국이 동유럽에 MD 기지를 설치하

²⁰⁶- The White House, *President Bush and Russian President Putin Participate in Press Availability* (July 15, 2006)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6/07/20060715-1.html>>.

²⁰⁷- “핵테러방지구상회의 불법핵물질 저지 강화 선언 채택,” 『연합뉴스』, 2006년 11월 1일 <<http://app.yonhapnews.co.kr>>.

²⁰⁸- 『세계일보』, 2007년 4월 27일.



면 러시아가 위협받을 것이 명백함으로 러시아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²⁰⁹ MD문제로 미·러간 신경전을 벌리게 되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게이츠 국방장관은 10월 12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러시아 외무·국방장관들과 MD문제와 이란 핵문제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푸틴 대통령은 카스피해 연안 5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10월 16일 이란을 방문하여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이 회담에서 푸틴대통령은 이란의 평화적인 핵개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부시 대통령은 다음 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²¹⁰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 돌아가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철군 시한을 제시해야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미·러 정상간 신경전이 계속되었다.

미국은 러시아의 MD배치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에 동참하도록 회유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²¹¹ 미국은 체코와 폴란드에 MD기지를 구축하되 이들을 러시아 및 NATO의 MD기지과 통합 운영하여 미국·유럽·러시아의 공동안보를 증진시키고, 러시아 전문가들로 하여금 폴란드 내 미군 기지를 정기적으로 사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란의 탄도 미사일이 유럽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시 될 때까지 요격 미사일을 폴란드에 실전배치하는 시기를 늦추겠다는 내용을 포함

209- 『중앙일보』, 2007년 6월 5일.
210- 『문화일보』, 2007년 10월 19일.
211- 『한국일보』, 2007년 11월 22일.

하고 있다. 그러나 동유럽 MD배치가 자국의 핵 전력을 무력화시킬 것을 우려한 러시아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CFE 이행 중단을 확정하였다.

최근 미·러간에는 러시아 국내 민주화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가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미국이 인권·민주화 문제 등을 내세워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장기집권 반대 구호를 외치며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야당 인사들과 시민을 대거 강제연행 했다. 이에 대한 부시 대통령은 러시아 선거의 비민주적 진행과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12월 2일 실시될 예정인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총선을 앞두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러시아 당국의 비협조를 이유로 선거 감시활동 철회를 결정하자, 푸틴 대통령은 OSCE의 총선 감시활동 계획이 철회된 것은 미국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면서 미국을 비난하였다. 하원 총선이 실시된 후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미 백악관은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여 미·러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동북아 4국은 안보차원의 국익을 위해 군비경쟁을 지속하는 한편, 외교적 실리를 위해 협력과 견제를 반복하고 있다. 미·일·중·러 4국의 세력 경쟁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북아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자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 억제에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미·일동맹 강화는 주한미군 재편 및 한·미동맹 재정립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가. 북핵문제에 대한 공조와 대립

유일 초강대인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문제를 세계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통하여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 및 수직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²¹²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이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이 핵개발이나 이전 등을 통해 새로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말하며, 수직적 확산이란 핵보유국 내에서의 핵무기 증가, 핵무기 기술발전, 핵실험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NPT는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5개국에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다. 핵 보유국에 대한 핵군축 의무는 강제조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IAEA의 사찰의무도 없다. 그러나 비핵국들은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금지됨은 물론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NPT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중국·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데 국익을 같이 하고 있다. 일본은 핵보유국이 아니지만 대북정책에 관해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2001년 1월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은 MD체제 구축을

²¹²- NPT(Non-Proliferation Treaty)는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1970년 출범한 국제조약이다. 현재 회원국은 북한을 제외하고 187개국이다. 핵을 가진 나라 중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은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조하였다. 북한 등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MD체제 구축이 불가피하다며 미국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략적 목표를 정당화하였다.²¹³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더불어 중국 군사력 증강을 지역 불안요인으로 인식하여 미·일동맹을 강화하였다.

한편, 중국·러시아·북한은 반MD 연대를 강화하였다. 장쩌민 국가주석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2001년 7월 16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과 「모스크바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²¹⁴ 중·러 양국은 새로운 조약 체결을 통해 동등한 동반자관계 및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을 천명하고, 공동선언에서는 탄도탄요격미사일(ABM)조약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임을 명시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러시아를 방문하여 동년 8월 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미사일 문제, 철도연결 문제 등 양국간 현안을 담은 8개 항의 「모스크바 선언」을 발표하였다.²¹⁵ 「모스크바 선언」은 상당부분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데, 모스크바 선언 2항은 미·소가 “1972년 체결한 ABM 협정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으로써 전략 공격무기의 감축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데 유의했다”고 밝혀 ABM 협정의 준수는 물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²¹³- 여인곤 외,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 93.

²¹⁴- “Xinhua: Text of Sino-Russian Treaty,” *FBIS-CHI-2001-0716*, pp. 1~5; “Text of Joint Statement Issued by Jiang Zemin, Putin in Moscow,” *FBIS-CHI-2001-0716*, pp. 1~5.

²¹⁵- 『조선일보』, 2001년 8월 6일.



제임스 켈리(James Kelly) 동·아태 차관보가 2002년 10월 3~5일 북한을 방문한 후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였다.²¹⁶ 그 후 미국은 북핵문제를 북·미 양자간 협상이 아니라 중국·러시아·일본·한국 등을 활용한 다자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미국은 북한을 다자협상 틀에 묶어 더 이상 핵 카드를 이용한 벼랑끝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핵문제 해결 이후 보상을 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관련국에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다자협상을 통해서도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국·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거부할 명분이 없게 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중재를 통해 북한이 다자회담을 수용할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2003년 8월 27~29일 베이징에서 남북한·미국·일본·중국·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켈리 미국 대표단 단장은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핵개발을 완전 폐기해야 하며 NPT에도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 핵 폐기의 진전에 따라 식량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를 제공하며,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²¹⁷ 한편, 북한은 북·미간 불가침 조약 체결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폐기와 북·미 관계정상화 과정은 상호 동시행동의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¹⁸ 6자회담에 참석한

²¹⁶-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월 16일 켈리 특사 방북시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인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Richard Boucher, Spokesman,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Press statement" (October 16, 2002) <www.state.gov/r/pa/prs/ps/2002/14432.htm>.

²¹⁷- 여인곤 외,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p. 88.

²¹⁸- Korean Central News Agency(KCNA), "Keynote Speeches Made at Six-way Talks" (August 29, 2003) <www.kcna.co.jp/index-e.htm>.

I
II
III
IV
V
VI
VII
VIII

국가들은 대화를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지만 북·미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함으로써 6자회담은 공전을 거듭하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및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군사적 응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다. 양국은 6자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미국의 경직된 대북협상 태도를 비난하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문제를 대미 협상카드로 이용하는 경향도 보였으나,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²¹⁹ 중국은 특히 6자회담 주도국으로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으려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2006년 7월 5일 미사일 7발을 시험발사 하자 미·일이 주도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체결을 지지하였다. 러시아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였다.²²⁰ 그 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은 북핵문제에 대한 미·일·중·러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켰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 미국과 일본은 유엔 헌장 7장을 포괄적으로 원용한 대북 제재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군사적 제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유엔헌장 7장을 원용은 하되 군사조치를 거론한 42조를 제외하고 41조만을 명시할 것 주장하였다.²²¹

219- 김국신 외,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서울: 통일연구원, 2006).

220- “Russia condemns N.Korea nuclear test-Putin” (October 9, 2006) <<http://en.rian.ru/russia/20061009/54646166-print.html>>.

221- 유엔 헌장 제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행동’을 규정하고 있다. 41조 비군사적 강제 조치에는 경제관계 및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의 중단과 외교관계 단절 등이 포함된다. 42조는 공군·해군·육군에 의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측 제안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유엔 안보리는 10월 14일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 군사조치가 배제됐으나 강력한 경제·외교적 제재를 내용으로 한 대북 결의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교역을 단계적으로 감축시키고 군사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물자에 대해서는 통관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후진타오 주석은 특사를 파견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2차 핵실험 계획을 포기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설득하였다. 러시아도 안보리 결의를 따르는 한편,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및 추가적인 핵실험 방지 등을 설득하였다.

부시 미 행정부는 2006년 11월 7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 이후 대북정책을 신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6자회담 재개 및 북·미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7년 2월 8~13일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 결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에 관한 합의문』(2·13 합의)을 채택하였다.²²² 2·13 합의는 북한이 60일 이내 영변 핵시설에 대한 가동 중단 및 봉인하고, 다음 단계에서 북한이 모든 핵계획을 완전히 신고하고 불능화(disablement)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7월 14일 5MW 원자로 등 영변 5개 핵시설에 대한 가동을 중단하고, IAEA 요원들은 이에 대한 봉인조치를 취했다. 그 후 미·중·러 핵전문가들이 9월 11~15일 북한을 방문하여 영변 핵시설 불능화의 기술적 문제 처리를 점검했다. 향후 북한이 핵불능화에 이어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핵시설의 완전폐쇄, 그리고 핵물질 및 핵무기의 폐기 등의

I
II
III
IV
V
VI
VII
VIII

²²²- 김국신,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7).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도 본격화될 것이다. 미·일·중·러 4국은 이와 같이 핵협상이 새로운 단계로 신속하게 발전되도록 6자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하고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한편, 2·13 합의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개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²³ 한반도 평화협상은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여한 4자회담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과 러시아가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될 한반도 평화협상은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지위변경 등 새로운 안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핵협상과 달리 동북아 4국의 일치된 입장을 쉽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 주한미군 재편과 한·미동맹

미국은 2001년 10월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 후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작업을 가속화하였다. 2002년 12월 개최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는 9·11 테러 이후 국제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미·일 동맹의 방향성을 재설정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은 일본과 주일 미군 재편협상을 진행함과 동시에 한국정부와 주한미군 재편협상을 진행하였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2002년 12월 개최된 제3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주한미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제고하며 한·미동맹을 공고히 한다는 취지에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

²²³ 위 의 글, pp. 2~6.



상'(FOTA: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Policy Initiative)을 연구하기 위한 협의체를 발족시키는 데 합의하였다. 2003년 4월 8~9일 제1차 FOTA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 주한 미군 재배치, 한·미 연합군사능력 증진 및 연합지휘관계의 중장기적 변화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²²⁴ 그 후 5차례에 걸친 FOTA 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를 동년 11월 17일 제35차 한·미 안보협의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²²⁵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 한·미 양측은 2006년까지 용산기지를 오산과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큰 틀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용산기지 내에 있는 유엔사령부와 한·미 연합사령부의 잔류 또는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 한강이남 2개 권역으로 2단계에 걸쳐 재배치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1단계는 한강 이북의 군소 기지들을 동두천·의정부 지역으로 통합함과 아울러 한강 이남에 대체시설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2단계로 실시하게 될 한강 이북 주한미군 주력 부대의 한강 이남 재배치에 관한 구체적 시기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양국 최고 지도부가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연합방위능력 증강과 관련, 미국은 2003~2006년 4년에 걸쳐 정찰용 무인항공기 배치, 지휘·통신체계 강화, 신속기동여단(striker부대) 순환배치, 최신형 PAC-3 패트리엇 미사일 도입 등과 관련하

²²⁴-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uture of the ROK-US Alliance's Policy Initiative) 회의 내용은 국방부, 『보도자료』, 2003년 3월~2004년 8월 <www.mmd.go.kr/webmodule/htsboard/hbd/hbdlst.jsp?typeID>.

²²⁵- USFK, "Joint Communique: Thirty-Fifth Annual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November 17, 2003) <http://www.usfk.or.kr/en/future_initiative_05.php>.

I
II
III
IV
V
VI
VII
VIII

여 150개 분야에 110억 달러 상당의 군비를 투자할 예정이다.²²⁶ 한국은 이미 도입을 결정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포함해 대공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 미사일, 무인항공기(UAV) 등 첨단 무기와 장비를 도입하고 대북 정보 수집력 강화를 위한 정보 장비를 크게 확충할 계획이다.

군사임무 전환과 관련, 기상예보, 공지사격장 관리, 헌병 전장순환 통제 등 주한미군이 담당하던 10개 임무를 한국군의 능력을 고려하여 연차별 이양하기로 하였으며,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임무는 현 체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대화력전 수행본부 임무는 한국군의 능력을 평가한 후 전환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로 하였다.

2004년 9월까지 12차례 개최된 FOTA회의를 통하여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가 일단락 짓게 되자, 동년 10월 개최된 제36차 SCM에서 FOTA회의 대신 『한·미 안보정책구상』(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이라는 새로운 회의체를 구성하여 동맹조정을 위한 3단계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²²⁷ 한·미 양국은 SPI회의에서 안보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공동평가를 내리고, 그에 기초해 동맹의 미래 공동비전을 설정한 후, 동맹비전에 맞춰 한·미 군사지휘관계를 조정하기 하였다. 2005년 2월 제1차 SPI 회의가 개최된 후 1~2단계의 공동연구가 마무리되자, 동년 9월 28~30일 제4차 SPI 회의에서 양측은 작전통제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 후 10월 21일 제37차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지휘관계와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협

²²⁶- 국방부,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2003년 7월 <www.mnd.go.kr>.

²²⁷- 최강, “포괄적·역동적 한·미동맹을 위한 주요 과제,” 『2005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6. 2), pp. 159~173.



I
II
III
IV
V
VI
VII
VIII

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후 한·미 양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의 지속주둔 및 미 증원군 파견 보장, 미국의 정보자산 지원 지속, 한반도 전쟁 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유지 등 4대 원칙 아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였다.

미국은 2010년 안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반면, 한국은 2012년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한·미 양국은 환수시기에 대한 입장 차이를 조율하여 2006년 10월 2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8차 SCM에서 2009년 10월 15일 이후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²²⁸ 그 후 한·미 국방장관은 2007년 2월 23일 워싱턴회담에서 회담을 개최하고 2012년 4월 17일을 기해 한·미연합사(CFC)를 해체함과 동시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측에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²²⁹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을 미래 전쟁에 적합하게 기동화·신속화·경량화 시키고 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작전지역까지 원거리 투사능력을 갖추도록 군비태세를 변환시키고 있다. 해외주둔 미군은 주둔지 현지 상황에 적합하게 맞출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전세계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²³⁰ 즉, 세계 분쟁지역 어디에서든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갖추어

²²⁸- 『제3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2006년 10월 20일.

²²⁹- 최강, “한·미동맹 운영체제 관련 주요 현안과 전망,” 『2007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7. 5), pp. 85~98.

²³⁰- Paul Wolfowitz, *Hearing on U.S. military presence in Iraq: implications for global defense posture*, Before the House Armed Service Committe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June 18, 2003).

야 한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활동범위도 전세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이 개입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인식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체결하였다. 2006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SCAP)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보장문제에 합의하였다.²³¹ 이 합의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되, 미국은 한국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하였다. 즉, 미국은 한국과 동맹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공통의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지는 않았다.

한편, 전략적 유연성에 입각한 해외주둔미군 재배치는 동맹국의 군비태세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²³² 최첨단무기로 무장한 신속대응군으로 재편된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의 군사력도 증진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장차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전력증강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면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주한미군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국방개혁 2020』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한국군의 과학화·첨단화·정예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²³³ 특히 한국은 동아시아

²³¹- 외교통상부, “2006년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 전략적 유연성 설명자료,” 2006년 1월 22일 <www.mofat.go.kr/mofat/mk_a008/1197362_5496.html>.

²³²- Douglas J. Feith,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Transforming the U.S. Global Defense Posture” (December 3, 2003) <www.defenselink.mil/speeches/2003/sp20031203-0722.htm>.

²³³- 국방부, 『국방개혁 2020과 국방비』 (서울: 국방부, 2006. 10), pp. 24~29.



아 군비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일본의 군사력과 적절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007년 5월 25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진수하고,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등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대책의 일환이다.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협상을 주도하며 평화통일을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주 국방력 증진이 필수적인 과제이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VII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1. 기본 방향

동북아시아의 세력판도는 미국·일본 대 중국·러시아를 축으로 하는 느슨한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다. 초강대국인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은 역내 안정 유지를 바탕으로 하여 현실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과 중국의 부상을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경계하며 일본과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에 편승하여 국제사회에서 정치·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공동의 전략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일동맹이 새로운 차원으로 강화됨에 따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정책을 견제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합동군사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일 대 중·러 양축이 각기 배타적인 군사동맹 블록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일·중·러 4국은 각기 빈번한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적 협력과 견제를 반복해 오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미·일 해양세력과 중·러 대륙세력의 교착지점에 위치한 한국은 주변정세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냉철한 현실적인 정책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우선 동아시아 군사·안보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안보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동아시아 세력판도는 최종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정착될지 불확실하지만 향후 상당기간 동안 미국의 지도력에 기초한 질서가 유지될 것이다. 2020년경에도 동아시아 역학구도는 정치·경제적으로 다극화된 양상을 보이면서도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미국의 압도적 우위가 유지되는 단극-다극 체제(uni-multipolarity)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의 역학관계 현실과 미국 패권질서의 지속 가능성을 감안

I

II

III

IV

V

VI

VII

VIII

할 때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은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면서 일본·중국·러시아와도 안보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즉, 전통적인 우방이며 초강대국인 미국과 동맹관계를 지속·강화하며 이를 기반으로 주변국들에 대해 실용주의적인 실리외교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

동북아 4국은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경쟁하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데 대해서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한반도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국의 정치·사회적 안정과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분쟁에 연루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형성된 국제공조체제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6자회담을 통하여 형성된 미·일·중·러의 협력관계가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로 확대·발전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세부 추진 방안

가. 미·일동맹 성격에 대한 현실적 인식

부시 행정부가 9·11테러 이후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 노력을 강화하며 공세적인 안보정책을 추진하자 이제 미국이 제국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었다.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전후하여 주일미군을 재배치하며 미·일동맹을 강화하자 주변국들은 미·일



동맹의 성격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특히 고이즈미 수상이 이라크를 공격하는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자 이제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경계심이 표출되었다. 미국과 일본이 군사력을 최첨단화하기 위한 국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미·일동맹이 동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자극하고 있다는 비판은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정책은 세계적인 군축과 평화를 주장하는 이상주의적인 기준에만 입각하여 추진할 수 없는 것이다. 먼저 미·일동맹을 강화시키고 있는 양국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현실적인 국익에 부합되는 안보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현대화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균형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도 2004년 12월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지정학적 힘의 중심이 2020년에 아시아, 그 중에서도 중국 쪽으로 기울고 그 무렵엔 중국 경제가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2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²²³ 동아시아 전문가들도 일반적으로 2020년경에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일본과 대등해지거나 또는 일본을 능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수반되는 사회적 부작용 등을 고

²²³ 미 중앙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는 2004년 12월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지정학적 힘의 중심이 2020년에 아시아, 그 중에서도 중국 쪽으로 기울고 그 무렵엔 중국 경제가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2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은 중국이 2000~2010년까지 8~9%를 상회하는 성장을 유지하며, 2010~2020년까지 8%를 상회하는 성장을 이룩한다는 가정 하에 제시된 예측이다.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Mapping the Global Future: Report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s 2020 Project* (December 2004).

I
II
III
IV
V
VI
VII
VIII

려하면 중국 경제도 순탄하게 발전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²²⁴ 한편, 서구 산업화 과정은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의식도 높아져 정치체제의 민주화가 불가피 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 중국이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을 어떠한 형태로 조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여하튼 2020년 경에는 당연히 경제력에 기초한 국력 차이가 동아시아 안보관계의 새로운 현실과 한계를 재구성하게 될 것이다.

향후 동아시아 세력판도는 경제력에 기초한 국력의 차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중국이 현재 성장 추세를 지속하게 되면 2020년경 동아시아 역학구도는 미국의 패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상태에서 일본이 중국과 패권경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일 양국과 중국관계는 경제력 차이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양국이 국가이익에 기초한 전략적 구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문제와 더불어 외교관계의 실질적인 상호작용에 달려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인권·민주주의·시장경제 등을 중요시하는 가치외교를 전개하고 있음으로 중국의 민주화 수준 또한 3국 관계를 설정하는 관건이 된다. 중국이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화로 나갈 경우 미·일·중 3국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동아시아 안정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사회주의체제를 지속하며 산업화와 군사현대화에 성공할 경우 미·중간 패권경쟁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이 강화되었을 때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하며 호주·인도를 포함한 아·태지역 민주국가연대

²²⁴ 이근·김병국 공편, 『2020 중국 리스크: 중국경제 중장기 예측과 리스크 분석』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7), pp. 295~310.



를 결성하고 동남아 국가들과도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 개입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중국을 포위하는 형상의 전략구도를 추진하는 미국의 대중국정책은 헤징전략(hedging strategy)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²²⁵ 헤징전략은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정책을 추진하되 이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비책으로써 현실주의적인 세력균형정책을 함께 추구하는 ‘위험방비(防備) 양면전략’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²²⁶ 백악관이 발간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와 미 국방부의 『4개년 국방계획검토』(QDR)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우호·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을 추진하면서 이와 동시에 다른 가능성에도 대비하기 위한 헤징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다.²²⁷

한편,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헤징전략에 상응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러시아와 전략적 유대를 강화하며 중앙아시아·동남아국가들과 전략적 제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상호 헤징’(reciprocal hedging)을 구사함으로

²²⁵- Evan S. Medeiros, “Strategic Hedging and the Future of Asia-Pacific Stability,”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9, No. 1 (Winter 2005~2006), pp. 145~167.

²²⁶- 경제 용어로서 헤징(hedging)은 ‘올타리를 쳐서 안전하게 투자를 관리한다는 뜻이다. 즉, 환율·금리·주가지수 등의 변동에 따른 거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대중국정책을 헤징으로 특징짓고 있으나,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헤징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정의된 개념 규정이 없다. 한국어 번역에 관해서도 일치된 견해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이 논문에서는 위험을 방지하고 대비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이라는 의미에서 ‘위험 방비 양면 전략’이라고 해석하였다.

²²⁷-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rch 2006), pp. 40~42; U.S. Department of Defense, *Report of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February 6, 2006), pp. 28~30.

I
II
III
IV
V
VI
VII
VIII

써 각기 군비를 증강하고 우방국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²²⁸ 즉, 미·중 양국은 상호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헤징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오히려 대결적인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risk)을 내포하고 있다.²²⁹ 그러나 헤징전략은 기본적으로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세적인 성격을 지닌 전략이라기보다는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정책을 투자하는데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어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이 헤징전략을 추구함으로써 달성하고자하는 전략적 목표와 미·일 양국의 실질적인 외교행태에 비추어 보면, 미·일동맹이 적대적 대립구도를 고착시키는 배타적 군사동맹 블록으로 발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미·일 양국은 군사동맹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미·일동맹을 공동의 자산으로 사용하여 자유와 번영이 보장되는 새로운 아시아질서 구축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미·일동맹을 확대하여 아·태지역 민주국가 연대체제를 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함과 동시에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로 행동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패권주의적인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도록 국력신장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역내 세력판도가 다극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즉, 향후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관계가 중국의 패권세력에 종속되

²²⁸-Evan S. Medeiros, “Strategic Hedging and the Future of Asia-Pacific Stability,” p. 146.

²²⁹-Evelyn Goh, “A strategic insurance policy,” Asia Times (September 6, 2006) <<http://www.atimes.com/atimes/China/HI106Ad02.html>>.



지 않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국 주변국가들에 대한 국력발전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²³⁰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들은 미·일동맹의 궁극적 지향점은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입각한 개방적이고 포섭적인 동맹으로 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부상에 따른 아시아의 새로운 세력판도에 전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태지역 민주국가 연대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미·일동맹은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군비경쟁을 자극하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패권지향적 외교를 억지함으로써 동아시아 안정 유지에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하튼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전략적 대화를 통하여 3국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나. 전방위 실리외교 전개

미국이 9·11테러 이후 제시한 공세적인 국가안보전략은 대부분 중동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되었다. 9·11테러 이후에도 동아시아 정세는 여전히 탈냉전기의 특징인 유동성과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미·일 양국은 중국의 패권세력으로 부상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어 시장경제를 수용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 실체가 불분명하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된다는 사실 자체가 안보 위협이 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본주

²³⁰- Daniel Twining, “America’s Grand Design in Asi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0, No. 3 (Summer 2007).

의 시장경제의 규범은 이와 같은 논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위협이 된다고 강조하지만 현재 중국의 군사력 수준 및 군비태세는 미국·일본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못하고 있다. 미래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현재 중국을 적대시할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의 위협은 그 시점에서의 중국의 군사전략에 비추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목표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러시아의 세계전략 목표는 서구 유럽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직접적인 영향력 하에 있는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일 대 중·러 양측의 대립구도에서 어느 한편에 확고하게 서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이들도 미·중의 헤징 전략에 대비되는 자국 나름의 ‘위험 방비 양면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양측에 모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의 세계패권에 직접적으로 도전하기 어려운 국력의 한계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해 전통적 의미의 세력균형정책은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 더욱이 중·러는 미국을 견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공동인식을 넘어선 쌍무적인 군사·안보협력에 발전방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립하지 못한 상태이다.²³¹ 양국 모두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정책을 견제하며 우회적

²³¹ 러시아인들에 대한 2007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중·러간 유대 강화에 약 4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인들 63%가 러시아가 중국보다 국제무대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의 국력과 국제적 영향력이 계속 증진되어 가면 러시아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미지수이다. Christopher Marsh, “Russia Plays the China Card,” *The National Interest*, No. 92 (November/December 2007), pp. 68~73.



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국제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사안별로 협력하며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미·일·중·러 4국은 각기 국가안보를 강조하며 동아시아지역의 세력균형정책을 추구하고 있지만 안보논리의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외교 행태는 실리위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9·11테러 직후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공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고이즈미 수상이 퇴진한 후 일본과 중국은 과거사·영토 문제를 둘러싼 비생산적인 외교적 갈등을 해소하고 양국관계를 전략적 호혜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 점령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입지가 약화된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등 국제적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러시아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일·중·러 4국간에는 국익 우선의 실리외교가 다각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각국의 실리위주의 외교 행태는 동북아정세가 단기간 내에 미·일 대 중·러의 대립구도로 경직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일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중국·러시아의 경제발전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동북아질서는 2020년경에는 보다 다극화된 현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국가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미국의 막대한 국방예산과 군사·과학기술 능력을 감안하면 미국은 이 시점에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① 유동성을 보이고 있는 동북아정세의 현실, ② 점차 다극화 되어 가는 동북아정치질서, ③ 군사력의 수준에서는 여전히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가 유지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의 외교안보정책

I
II
III
IV
V
VI
VII
VIII

은 우선적으로 초강대국인 미국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일본·중국·러시아 등과의 안보협력도 점진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북아 4국이 안보위협에 상이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국익을 위해서 실리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외교정책도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안보정책과는 별도로 실용주의적인 전방위 실리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먼저 지역패권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협력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경제적 이익 물론 남북관계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도 한·중간 협력은 더욱 증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구려사 왜곡 등 동북공정을 둘러싼 갈등을 고려해 볼 때 한·중간에는 급속한 교역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가차원의 기본적 신뢰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중국과의 안보협력은 통일한국을 바라보는 장기적 국가전략 구도하에서 신중하게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러시아와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며 안보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남북한에 대해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확보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외교적 과제이다.

다. 한·미동맹 강화 및 전력 증강

9·11테러 이후 한·미간에는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외교적 갈등을 겪었다. 미국이 공세적인 반테러 세계전략을 추구하며 북한을 이란·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북 압박정책을 강화하자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이 상충되는 양상을 보였다.²³² 그러나 2007년

²³² 여인곤 외,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 통일

2·13합의를 체결한 이후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미동맹 재조정 과정에서도 양국은 안보위협 인식 및 전략적 목표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 주한미군 기지를 재조정하는 협상에서 북한의 군사위협을 억제하는데 주요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은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여 주변 지역의 분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갖추기를 원했다. 한국으로서는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하는데 부담감을 느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관해서 미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함으로써 타협점을 찾았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시기에 관한 협상에서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미국은 협상 초기 2010년 안에 돌려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결국 한국 의견을 수용하여 2012년 4월 17일을 기해 한·미연합사를 해체함과 동시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 측에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 해결 및 군사동맹 합의사항 이행 과정에서 긴밀한 공조를 보이고 있다. 한·미동맹은 전통적으로 한국 외교의 기반이었고,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동맹은 앞으로도 우리 외교의 자산이 된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한·미 공조체제는 긴밀히 유지되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아직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북한정세에 대한 인식차이 및 대북정책 우선순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조율 노력을 보다 긴밀히 추진

연구원, 2003), pp. 79~80.

I
II
III
IV
V
VI
VII
VIII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일동맹이 강화되면서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한·미·일 대북공조체제도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각기 미국과 군사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불행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안정적인 안보협력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적대적으로 제휴하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이에 반비례하여 한·일관계는 갈등이 증폭되는 현상도 보였다. 그러나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각기 별개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바, 두 개의 동맹관계가 제로섬 형태로 발전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미·일동맹을 동아시아 전략의 중심축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간의 외교적 마찰은 한·미 안보협력에 관한 신뢰를 장기적으로 유지·강화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공고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한·일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물론 한·일관계는 무엇보다 먼저 양국 국민들 사이에 증진되고 있는 우호협력관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한다. 한·일 양국은 인권·민주주의·시장경제에 대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유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관계를 단순히 양자 차원의 문제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 동북아 평화유지 그리고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 관점에서도 새롭게 평가해야 한다.²³³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²³³ 배정호 외,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 294.

서 과거사·독도 문제 등에 대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국익의 공통분모를 적극 확대해 나가는 실리외교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동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에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일본·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우리의 자주적인 국방력은 한반도 평화정착 외교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통일·안보정책은 한·미동맹 강화와 국방력 증강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군사혁신에 의해 최첨단전력을 갖춘 미군은 합동작전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우방국 군대도 군사력을 정비·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전력증강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한·미 정보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군의 감시 및 조기경보 능력을 증진시키고 점차 독자적인 방위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2012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전시작전통제권이 이양되는 과도기에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는 바, 한국군의 전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²³⁴ 한반도 평화통일을 준비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이 실질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포함한 총체적인 국력이 준(準)강대국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국력이 취약할 경우, 동북아 4국을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유도하는 구심력보다 자국의 국익을 위해 한반도 분단 상황을 이용하려는 국제적 원심력이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²³⁴ 한·미연합사 해체 후 새로 발족할 한·미공동방위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와 대비 방향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윤종호,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변화와 한국안보: 과제와 대비방향,” 『국방연구』, 제50권 1호 (2007. 6), pp. 31~59.

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4자회담 재개

동북아 4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국익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은 핵 확산 문제를 탈냉전기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유지에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세계전략 차원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일본은 세계적인 핵비확산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북핵문제 해결에 한국·미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왔다. 미국·영국·프랑스와 함께 5대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NPT 유지에 국익을 함께 하고 있다. 특히 양국은 북한의 핵무장이 일본·한국·대만 등 동아시아의 핵무장을 촉발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일과 대북정책에 협조하는 한편, 독자적인 외교채널을 통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 포기를 권유해 왔다.

동북아 4국은 2002년 10월 제2차 핵 위기가 발생한 이후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핵폐기를 요구해 왔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 미·일·중·러4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결의 1718호를 채택하는데 협력하였다. 2007년 2·13합의가 채택된 이후에는 북한의 핵불능화 작업에 긴밀히 협력하며 공동목표인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북아4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일반적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한 긴장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에서부터 한반도 평화정착까지는 안정적인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주변4국의 이해관계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은 궁극적으로 통일로 이어져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주변국들의 입장은 국익우선의 이중성을 보이게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는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별도의 포럼’을 통하여 개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6자 회담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논의한다면 일본과 러시아도 당연히 참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본과 러시아는 북한이 주장하는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닐뿐더러 한국과 같은 실질적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일본·러시아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한편, 10월 2~4일 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선언’에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²³⁵ 여기서 ‘4자’일 경우에는 중국이 당연히 참여하게 되지만, 남북한과 미국 3자일 경우 중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중국이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중국이 배제되는 평화협상은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였다.²³⁶ 즉, 중국은 정전협정에 서명국임으로 한반도 평화협상에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남북정상이 발표한 평화번영선언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보면 한반도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13합의를 체결한 이후에도 북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 보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유엔이 참가하는 가운데 북·미 군사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 북한은 다

²³⁵- 청와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2007년 10월 4일.

²³⁶- 『중앙일보』, 2007년 10월 6일.

I
II
III
IV
V
VI
VII
VIII

각적인 의도에서 북·미 평화협정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먼저 주한미군의 군사적 위협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직접 협상하여 체제안전을 확실히 보장받기를 원할 것이다. 또한 핵개발을 포기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중국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고집하는 북한의 태도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여전히 체제경쟁의 시각에서 보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한다. 남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미국과 직접 평화협상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이 남한보다 정통성 문제에서 더 우위에 있음을 과시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북·미 평화협정을 고집하게 되면 한반도 평화협상은 재개되기 어렵다.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남북한의 정통성 경쟁은 북한의 의도와는 반대로 한반도에 대한 외세의 영향력 경쟁을 오히려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변 4국이 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남북한과 미·중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을 개최해 온 경험이 있는 바,²³⁷ 한반도 평화협상 형식은 일단 4자회담을 재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현실적이다. 현재 6자회담 추진 구도는 핵협상과 병행하여 한반도 평화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은 핵폐기 조건으로 북·미관계 정상화 및 평화협정 체결을

²³⁷- 4자회담은 1997~1999년 모두 6차례 열린 바 있다. 1998년 10월 제3차 본회담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각각 논의하는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남북한간 입장 차이로 인해 3년간에 걸친 4자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아무런 합의점도 마련하지 못한 채 무산되었다. 통일부 남북대화사무국, 『남북대화』, 제66호 (서울: 통일부, 1999), pp. 105~116.



요구하고 있지만, 평화협상은 핵폐기 완료된 이후 또는 핵폐기와 동시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없는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일본·러시아의 깊은 관심을 감안해 볼 때 평화협상이 4자가 주체가 되어 진행되더라도 일·러의 입장이 반드시 배려해야 할 것이다.²³⁸ 북한 미사일 사정권내에 들어 있는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직접적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일본은 평화협정 보장의 조건으로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북·일관계는 반드시 정상화되어야 한다. 북·일간 수교협상이 타결되면 일본은 북한과 경제협력을 확대할 것인 바,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건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러시아의 입장도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북한의 철도·전력 재건 사업은 러시아의 협력 없이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한과 러시아는 공동으로 유라시아 횡단철도를 운영하며 시베리아 지역의 원유·가스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과 러시아의 협조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성공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는 바, 4자회담에서 평화협상을 체결하여도 이를 다시 일본과 러시아가 참여한 6자회담을 통하여 재보장 받아야 할 것이다. 주변국들의 이익을 적절히 배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협상을 타결 짓게 되면 그 실효성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²³⁸ 배정호 외,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p. 287~304.

마. 6자회담 다자안보협의체로 확대·발전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비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은 한반도 평화협상 진전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지 않다. 미·일 대중·러의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는 동북아 세력판도는 오히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일정한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반도 평화협상이 2010년 이후로 지연되어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시기와 겹치게 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군사령부는 그 존속의 의미를 상실하여 해체되고 주한미군 지위 문제가 새롭게 부각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변화 문제는 한·미 양국이 동맹관리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일본·중국·러시아도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2010년경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대양해군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미·일 양국은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군사일체화 작업을 201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동북아 군비경쟁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협상 의제에 주한미군 지위 문제를 포함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물론 이 시점을 전후하여 북한 내부의 정권 교체,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미·중, 미·일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성숙 등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북아 4국관계가 현재의 대립구도를 지속해 나가면 주한미군 지위 문제는 한반도 평화협상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평화정착 노력을 동시에 진전시켜야 한다. 즉,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확대·발전시켜 이를 통하여 주변 4국간의 관계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아·태지역 정부차원의 다자안보협력기구인 아세안지역포럼(ARF)은 회원국들간의 상호 신뢰구축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²³⁹ 그러나 동북아에서 민간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북아협력대화(NEACD)는 역내 국가들 사이의 ‘대화의 습관화’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²⁴⁰ 회원국 전원의 합의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다자안보협력기구들은 강대국들의 군비증강을 제약하거나 새로운 안보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본적으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²⁴¹ 그러나 회원국들의 군사·안보정책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며 기존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6자회담이 확대·발전되어 새로운 다자안보협의체가 창설되어도 동북아 지역 차원의 군비경쟁을 해소하는데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국가들의 안보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적 차이를 조율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에 국한된 평화관리 역할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다자안보협력의 한계와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기존의 안보체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간안보협의체로 확대·발전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와 더

²³⁹- 1994년 7월 방콕회의에서 18개국 외무장관들이 참석한 아세안 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첫 회의가 개최됨으로써 아·태지역 최초의 다자안보협력체가 출범하였다. 2005년 말 현재 ARF에는 남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들과 유럽연합(EU) 의장국 등 총 2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²⁴⁰- 동북아협력대화(North-East Asia Cooperative Dialogue: NEACD)는 1993년 7월 샌디에고 대학 산하 국제분쟁협력연구소가 남북한·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6개국의 정부관리 및 민간인 학자를 초청하여 설립에 관한 준비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출범하였다.

²⁴¹- 최강,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과 과제,” 『2005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6. 2), pp. 325~341.

I
II
III
IV
V
VI
VII
VIII

불어 호주·인도·동남아 국가들과도 경제·안보협력을 확대하여 새로 형성될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가 기존의 아·태차원의 다자안보대화 및 동아시아공동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일 대 중·러 양축의 세력권이 각기 아·태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전략적 네트워크를 형성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통일·안보정책이 주변 4강의 영향력에 매몰되지 않고 보다 큰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안보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동북아 지역에 국한시키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도 적극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VIII

결론



탈냉전기에 접어든 이후 사회주의체제 유지에 불안감에서 느낀 북한과 중국은 군비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군사력 현대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반면, 경제위기에 시달리게 된 북한은 핵무장을 추구해왔다. 사실 미국과 일본은 북한 핵무장과 중국의 패권세력 부상에 따른 위협인식에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 핵무장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미·일동맹 강화를 부추기고, 미·일의 군사력 증강은 다시 중·리의 군사협력 및 전력 증강을 자극하는 복합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일·중·리 4국의 실제적 외교행태는 국제현안에 대해 사안별 협력과 견제를 반복하고 있다. 실리주의 외교를 추구하고 있는 동북아 4국간의 갈등은 단순히 미·일 대 중·리의 대립구도의 필연적 부산물로 해석하기 어렵다. 양측의 대립구도는 이념과 체제 경쟁을 지향하는 경직된 대결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4국간의 갈등과 협력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채택한 전략적 선택행위와 같은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4국관계가 국익에 대한 이해타산에 따라 새롭게 재정립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미·일·중·리 4국 관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냉철한 현실적인 정책판단을 내려야 한다. 우선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앞으로 미국 지도력에 기반을 둔 질서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동아시아의 역학관계 현실은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면서 일본·중국·러시아와도 안보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아직도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

I
II
III
IV
V
VI
VII
VIII

반이 된다. 또한 과거사·영토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중국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동맹관계는 어느 일방의 편익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동맹을 체결한 쌍방이 위협인식과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면 동맹관계는 장기간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북한정세에 대한 인식차이 및 대북정책 우선순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조율 노력을 보다 긴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일동맹이 강화되면서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한·미·일 대북공조체제도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은 한·미 안보협력에 관한 신뢰를 장기적으로 유지·강화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일관계를 단순히 양자차원의 문제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6자회담 진전, 동북아 평화유지 그리고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 관점에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동북아 4국은 안보정책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서 실리위주의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안보정책과는 별도로 실용주의적인 전방위 실리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경제적 이익은 물론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중국·러시아와 협력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남북한에 대해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확보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외교적 과제이다. 한반도 평화협상은 일단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협상 과정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입장을 반드시 배려해야 한다.

동북아 4국관계는 한반도 안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한반도에서의 변화 또한 동북아 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 수반되는 제반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동북아 지역의 다자안보협의체를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확대·발전시켜 이를 통하여 동북아 4국간의 관계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북아다자안보협의체는 각국의 안보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방부. 『국방개혁 2020과 국방비』. 서울: 국방부, 2006. 10.
- _____. 『2006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06.
- 강한구. 『자주국방 구현을 위한 전략 방향』. 이승철 외 11인 편저.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국』. 서울: 나남출판, 2004. 12.
- 강한구·박민규. 『일본의 보수우익이 방위정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8. 12.
- 김국신.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김성철 편저. 『미·중·일관계와 동북아질서』. 성남: 세종연구소, 2003.
- 김영춘. 『일본의 북한위협 인식과 군사력 강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_____.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김호섭·이면우·한상일·이원덕 공저. 『일본 우익 연구』. 서울: 중심, 2000.
- 김홍규·최강 외. 『2005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6. 2.
- 권태영·정춘일 공저. 『선진국방의 지평: 21세기 국방발전의 비전과 방향』. 서울: 을지서적, 1998.
- 박경일 편저. 『동북아 안보의 도화선은 어디에 있는가?』.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3.
- 빅터 차 저. 김일영·문순보 공역. 『적대적 제휴: 한국·미국·일본의 삼



- 각 안보체제』.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 배정호 외. 『동북아시아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_____.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 재편』.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신상진. 『중·미관계와 한반도: 외교안보 및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신한종합연구소. 『일본보고서』. 서울: 들녘, 1998.
- 스노하라 쓰요시(春原 剛) 저. 이웅현·조진구 공역. 『워싱턴의 사쿠라: 미국내 지일파에 관한 심층 분석 보고서』. 서울: 리북, 2007.
- 이근·김병국 공편. 『2020 중국 리스크: 중국경제 성장기 예측과 리스크 분석』.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7.
- 임양택. 『아시아 대예측』.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1999.
- 여인곤 외.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윤정석. 『일본의 국가전략: 21세기를 맞으며』. 서울: 오름, 1998.
- 예츠청 저. 이우재 역. 『중국 세계전략』. 서울: 21세기 북스, 2005.
- 조세영. 『봉인을 떼려하는가: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본 일본의 헌법개정 문제』. 서울: 아침, 2004.
- 최강 외. 『2007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7. 5.
- 최영호. 『한·일관계의 흐름 2004-2005』. 서울: 논형, 2006.
- 최정규.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팩스 아메리카나』. 서울: 넥서스, 1999.
- 테드 게일런 카펜터·더그 밴도 저. 유종근 역. 『한국과 이혼하라』. 서울: 창해, 2007.
- 통일부 남북대화사무국. 『남북대화』. 제66호. 서울: 통일부, 1999.

한국국방연구원. 『2004-2005 동북아 군사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5.

_____. 『2005-2006 동북아 군사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6.

_____. 『2006-2007 동북아 군사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7.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 전략균형 2006』.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6.

Hans Binnendijk 편저. 배달형·하광희·김정익·문대철 역. 『미래전에 대비하여 미국은 어떻게 군사력을 변화시키고 있나: Transforming America's Military』.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4.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 저. 신은진 역. 『표류하는 美日 동맹』. 서울: 중앙M&B, 1998.

Armitage, Richard L. and Nye, JR. Joseph S. (et. al.). *CSIS Commission on Smart Power: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7.

Carpenter, Ted Galen and Bandow, Doug. *The Korean Conundrum: America's Troubled Relations with North and South Korea*. New York: Palgrave, 2004.

Gertz, Bill. *Betrayal: How the Clinton Administration Undermined American Security*. Washington D.C.: Regnery Publishing Inc., 1999.

- Green, Michael J. *Arming Japan: Defense Production, Alliance Politics, and the Postwar Search for Autonom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5.
- Holmes, Kim R. & Przystup, James J. (eds.). *Between Diplomacy and Deterrence: Strategies for U.S. Relations with China*. Washington D.C.: The Heritage Foundation, 1997.
- Kennedy, Paul.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New York: Vintage Books, 1987.
- Khalilzad, Zalmay (et. al.). *The United States and Asia: Toward a New Force Posture*. Santa Monica: RAND, 2001.
- Mandelbaum, Michael. *The Nuclear Revol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Nardulli, Bruce R. and McNaugher, Thomas L. "The Army: Toward the Objective Force." Hans Binnendijk. *Transforming America's Military*.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2002.
- Selin, Shannon. *Asia Pacific Arms Buildups*. Canada: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994.
- Shapiro, Jeremy and Davis, Lynn E. "The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Davis, Lynn E. and Shapiro, Jeremy (ed.). *The U.S. Army and the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Santa Monica: RAND, 2003.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0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_____. *SIPRI Yearbook 200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06*. London: Routledge, 2006.

Vick, Alan (et. al.). *The Stryker Brigade Combat Team: Rethinking Strategic Responsiveness and Assessing Deployment Options*. Santa Monica: RAND Project Air Force, 2002.

朝雲新聞社. 『防衛ハンドブック』. 2005年.

上田哲. 『戦後60年軍擴史: 1945~2006』. 東京: (株)データバンク, 2006年
8月 15日.

江畑謙介. 『米軍再編』. 東京: (株)ビジネス社, 2005年 6月.

小澤一郎. 『日本改造計劃』. 東京: 講談社, 1994.

岡秀俊・本田優・三浦俊章. 『日米同盟半世紀: 安保と密約』. 東京: 朝日
新聞社, 2002年 8月.

川上高司. 『米軍の前方展開と日米同盟』. 東京: 同文館出版株式會社,
2004年 4月.

神奈川縣渉外部基地對策課. 『神奈川縣の米軍基地』. 神奈川: 茂手木
印刷, 1997年 3月.

長島昭久. 『日米同盟の新しい設計図(第2版)』. 東京: 日本評論社, 2004年
11月.

日本戰略研究センター. 『世界に生きる安全保障』. 東京: 日本戰略研究
センター, 1994年.

船橋洋一. 『同盟漂流』. 東京: 岩波書店, 2000年.

防衛研究所. 『防衛戰略研究會議報告書』. 東京: 2001年 5月 22日.

防衛日報. 『自衛隊年鑑』. 東京: 防衛日報社, 2002年 11月.

防衛廳. 『防衛白書』. 東京: 大藏省印刷局, 1992年 8月.

- _____. 『防衛白書』. 東京: 大藏省印刷局, 2006年 8月.
- _____. 『日米同盟: 未來のための変革と再編』. 2005年 10月 29日.
- 松村昌廣. 『軍事情報戦略と日米同盟: CAISRによる米國の支配』. 東京: 芦書房 2004年 12月.
- 陸上幕僚監部. 『陸上自衛隊の改革の方向』. 2005.
- 外岡秀俊·本田優·三浦俊章. 『日米同盟半世紀』. 東京: 大日本印刷株式會社, 2001年 9月.
- 讀賣新聞政治部. 『外交を喧嘩にした男: 小泉がいこう2000日の眞實』. 東京: 新潮社, 2006.

2. 논문

- 박영준. “21세기 미·일동맹의 변환과 일본 방위체제 변화.” 『국가전략』. 제13권 2호 여름호 통권 40호. 2007.
- 박철희. “일본 신방위계획 대강의 평가.” 『2005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6. 2.
- 박휘락. “미군 변혁의 성과와 전망.” 『국제문제』. 4월호. 2007.
- 배공찬. “미국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여 전망.” 『주요국제문제 분석』. 2006. 4. 28.
- 송화섭. “미·일동맹의 변혁과 보통동맹화.” 『국방정책연구』. 제71호 봄호. 2006.
- 이규열. “최근 동북아 군사동향과 우리의 대응방향.” 『국방정책연구』. 가을호. 2007.
- 이용주. “군사동맹 변혁과 일본 방위정책의 재구조화: 자위대의 역할을 중심으로.” 『군사논단』. 제49호 봄호. 2007.

은호성. “1990년대 미·일의 경제성과 및 경쟁력 비교연구.” 『조사통계
월보』. 1998. 6.

정 훈. “일본의 금융개혁 추진방향과 경제전망.” 『KIEP 세계경제』.
1998. 10.

윤종호.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변화와 한국안보: 과제와 대비방향.”
『국방연구』. 제50권 1호. 2007. 6.

Armitage, Richard L. (et. al.).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 2000.

_____. “The U.S.-Japan Alliance: Getting Asia
Right through 2020.” February 16, 2007.

Boucher, Richard, Spokesman.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Press statement.” October 16, 2002. <[www.state.gov/r/pa/prs/ps/
2002/14432.htm](http://www.state.gov/r/pa/prs/ps/2002/14432.htm)>.

Burns, Nicholas.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Political Affairs.
*Testimony to the House Inter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November 15, 2006.

Carpenter, Ted Galen. “Pacific Fraud: The New U.S.-Japan Defense
Guidlines.” October 16, 1997. <[www.cato.org/pub_display.
php?pub_id=6070](http://www.cato.org/pub_display.php?pub_id=6070)>.

Daniel Twining. America’s Grand Design in Asi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0, No. 3. Summer 2007.

Dumbaugh, Kerry B. “China-U.S. Relations: Current Issues and
Implications for U.S. Policy.” *CRS Report for Congress*.
Updated September 22, 2006.

- Embassy of Japan, Washington D.C. *Japan-U.S. Relations, Overview*, December 1, 2004. <<http://www.us.emb-japan.go.jp>>.
- Feith, Douglas J.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Transforming the U.S. Global Defense Posture.” December 3, 2003. <www.defenselink.mil/speeches/2003/spi20031203-0722.htm>.
- Frisbie, John and Overmyer, Michael. “U.S.-China Economic Relations: The Next Stage.” *Current History*. September 2006.
- “Full Text of Sino-Russian Joint Statement Signed by Hu Jintao, Putin.” March 23, 2006. <<http://toolkit.dialog.com>>.
- “Full Text of the Declaration of the Heads of States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July 5, 2005. Astana. <<http://toolkit.dialog.com>>.
- Gaddis, John Lewis. “A Grand Strategy.” *Foreign Policy*. November/December, 2002.
- Gill, Bates. “September 11 and Northeast Asia: Change and Uncertainty in Regional Security.” *The Brookings Review*. Vol. 20, No. 3, Summer 2002. <www.brook.edu/press/REVIEW/Summer2002/gill.htm>.
- Goh, Evelyn. “A strategic insurance policy.” *Asia Times*. September 6, 2006 <<http://www.atimes.com/atimes/China/H1106Ad02.html>>.
- “HK WWP: First Strategic Economic Dialogue To Add New Chapter in Sino-U.S. Ties Article by Ching Che-yuan: ‘The First Strategic Economic Dialogue To Add a New Chapter in

- Sino-U.S. Relations.” December 15, 2006. <<http://toolkit.dialog.com>>.
-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National Defense in 2006*. Beijing: December 2006.
- “Japan: Editorials 9 Oct 06 Welcome Japan-China Summit Talks.” October 9, 2006. <<http://toolkit.dialog.com>>.
- “Joint Statement Issued on ‘Strategic Partnership.’” *FBIS-CHI-96-081*.
- “Joint Statement 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Washington D.C.: February 19, 2005. <www.mofa.go.jp/region/n-america/us/security/scc/joint0502.htm>.
- Kan, Shirley A. “U.S.-China Military Contacts: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Updated August 20, 2007.
- Korean Central News Agency(KCNA). “Keynote Speeches Made at Six-way Talks.” August 29, 2003. <www.kcna.co.jp/index-e.htm>.
- Mann, Jim. “China for Gore, Japan for Bush.” *Los Angeles Times Service. Korea Herald*. October 27, 2000.
- Marsh, Christopher. “Russia Plays the China Card.” *The National Interest*. No. 92. November/December 2007.
- Medeiros, Evan S. “Strategic Hedging and the Future of Asia-Pacific Stability.”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9, No. 1, Winter 2005~2006.
- Mochizuki, Mike and O’Hanlon, Michael. “A Liberal Vision for the



- U.S.-Japanese Alliance.” *Survival: The IISS Quarterly*. Vol. 40, No. 2, Summer 1998. <www.brook.edu/printme.web?page=/pagedefs/dbf13074cc81ff3a3fdbd6410a141465.xml>.
- Nanto, Dick K. “East Asian Regional Architecture: New Economic and Security Arrangements and U.S. Policy.” *CRS Report for Congress*. September 18, 2006.
-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Mapping the Global Future: Report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s 2020 Project*. December 2004.
-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6*. May 23, 2006.
- _____.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7*.
- Preble, Christopher. “U.S.-Japanese Security Relations: Adjusting to Change.” *Foreign Policy Briefing*. No. 7, March 14, 1991. <www.cato.org/pub_display.php?pubid=1532&full=1>.
- Rhodes, Edward. “The Imperial Logic of Bush’s Liberal Agenda.” *Survival*. Vol. 45, No. 1, Spring 2003.
- Rice, Condoleezza.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Policy*. January/February 2000.
- Rumsfeld, Donald H. “Prepared Testimony of U.S. Secretary of Defens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June 21, 2001. <usembassy.state.gov/ircseoul/wwwwh5042.html>.
- _____. “Prepared Testimony of U.S. Secretary of

- Defens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September 23, 2004.
- “Russia condemns N.Korea nuclear test–Putin.” October 9, 2006. <<http://en.rian.ru/russia/20061009/54646166-print.html>>.
-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Document. “U.S.–Japan Alliance: Transformation and Realignment for the Future.” October 29, 2005. <www.mofa.go.jp/region/n-america/us/security/scc/doc0510.htm>.
- “SCO Peace Mission 2007 Exercise Concluding Stage To Be Held.” August 16, 2007. <<http://toolkit.dialog.com>>.
- “Text of Joint Statement Issued by Jiang Zemin, Putin in Moscow.” *FBIS–CHI–2001–0716*.
- The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Republican Platform 2000: Renewing America’s Purpose. Together*. August 3, 2000.
- The White House. *National Strategy for Homeland Security*. Office of Homeland Security. July 2002.
- _____. *President Bush and Russian President Putin Participate in Press Availability*. July 15, 2006.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6/07/20060715-1.html>>.
- _____. *Remarks by the President to Students and Faculty at National Defense University*. May 1, 2001. <www.whitehouse.gov/news/release/2001/05>.
- _____.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2002*. <www.whitehouse.gov/nsc/nss.html>.

- _____.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rch 2006.
- _____. *U.S.-India Joint Statement*. March 2, 2006.
- Twining, Daniel. "America's Grand Design in Asi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0, No. 3, Summer 2007.
- U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www.un.org/aboutun/charter/chater7.htm>.
- U.S.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Excerpts]*. January 8, 2002. <www.globalsecurity.org/wmd/library/policy/dod/npr.htm>.
- _____.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April 18, 1990.
- _____. *Report on the Bottom-Up Review*. October 1993.
- _____. *Report of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May 1997.
- _____. *Report of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September 30, 2001.
- _____. *Report of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February 6, 2006.
- _____.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February 1995.
- _____. Shalikhshvili, John M. Chairman of the Joint

- Chiefs of Staff. *Joint Vision 2010*. 1996.
- U.S. Department of State. “Remarks at U.S. Embassy Beijing.” August 2, 2005. <<http://www.state.gov/s/d/former/zoellick/rem/50498.htm>>.
- U.S. DOD. *Transformation Planning Guidance*. April 2003.
- USFK. “Joint Communique: Thirty-Fifth Annual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November 17, 2003. <www.usfk.or.kr/en/future_initiative_05.php>.
- United States Forces Japan. *U.S. DOD Personnel in Japan*. <http://www.usfj.mil/j_index.html>.
- USINFO.STATE.GOV. *U.S. Wants Deeper Cooperation With China, State's Zoellick Says*. August 3, 2005.
- United State Forces Japan, *U.S. Forces in Japan*. <<http://www.usfj.mil/>>.
- U.S.-Japan Summit Meeting. *The U.S.-Japan Alliance of the New Century*. Washington, D.C.: June 29, 2006.
- United States Senates. Committee on Armed Services, Defense Transformation. Testimony of Andrew F. Krepinevich, Executive Director,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April 9, 2002. <<http://www.armed-services.senate.gov/statement/2002/April/Krepinevich.pdf>>.
- United States-Japan Roadmap for Realignment Implementation*. May 1, 2006. <www.mofa.go.jp/region/n-america/us/security/scc/doc0605.htm>.
- Wolfowitz, Paul. Deputy Secretary of Defense. *Prepared*



Testimony: Building a Military for the 21st Century. To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October 4, 2001.

_____. *Hearing on U.S. military presence in Iraq: implications for global defense posture.* Before the House Armed Service Committe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June 18, 2003.

“Xinhua Cites Vietnam PM: Commemorative Summit Improves China-ASEAN Relations ‘Commemorative Summit Helps Promote China-ASEAN Relations To New High: Vietnamese PM-Xinhua headline.” November 1, 2006. <<http://toolkit.dialog.com>>.

“Xinhua: Text of Sino-Russian Treaty.” *FBIS-CHI-2001-0716*.

3. 기타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朝日新聞』.

『産経新聞』.

The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朝日新聞』.

『産経新聞』.

국방부.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www.mnd.go.kr>.

외교통상부. 『2006년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 전략적 유연성 설명자료』. 2006년 1월 22일.

청와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2007년 10월 4일.

『ASAGUMO News』. 『朝雲新聞社』. <www.asagumo-news.com/news.htm>.

小澤一郎. “日本國憲法改正試案.” 『文藝春秋』. 1999년 9월.

外務省. 『共同發表 日米安全保障協議委員會』. 2005년 2월 19일.

_____. 『SACO最終報告』. 1996년 12월 2일.

_____. 『日米安全保障共同宣言—21世紀に向けての同盟』. 1996년 4월 17일. <www.mofa.go.jp/area/usa /hosho/sengen.htm>.

共産党. 『しんぶん赤旗』. 2007년 1월 30일. <www.jcp.or.jp/akahata/aik07 /2007-01-30/200_701_3001_02_0.htm>.

重村勝弘. “武器輸出禁止政策の緩和と國際裝備協力.” 『DRC年報 2004』. <www.drc-jpn.org/AR-8/shigemura-04j.htm>.

自民党國防部會. 『わか國の安全保障政策と日米同盟』. 2001년 3월 23일. <www.asyura.com/sora/bd12/msg/900.html>

自由法調査団. 『憲法9條を邪魔者扱いするアミテージ發言に抗議する』. 2004년 7월 30일. <www.jlaf.jp/sei mei/sei_20040805.html>.

島村智子. “上海協力機構(SCO)創設の経緯と課題.” 『レファレンス』. 東京: 日本國會図書館, 平成 18년 12月号.

日本首相官邸. 『有事法制關聯法』. <www.kantei.go.jp/jp/singi/hogohousei

/kakuho.html>.

_____. “第168回国會における福田内閣總理大臣の所信表明演説.” 『福田總理の演説・記者會見など』, 平成 19年 10月 1日. <www.kantei.go.jp>.

_____. “福田内閣總理大臣の談話 (テロ對策特別措置法の失効に伴う對峙措置の終了).” 『福田總理の演説・記者會見など』, 平成 19年 11月 1日. <www.kantei.go.jp>.

福田毅. “米軍の变革と在日米軍の再編.” 『調査と情報』, 第480号. 東京: 國立國會圖書館, 2005年 5月 13日.

防衛年鑑刊行會. “特集2一日米同盟の將來—21世紀に向けて.” 『防衛年鑑』, 東京: 防衛年鑑刊行會, 平成 11年 4月.

防衛施設廳那覇防衛施設局. 『はいさい』, 第99号. 2007年 7月 1日.

防衛省. 『わが國の防衛と予算』, 平成 14年.

_____. 『わが國の防衛と予算』, 平成 16年.

_____. 『わが國の防衛と予算』, 平成 17年.

_____. 『わが國の防衛と予算』, 平成 18年.

_____. 『わが國の防衛と予算』, 平成 19年.

연구총서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발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구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2007-13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저	5,000원
2007-15(1)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10,000원
2007-15(11)-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3	東北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4	東北亞区域合作的新联系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문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외	공저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학술회의총서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9,000원

협동연구총서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04-01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I):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 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9,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2 (2007)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i>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	--------

연례정세보고서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운,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운,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망: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운,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과와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운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운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운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민국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근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출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객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열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근,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2007-08	북핵 폐기를 위한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출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비매품

제1호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Studies Series

비매품

-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우편번호: 142-728)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